

외교

제109호

□ 특별기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윤병세	3
----------------	-----	---

□ 특집 : 한반도 통일 과제와 전망

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정성장	13
한국의 대미·중 통일 외교	신성호	33
통일과정에서의 과제와 대안	김갑식	45
통일 이후의 한국	박영호	58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이수혁	68
예멘 통일의 시사점	유지호	85

□ 일반논문

헤이그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의 전망과 과제	박철희	101
중국 개혁방안의 함의와 실천 전망	황용식	1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와 성과	신동익	131

□ 회원칼럼

상하이 한·미 정상회담에 얽힌 뒷이야기	정태익	143
세계질서의 변화와 대응	권병현	151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 보면서	강근택	157
일본 규슈지역 역사 탐방 기행	유종현	163
카이로 회담의 역사적 현장	김영소	173

□ 수상(隨想)

一寸光陰	박창남	176
쇼팽과 안익태 - 마요르카	이원영	179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실보물전을 보고	유주열	184

□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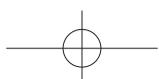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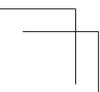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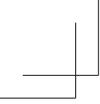
북한정치 변천 -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	이상우	189
신(新)조선책략	최영진	192

제자:원곡 김기승 선생 휘호

※ 본 『외교』 지에 게재된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외교협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료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197
외교부장관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문	209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

윤 병 세 (외교부장관)



‘춘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는 뜻이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화창한 봄의 따스함과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은 온기보다는 냉기가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작년 초 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한반도 및 주변국가의 새로운 지도층 교체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다. 1년 여가 지난 오늘 이 시점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기대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느끼게 된다. 오히려 20여 년 전 냉전 종식 이래 동북아 상황은 그 어느 때 보다 대립적 국면이 협력적 측면을 압도하고 있는 인상이다.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하지만 정치·안보적 갈등은 고조되는 역설적 현상, 즉 아시아 패러독스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 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동북아 국가 간 갈등이 역사 문제, 영토 문제, 해양 및 공역 안보 문제, 군비경쟁, 국수주의 등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을 특징 지웠던 경제적 상호의존 추세가 이러한 갈등요인, 즉 High Politics의 문제로 인해, Low Politics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듯하다. 그 동안 자주 등장했던 ‘아시아 세기’, 또는 ‘태평양 시대’라는 표현들은 어느덧 잠잠해 지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냉전, 미니 냉전까지 운운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커다란 시각변동을 겪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따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질서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간의 상관관계이고, 두 번째는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의 상관관계이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다루는데 있어 출발점은 우리가 당면한 도전 내지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다. 우선 (1) 북한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도발, (2) 역내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적 행태 (3) 역내에서의 새로운 지위와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경쟁 등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첫째, 북핵·북한 문제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북한은 각종 대남위협에 이어 개성공단의 일방적인 폐쇄와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의와 취소 등 예측 불가능한 행태를 보이다가 사실상 2인자였던 장성택의 전격 처형으로 북한정권의 불안정성을 전 세계에 노정한바 있다. 올해 초 김정은 신년사 이래 남북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으로 잠시 해빙 국면을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이후 다연장 로켓포, 스커드, FROG, 노동 미사일 등 모두 87발에 달하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총동원한 집중적인 도발과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해상사격 훈련,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 공개 언급과 무인기 정찰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발 위협의 종류와 강도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비대칭 도발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북한이 보여 온 도발 패턴과 비교해 보더라도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미국외교협회도 ‘2014 예방우선순위 조사’에서 세계적인 1등급 갈등예방 우선순위 이슈 중 하나로 ‘북한 위기’를 제기한 바 있다. 북한 위기는 2013년 2등급에서 2014년 1등급으로 위협순위가 증가한 것인데, 그만큼 북한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및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 요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다. 북한은 3월31일 병진노선 천명 1주년을 맞아 이를 지속할 것임을 다시 천명하였고, 4월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병진노선이 만능의 보검임을 강조하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최근 “상상하기 힘든 다음 조치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다시 추가 핵실험에 나서게 된다면, 북한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모한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유관국 및 유엔 등과 함께 가능한 모

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 결연 반대 의지를 누차 표명하였는데,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핵불용에 관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북한 정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은 심각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존과 고립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둘째, 역사문제가 동북아의 긴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차대전 종료 이후 지금의 동북아처럼 역사문제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동북아 국가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한·일 국교 정상화 및 일·중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대전제를 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해 왔다.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역사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일본의 행동이 원만한 전후질서 내지 현상유지의 핵심요소였다.

하지만, 지난 1년 여간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 내지 부정주의 움직임으로 일본과 주변국들과의 선린관계가 심각히 손상되어 왔다. 한·일 간 관계 악화는 물론, 여타 역내 국가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NYT 사설이 이를 역사부정주의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 유력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수정주의는 현재의 일본을 스스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마저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는 또한 공허할 뿐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일측 지도자들이 이러한 공개적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시급한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내 양심 있는 학자 1,500여 명이 일본 정치지도자들에게 ‘고노담화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5,000여 명의 일본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보가 ‘평화와 민주를 부수고 있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일본내 양심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강한 중국, 강한 일본, 강한 러시아, 강한 북한을 추구하는 역내 국가들의 경쟁과 대립으로 동북아의 정치·안보 지형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핵과 경제발전을 병진하겠다는 북한, 전후 질서를 탈피하고 소위 정상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일본, 중화민족 부흥의 꿈을 이루겠다는 중국, 푸틴 2기 정부의 강한 러시아 정책 등 역내 국가들은 모두 과거 어느 때 보다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역사문제로 인한 불신과 더불어 이러한 힘의 추구로 인해 역내 국가 관계는 한층 첨예화 되고 있는 것이다.

역내 국가들의 군사비 증대, 새로운 방위 안보정책 등을 포함하여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증대하고 있다.

또한, 무역질서에 있어서도 양자 FTA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지역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추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며, ASEAN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도 꾸준히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동북아의 경우, 정치·안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교류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만약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세계 총생산의 약 1/4을 차지하고, 세계 외환 보유고의 85%를 보유할 만큼 성장한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이 침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올해는 19세기 말 청나라와 일본 간의 대결로 대표되는 동북아의 패권경쟁 속에서, 갑오개혁이 실패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한국은 한반도에 밀려든 역사적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국 주권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 지난 세기 전반기 국제질서의 종속변수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꽃 피운 신뢰받는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오늘 날 다시금 전개되는 역사적 전환기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지금의 분단의 현실에서 보듯이, 정부로서는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문제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과 동북아 정책을 상호 추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그간 남북한 간의 신뢰 증진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

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에서의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더 나아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경제협력 벨트와 신뢰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시키기 위한 신뢰 구축 과정으로서,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자협력 메커니즘이 없는 동북아에서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역내 국가들이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환경 및 기후변화, 사이버스페이스, 재난 구호 등 연성의제 분야에서부터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진전되어 나간다면 역내 평화와 안보에 관한 협의체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동북아 역내 협력은 현재 남·북·러 간 진행중인 나진-하산 물류 사업과 같이 보다 작은 단위의 소다자 협력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교통망이나 에너지망과 연결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차원의 경제통합과 지역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악화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프로세스 일환으로서의 한·중·일 협력의 추동력이 약화되었지만, 정부로서는 3국 협력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나아가, 박근혜정부는 역내 경제협력이 정치·안보 관계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APEC의 핵심 멤버이자,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역내 유일 국가로서, 지역 통합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또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그리고 TPP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양자 및 지역차원의 FTA 논의가 상호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동북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역내 시장 확대를 통해 동북아 및 아시아의 번영을 도모할 뿐 아니라, 역내 국가 간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역내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요인이자 협력의 장애물인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고, 내년은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이 정치적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통합마저 완성하면서 유럽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한반도 분단 상황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분단의 고통을 안겨주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부응하고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 증진에 맞추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시 ‘통일 대박론’을 화두로 던지셨고, 금번 독일 순방 계기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통일이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하였다.

드레스덴 구상이 지닌 중요한 함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이라는 점이다. 지난 독일 방문시, 독일 통일에 직접 관여했던 동서독 측 고위인사들은 우리에게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소리 없는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주변국에게도 혜택이 되는 통일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1)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agenda for humanity), (2)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며(agenda for co-prosperity), (3)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agenda for integration)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실질적 준비를 위해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기도 하다.

드레스덴 구상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년간 한국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지난 달 한·독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외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독 통일외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금년 2월에 서울에 상주하며 북한을 점입하는 21개국 대사관과 우리 외교부간 협의체인 ‘한반도 클럽’이 출범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일 외교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독일 통일 당시의 서독의 콜 총리와 동독의 드 메지에르 총리는 이구동성으로 독일의 통일이 오랜 동안의 준비의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철저한 준비야말로 언제

어떻게 통일이 오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요체라 하겠다.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 없는 한반도, 주변 모든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맺은 한반도가 될 것이며, 역내 안보 협력의 추진체이자 역내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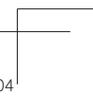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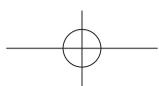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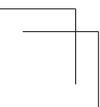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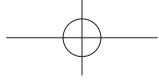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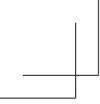
잔인한 4월이 가면, 신록의 5월이 올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처럼, 박 대통령도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의 필연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듯이 지금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가오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베를린 장벽은 저절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독일 국민들의 통일의 열망이 무너뜨린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50년 전 우리 국민들은 라인강의 기적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25년간 독일 국민들은 또다시 엘베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우리도 제2의 한강의 기적과 함께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냉철한 역사의식과 통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으로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의 여정을 앞당기는데 있어 우리의 성숙한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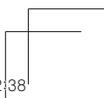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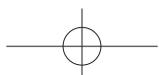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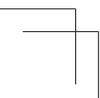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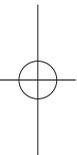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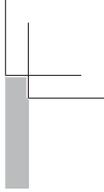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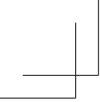
* 본 기고는 '여의도연구원'(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주최로 열린 해외 싱크탱크 초청 국제심포지움에서의 기초연설 내용 일부를 편집한 것이다.





특집

- 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 한국의 대미·중 통일 외교
- 통일과정에서의 과제와 대안
- 통일 이후의 한국
-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 예멘 통일의 시사점



통일은 어떻게 올 것인가

- 통일의 조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모색 -

정 성 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 머리말: 통일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¹⁾

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 손자(孫子)는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고 지적했다. 그리고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다(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쟁에서 ‘적의 실정(實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적’인 북한의 실정에 대해 끊임없이 부정확하게 판단해왔고 현재에도 그 같은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한국군 수뇌부 일부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는 말로 실상과 괴리된 대북 우월감을 유포시켰다. 전쟁 발발 직후 국회에 출석한 신성모 국방장관과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은 “만약 공세를 취한다면 1주일 이내에 평양을 탈환할 자신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전쟁 3일 만에 북한군이 수도 서울을 점령했고, 만약 미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적화통일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붕괴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김학준 전 서울대 교수는 1997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당시 “미국의 국방부를 포함한 미국 군부는 김정일 정권이 이미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으며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해도 2002년께는 군부 쿠데타에 의해 퇴진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²⁾ 그러나 김정일은 2011년 사망 시까지 확고

하게 권력을 유지했으며, 현재에는 그의 삼남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2008년 8월 김정일의 뇌혈관계 이상 이후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유엔군의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民事)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계 5029’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6·25전쟁 발발 전 한국군 수뇌부 일부가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라고 말하면서 한국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북한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처럼,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북한군의 저항능력 및 억지력에 대해 실상과 괴리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 3년간의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했지만, 당시 한국군과 미군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 다시 그와 같은 대량 기아사태가 재연된다고 해도 북한군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장사정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과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작계 5029’가 상정하고 있는 ‘전쟁 이외의 상황에 대한 군사적 개입’ 논리는 가난하고 무장력이 약한 제3세계의 일부 국가에는 몰라도 초군사화된 국가인 북한에는 적용 불가능한 것이다.³⁾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론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한 전문가는 아마도 1997년에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일 것이다. 탈북자 중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황 전 비서는 “일부 사람은 북한의 독재체제가 붕괴하면 큰 혼란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데 궤변 중에서도 최고의 궤변”⁴⁾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하더라도 김정일의 측근들이 이미 다 구축되어 있고 한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란 또는 무정부 상태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⁵⁾이라고 밝혔다.

국내외의 다수 전문가들은 김정일을 북한체제와 동일시하는 협애(狹隘)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북한의 절대 권력자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김정일 주변에 북한을 이끌어가는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었고, 당과 군대, 공간기관이 엘리트와 주민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황 전 비서가 전망한 것처럼 북한에서 ‘급변사태’는 커녕 의미 있는 정치적 혼란의 징후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그동안의 북한 조기 붕괴 예측이 계속 빗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희망적 사고’에 기초해 북한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독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동서독이 그렇게 빨리 통일될 것을 미리 예측한 전문가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1980년대 중·후반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정치개혁은 소련의 영향권 하에 놓여있었던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및 민주화를 촉발했고, 동독도 그 같은 민주화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동독이 민주화됨으로써 동서독 간에 정치체제 상의 차이가 사라짐에 따라 두 국가가 더 이상 분단을 유지할 이유도 소멸되어 두 국가는 조속한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⁶⁾ 그러나 중국, 베트남, 북한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북한 조기붕괴론이 북한의 실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제2절에서는 기존의 북한 조기붕괴론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먼저 지적할 것이다. 이어서 제3절에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국가 붕괴와 한반도 통일의 조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제4절에서는 한국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I. 북한 조기붕괴론의 문제점과 한계

1. 북한 최고지도자와 체제의 동일시

통일은 곧 남북한 체제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체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남북한 체제통합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당과 국가기구, 군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면, 효율적인 대북 협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도 곤란할뿐더러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이들 엘리트들의 관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적실성(適實性) 있는 대북 및 통일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정치의 연구범위를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들과 핵심 파워 엘리트 그룹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절대 권력자인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 북한이 무정부상태에 들어가는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과거 우리 사회 일각의 주장은 김정일과 북한체제를 동일시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79년 박정희 대

통령이 충격에 의해 갑자기 서거했지만 한국사회가 일시적인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상태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군부라는 강력한 정치세력이 곧바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에서는 당과 군대, 공안기관이 주민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 총비서가 2011년 갑자기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당이라는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군대와 공안기관이라는 억압기구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최고지도자의 사망만으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희망적 사고'에 불과했다.

북한의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와 같은 주요 권력기관의 위상과 역할, 엘리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이들 기관이 혼란을 수습하고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붕괴는 이들 권력기관에서 급진적 개혁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거나 시민세력이 체제 민주화를 쟁취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기존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서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결여는 이 같은 논의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아니라 '희망적 사고'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는 김정일을 대신 할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라는 황장엽의 주장은 김정일 외에도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그만큼 많이 있고, 북한 파워 엘리트들이 체제 유지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평가였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유고가 갑자기 발생하더라도 그를 대체할 다른 파워 엘리트들이 있는 한 김정은의 유고가 곧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정일과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이해 부족

김일성이 생존 시에 권력의 대부분을 김정일에게 이양하였고, 확고한 지도체계와 지지기반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3년간 당 총비서직에 오르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북한을 통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북한 외부의 다수 연구자들은 김정일이 카리스마가 부족해 당 총비서직을 곧바로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국방위원장'직 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김정일은 1998년 9월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됨으로써 북한의 최고 통치권자

의 자리에 취임했다”는 식의 평가를 내렸다.

반면 황장엽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1974년 2월 그가 당 조직비서를 차지함으로써 사실상 끝난 것”이라며 “따라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공식화했다 해서 그의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⁸⁾ 북한도 “혁명위업계승의 근본문제인 영도의 계승문제가 이미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사업이 김일성의 3년상을 치른 후에 집행되었다고 주장했다.⁹⁾

김일성 사망 직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김정일의 지도력에 대해 과소평가했던 것처럼, 김정일 사망 직후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과연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장성택 섭정 군부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채 2주가 되지 않아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에 취임하여 먼저 공식적으로 군권부터 확고하게 장악했다. 그리고 김정일 사후 채 4개월이 되지 않아 당의 새로운 최고직책인 ‘당 제1비서’직과 국가의 새로운 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에 취임하여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조기에 완료했다.

그리고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제1인자’ 또는 ‘제2인자’로 과대평가되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2013년 12월 반당반혁명종파행위 혐의로 처형했다. 또한 현재 인민군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 등 전통적인 군부 엘리트들의 위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김정일 사후 ‘장성택 섭정 군부집단지도체제’가 출범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군부에 대한 당과 김정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3. 북한 공안기관과 군대의 영향력에 대한 과소평가

김정일 사후 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신규 탈북자의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같은 공안기관들이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들을 과거보다 더 강력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윤대일은 “북한의 세습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요소들은 군대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인민보안성(경찰)이다.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고 버티고 있는 것은 북한이 독재수단으로써 이들 기관들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¹⁰⁾라고 지적했다. 전현준 박사도 “일반주민과 가장 근접해서 그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인민보안성(인민보안부의 전신)을

제외하고 북한의 통제시스템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¹¹⁾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인민보안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엘리트와 주민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존재를 무시한 채 북한에서 가까운 미래에 ‘민중봉기’가 발생해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북한 실상과 괴리된 것이다.

북한에서 가까운 미래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북한 인민군 상좌(대령급) 출신의 최주환(현 탈북자동지회장)은 2008년 8월 김정일의 뇌혈관계 이상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후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 “김정일이 유고상태이거나 의식은 있되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군이 당과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군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주요 군사정책 결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인민군당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며 “4~5년 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당분간 군에 대한 당의 장악과 통제에 큰 문제는 없을 것”라고 전망했다.¹²⁾ 그의 예상대로 김정일의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는 발생하지 않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향후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4. 경제중심적 접근의 한계

북한 조기붕괴를 주장한 연구자들은 설득력 있는 논리적 근거 없이 북한에서 경제위기가 자동적으로 정치위기 → 정권붕괴 → 체제붕괴 → 국가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를 유포시켰다(〈그림1〉 참조). 그러나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위기가 반드시 정치위기로 발전하지는 않으며, 정치위기가 또한 반드시 정권붕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권붕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꼭 체제붕괴, 더 나아가 국가붕괴로 발전하리라는 법은 없다. 경제위기가 정권붕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반체제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반체제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연좌제로 가까운 미래에 그 같은 세력의 대규모 조직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1〉 북한 조기붕괴론의 일반적 논리



5.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차이점 간과

동서독과 남북한을 비교하면 둘 다 분단국가이고, 서독이 동독에 비해 경제력에서 앞섰던 것처럼 남한도 현재 북한에 비해 경제력 면에서 앞서있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런데 동서독 사례와 남북한 사례를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도 많은데, 북한 초기 붕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대체로 두 사례 간의 차이점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독의 경우 주민들이 민주화와 동서독 통일을 위해 봉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자유롭게 서독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고 소련이 먼저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 주민들이 남한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할 수 없으며 남한의 드라마가 녹화된 DVD를 보는 것조차 매우 위협스러운 일이다. 미래에 북한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 일반 주민들이 남한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때에 북한 주민들은 남북한의 신속한 통일을 위해 북한 정부가 남한과의 협상에 나서도록 거리에 나서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아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과거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을 비교하면 동독과 북한의 군사화 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동서독 통일 전인 1989년 동독 인구(1,640만 명)는 서독 인구(6,230만 명)의 약 1/4(26.3%)에 불과했다. 그리고 서독은 약 495,000명의 병력을, 동독은 서독 병력의 35% 수준인 약 173,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¹³⁾ 이처럼 서독은 동독에 비해 인구뿐만 아니라 병력 수에 있어서도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통합을 자연스럽게 주도할 수 있었다. 반면 현재 남한의 군 병력은 약 68만 명인데 비해 북한은 약 117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인구가 남한 인구의 약 1/2 정도임을 고려하면, 북한이 남한보다 약 4배나 더 군사화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과거 독일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북한군의 감축을 유도해 그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지 않는 한 북한이 민주화되더라도 정치군사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

통일 전 동독 주둔 소련군 병력은 약 385,000명으로 동독군 병력의 두 배 이상이었다.¹⁴⁾ 이처럼 동독은 안보와 관련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을 승인하는 상황에서 동독군이 통일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북한에는 현재 외국군이 전혀 주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해도 북한군이 반대한다면 통일이 실현되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도 ‘정권 붕괴’가 ‘체제 붕괴’로 이어지고 ‘국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동서독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경우처럼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통합 전에 군사통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반면 남북한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이 만들어놓은 적대적인 감정이 양국의 군부에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더욱이 북한 군부는 전쟁 도발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북한 군부가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¹⁵⁾

Ⅲ. 북한 사회주의체제 · 국가 붕괴와 한반도 통일의 조건¹⁶⁾

북한에서의 정권교체가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사회주의체제 붕괴 즉 민주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유고가 곧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국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던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정권교체가 사회주의체제 붕괴와 국가 붕괴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의 성숙 여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조기 붕괴’라는 비현실적인 전망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1990년대 중반에 북한 조기붕괴론이 범했던 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의 붕괴가 가능할 것인지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의 경험을 참고삼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1)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2) 개혁파 엘리트의 집권, (3) 군부의 중립적 태도, (4) 경제난 심화, (5) 정보개방, (6) 사회통제의 이완, (7) 주민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 (8) 대남 의존도 심화, (9) 주변국의 통일 지지 등 9개의 지표를 가지고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의 붕괴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9개의 지표는 필자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원인을 분석한데 기초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첫째,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 또는 국가 붕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련 및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촉진했던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필요하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 붕괴가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은 동구 사회주의체제들이 이념적 · 정치적 · 경제적 · 군사적으로 소련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 중국과 북한, 베트남 등 아시아의 민족공산주의 체제들¹⁷⁾은 비록 형성 과정에서는 소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소련에서의

이념 및 정치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데올로기가 이들 체제의 엘리트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동구에서와 같은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피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후 강성대국론이라는 새로운 통치담론을 제시하면서 ‘공산주의’의 이상은 포기했으나 여전히 스탈린식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둘째,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 또는 국가 붕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급진적 개혁파가 스탈린식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려는 보수파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개혁파’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미 1950년대 중·후반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탈스탈린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당내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복원시켰다. 그 결과 당내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게 되었으며, 개혁성향의 인사들이 1980년대 중·후반 정치 민주화 및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주도할 수 있었다.

〈표1〉 북한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조건

지표	체제 붕괴의 조건	현 상황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 페레스트로이카와 같은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 공산주의 이상은 포기했으나, 스탈린식 사회주의 이념에 집착. 정치적 민주화 거부.
개혁파 엘리트의 집권	- 급진적 개혁주의자의 권력 장악	- 일부 실용주의적인 엘리트들은 있으나, 급진적 개혁파로 분류할 파워 엘리트는 없음.
군부의 중립적 태도	- 군부의 정치적 중립 또는 체제개혁 지지	- 김정은과 노동당의 선군정치로 군대는 북한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으므로 체제 붕괴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높음. - 김정은 시대에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공안기관 엘리트들은 여전히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정보개방	-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정보 개방 정책	- 정보개방은 곧 체제붕괴를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감시억압기구를 통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를 통해 국내외 정세를 체제유지에 유리하게 선전
경제난 심화	- 경제난이 심화되어 주민들이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며 봉기하는 것이 필요	- 현재에도 지방에서는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중후반보다는 상황이 훨씬 호전됨. -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물가도 안정됨.

사회통제의 이완	-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집회·결사·시위의 자유가 보장	-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의 동향을 수시로 점검
주민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	- 노동당 독재 폐지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세력의 조직화 및 시위 확산	- 정치적 반대에 대해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구금 등 가혹한 탄압과 연좌제 등으로 인해 반체제 세력의 공개 활동 공간 부재
대남 경제 의존도 심화	- 대남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고 주민들이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 경제의 대남 의존도는 줄어들고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됨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서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의 상대적으로 줄어들음
주변국의 통일 지지	-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 체제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	- 중국은 북한이 자국처럼 경제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에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 그런데 중국도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체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개혁을 요구하는데 한계가 있고, 북한의 내정에 대한 영향력도 적음.

자료: 정성장,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한반도 통일의 조건,”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 ‘정성장의 통일교실’ 강의 자료(2010.4.1)의 <표 3>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반면 북한에서는 1956년 ‘8월종파사건’과 1967년 갑산과 숙청을 통해 북한 체제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몰락하게 되었고, 1930년대 만주에서 김일성과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인사들 및 그들의 2세들이 북한 지도부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중·후반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동안에도 북한 지도부 내에서 의미 있는 심각한 정치적 내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 지도부는 서서히 김정은의 측근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2013년 12월 장성택의 숙청 이후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 지도부의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장기간 북한에서 체제의 민주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2> 북한 ‘국가 붕괴’와 한반도 통일의 조건

지표	국가 붕괴의 조건	현 상황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 북한 체제의 민주화 후 신속한 민족통일을 요구하는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 가까운 미래에 급진적 개혁 이데올로기가 확산될 가능성 희박
개혁파 엘리트의 집권	- 급진적 개혁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남한과의 신속한 통일 요구	- 북한 지도부에서 군부와 공안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급진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 희박

군부의 중립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부의 정치적 중립 - 남한 주도 하에 통일이 실현되더라도 북한 군부의 기득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의 경우와는 다르게 남북한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남한주도의 통일 시 북한군은 남한군에 의한 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동독군 병력은 서독군의 1/2도 되지 않았으나, 반대로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거의 2배 정도가 됨.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군이 대폭 감축되지 않는 한 통일에 대한 북한 군부의 저항을 극복하기 어려움.
정보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정보 개방 정책으로 남한 정보의 대량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지도부는 정보개방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외부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경제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통일을 요구하며 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물가도 안정됨.
사회통제의 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자유롭게 시위할 수 있을 정도로 통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집권 후 주민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신규 탈북자 수도 감소
주민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남한과의 신속한 통일을 요구하는 정치세력의 조직화 및 시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 DVD를 몰래 보는 것조차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어 친남한적 세력의 조직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대남 의존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으로 북한 주민이 '코리아 드림'을 가지고 남한과의 신속한 통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록 다수의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인력의 대중 파견이 시작되고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코리아 드림'보다 '차이나 드림'이 더 커지고 있음.
주변국의 통일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이 동서독 통일을 용인한 것처럼,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협력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 -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경우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세계적 수준에서의 미·중 경쟁구도와 중국내 조선족의 분리주의 운동 가능성을 우려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음. - 미국은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지지하겠지만, 통일보다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처리 문제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자료: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35쪽의 표를 보완하여 작성.

셋째, 북한에서 체제 붕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군부가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체제 개혁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군부가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지도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북한 엘리트 구성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조선로동당 지도부 내에 고르바초프와 같은 급진적 개혁파가 다수파를 형성하거나 헤게모니를 장

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의 삼남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급진적 정치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2013년 12월 장성택의 처형이 보여준 것처럼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처럼 스탈린식 공포정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조기붕괴를 확신하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난을 매우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지만, 1990년대 중후반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아사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체제유지에 성공한 조선로동당 지도부가 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현재의 경제 상황 하에서 체제붕괴 및 국가붕괴를 맞이할 가능성은 낮다. 경제난이 체제붕괴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반체제 세력이 경제난의 책임을 북한 지도부에 돌리며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정치투쟁에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현재 그 같은 세력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사정은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편이다.

다섯째, 북한에서 체제붕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했던 글라스노스트와 같은 정보개방 정책을 북한 지도부가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남한의 드라마 시청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더욱 대폭 강화되었다. 북한은 2013년 9월 형법을 개정해 한국 영상물 등을 반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이후 불순 녹화물이나 출판물을 대량 유포한 북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⁸⁾ 이처럼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은밀하게 남한의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남한 문화를 동경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이 각종 매체를 통한 노동당의 선전선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화적 접촉만으로 반체제 의식을 형성하기는 어렵다.¹⁹⁾

여섯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완화되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의 북한에서처럼 엘리트와 주민들이 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인민반 등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통제받고 있고,²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까지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극심한 탄압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정치적 집단행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곱째,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성장하여 노동당 일당독재 폐지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구와 소련의 경우 시민사회세력이 체제붕괴를 가져왔다기보다는 공산당 지도부에서 정치적 개혁과 정보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세력이 성장하여 결국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방

향으로까지 나아갔다. 북한의 경우 동구국가들과는 다르게 6·25 전쟁 발발 이전 남한에 속했던 개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화 이전에 민주선거의 경험조차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문화에 충효를 강조하는 봉건적 유교문화가 결합되어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한 정도로 신민화(臣民化)되어 있다. 결국 북한 지도부가 정치개혁과 정보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지기 전까지 주민들이 체제개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덟째, 대남 의존도 심화가 체제붕괴와 국가붕괴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남한과의 협력 강화로 자신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록 다수의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매우 선호하는 직장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 인력의 대중 파견이 시작되고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받는 급여보다 중국에서 받는 급여가 더 많기 때문에 개성공단 기업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매력은 더 줄어들었다. 한 예로 2012년 7월 중국 투먼시 ‘조선경제개발구’에서 김승재 YTN 기자가 취재한 북한 파견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12시간 일하고, 이 가운데 4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월 1300위안. 이 가운데 800위안은 북한 정부로 들어간다. 나머지 500위안 가운데 기숙사비와 상급 관리자 몫을 빼고 나면 생산직 근로자 몫으로 180위안 정도가 건네진다. 당시 평양 근로자 임금은 6만2000원, 중국 돈으로는 28위안 정도라고 했다. 그에 비하면 투먼에서의 월급은 꽤 높은 수준인 셈이다. 당시 기준으로 이는 개성공단 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²¹⁾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 진출 기업이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고,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중국 기업에서의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상태이지만,²²⁾ 그것마저 개선되면 북한 주민들은 ‘코리언 드림’보다 ‘차이나 드림’을 더 꾸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대남의존 심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한국 기업이 중국의 기업보다 더 매력적이 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져 남북경제협력이 현저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아홉째, 주변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체제붕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체제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핵포기 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이 이루어져 체제개혁 압력이 증폭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또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개혁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 분야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핵 문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체제개혁 압력도 적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경우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세계적 수준에서의 미·중 경쟁구도와 남북한 통일 후 중국 내 조선족의 분리주의 운동 가능성을 우려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동독이 소련에 군사적으로 의존적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북한이 중국에 대해 정치적·군사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와 주민이 남한과의 통일을 원한다면 중국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범국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결과 동서독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주변국들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남북한의 경우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1) 개혁 이데올로기의 확산, (2) 개혁파 엘리트의 집권, (3) 군부의 중립적 태도 등 아홉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고찰한 결과 북한 체제와 국가의 붕괴 조건은 아직 매우 미성숙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성택 숙청과 같이 외부세계에서 보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곧 불안정해져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2013년 8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1.7%에 달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201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김정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55.7%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김정일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²³⁾ 또한 최근 2년 간 북한의 식량사정은 상대적으로 호전되었으며,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²⁴⁾ 김정일 사망 직후 국내외 다수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 같은 예상과는 반대로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확고하게 확립하는데 성공했고, 경제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 체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국가가 붕괴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요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과 비

교해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과도한 군사화이다. 동독군 병력은 서독군 병력의 1/2밖에 되지 않았으나, 남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남한보다 2배 가량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어 설령 북한이 민주화된다고 하더라도 북한군 병력을 해체하고 한국군에 통합하는 것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IV. 한국의 통일 · 대북 정책 방향²⁵⁾

향후 김정은 정권이 북한 경제를 개방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지면,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도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서서히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 사회주의체제 또는 국가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견해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비현실적인 북한 ‘급변사태’ 대비보다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남북한이 ‘평화공존과 화해 · 협력의 모색 단계’로부터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단계’ → ‘부분적(느슨한) 연합 단계’ → ‘전면적(긴밀한) 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북한이 민주화되면 통일의 단계인 ‘정치공동체 형성(연방정부 창설) 단계’와 ‘경제 · 사회문화 · 군사통합 완성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통일전략 하에 대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통일국가가 번영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국운 쇠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남북한 간에 정치경제체제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 문화적 발전 격차 등 많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미래에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서둘러 체제 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점진적 · 단계적으로 남북한 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과정의 제1단계인 ‘화해 · 협력 단계’는 크게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 · 협력의 모색 단계’와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재의 단계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 · 협력의 모색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장관급회담 등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며 가시적인 성과들을 도출해냄으로써 이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평화공존과 화해 · 협력의 모색 단계’와 그 이전 시기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로, 2000년 이전에는 단 한 차례의 이산가족 방문 단 교환이 전부였고,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확인 인원은 157명에 불과했으나, 정상

회담 이후 2014년 2월까지 모두 1만8956명이 대면상봉에 참가함으로써²⁶⁾ 2000년 이전에 비해 상봉 인원이 100배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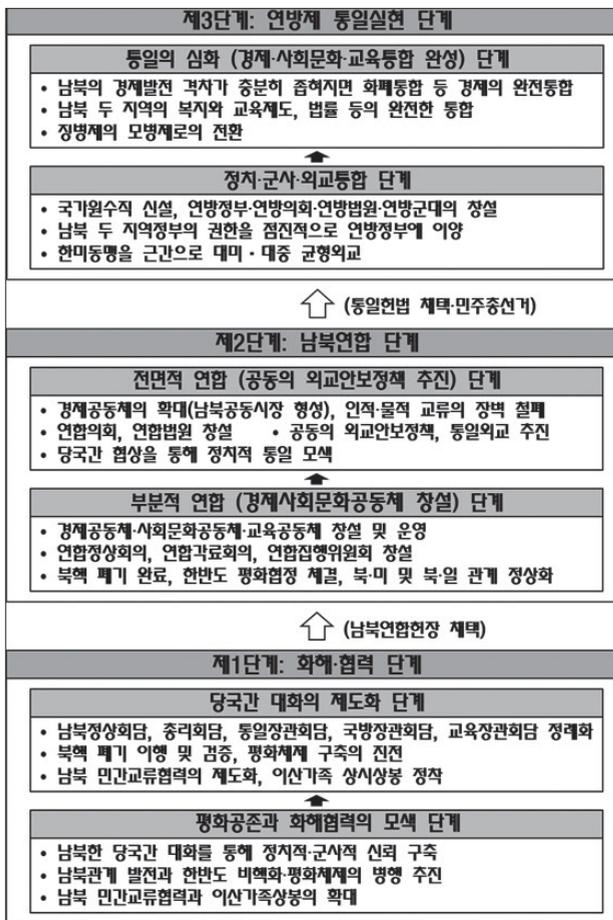
2000년 6월 이후 남북 간에는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장성급회담 등이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제2차 정상회담과 제1차 총리 회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제3차 정상회담과 제2차 총리회담, 제3차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는 ‘당 국 간 대화의 제도화 단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제도화되면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가 구축되어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고, 남북 경험의 규모가 현재에 비해 크

게 확대될 것이며,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제도화되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 또는 제도화 과정에서 남북한이 통합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의 상설협력·합의이행기구를 창설하고 그 권한과 규모를 확대해가면 점진적으로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과정의 제2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는 다시 ‘부분적 연합(경제·사회문화·교육공동체 창설) 단계’와 ‘전면적 연합(공동의 외교안보정책 추진)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인 ‘부분적 연합 단계’는 남북

〈그림2〉 남북한 통일의 점진적·단계적 실현 방안



주: 정성장,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새로운 통일방안 모색,” 제2차 한반도통일 비전과 동북아평화구축 전문가 정책포럼 발제문(2013/10/05)의 그림을 보완하여 작성

한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공동의 상설협력·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경제공동체·사회문화공동체 등을 창설하는 단계이다.

북한체제가 민주화되기 이전 남북연합은 주로 경제와 사회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의 강화와 상호 실리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통합을 모색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 엘리트의 집권 또는 민중혁명으로 민주화되어 남북한 정치체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해소된다면 남북한은 ‘부분적 연합’에서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까지 점진적으로 통합을 모색하는 ‘전면적 연합’ 단계로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면적 연합 단계’는 남북한이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고, 정치공동체 및 안보 공동체의 창설을 모색하거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통일과정의 제3단계인 ‘통일실현 단계’는 다시 ‘정치·군사·외교통합 단계’와 ‘경제·사회문화·교육통합 완성 단계’로 세분된다. 북한이 민주화되고 연합 차원의 상설협력·통합기구의 권한과 관장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남북한 국민 간에 최종적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에 가서 과거 미국에서처럼 연방헌법을 제정하여 연방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수많은 연방 국가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연방제는 연방정부와 구성국 정부 간의 권력의 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남과 북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기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다. ‘전면적 연합 단계’에서 남북한 정부 간 협상에 의해 통일헌법이 채택되면, 연합정상회의에서의 심의와 연합의회에서의 자문을 거쳐 통일헌법은 국민투표 또는 남과 북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승인 받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통일실현 단계’에서는 먼저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정치·군사·외교통합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외적으로 통일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원수 직을 신설하고, 남과 북의 군대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더라도 두 지역 간 경제적·사회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남북의 두 정부를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전면적 연합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땀아’ 역할을 하였던 연합집행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중앙정부, 연방정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과 북의 기존 정부는 지역정부 또는 주(州)정부의 형태로 각기 두 지역의 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을 관장하고, 연방 정부는 외교와 국방 전반을 관장하면서 남북 두 지역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이

질성을 해소하는 통합자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연합 단계에서 상징적인 역할밖에 부여받지 못했던 연합의회의 권한을 크게 증대시켜 통일국가의 연방의회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민주화된 후 남북이 하나의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이질성을 해소하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통일실현 단계는 ‘정치·군사·외교통합’이라는 외적인 통일 실현 단계 이후 ‘경제·사회문화·교육통합 완성’이라는 내적인 통일 실현 추구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비록 정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더라도 남북 간의 이질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전까지는 두 지역에서 각기 다른 화폐의 사용과 경제정책의 실시, 법규범, 교육제도의 적용 등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해 남북 지역 간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관련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장성택 숙청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심지어 ‘급변사태의 신호탄’으로까지 해석했다.²⁷⁾ 그러나 2014년 3월9일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최고 핵심 엘리트들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중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대의원 명단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문경덕(전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과 리병삼(전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정도이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핵심 엘리트 중에 ‘장성택 측근’이 외부에서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처럼 결코 엄청나게 많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2009년 2월경부터 당시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통해 군부 엘리트들을 장악해왔고, 동년 4월부터는 국가안전보위부장을 직접 맡아 당과 국가의 파워 엘리트들도 감시 통제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위층에 장성택과 친한 인사들은 많겠지만 장성택을 추종했던 ‘측근들’은 드문 것이다.²⁸⁾

만약 가까운 미래에 김정은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이 곧바로 민주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곧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김정은 주변의 파워 엘리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다.

황장엽씨는 생시에 ‘북한이 스스로 힘으로 덩샤오핑(鄧小平)식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결국 자유민주체제로 바뀌어 남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장기적 전망 하에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펴도록 해야지’ 선불리 자유민주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²⁹⁾ 황장엽씨의 이 같은 주장은 매우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지도부 내에서 개혁개방세력이 형성되고 김정은 이후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가 출범해 ‘탈김일성·김정일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에서 마침내 고르바초프 같은 급진적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노동당 일당 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제11조를 폐기하고 다당제를 도입해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체제가 중국식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북한 지도부 내에서 개혁개방 세력이 형성되어 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언젠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형태로 다가오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객관적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민주화되고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한국에 대해 동경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 지도부 내에 친남한적인 개혁세력이 형성되어야 하며, 북한 군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저항하지 않도록 남북한 간에 화해와 협력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력은 없지만,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 증가, 북한의 대중 인력 파견 증가,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특구 지정으로 인해 경제개방의 확대는 미래에 북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과 개방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통일 실현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우리가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전략적으로 보다 ‘큰 통일’로 꾸준히 나아간다면 통일은 미래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축복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외교**

註

- 1) 정성장, “우리는 북한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국방위 과대해석 등 대북분석 오류 산재,” 『데일리NK』, 2012/02/20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
- 2) 김학준, “김정일 지도체계 현황과 장래,” 『북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서울: 서울신문사, 1997), 27~37쪽.
- 3) 정성장, “한·미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 대북 군사전략 과제,” 『정세와 정책』, 2009년 3월호, 5~8쪽 참조.
- 4) 『연합뉴스』, 2011/10/06 참조.
- 5) 『연합뉴스』, 2008/09/16.
- 6)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7), 127~152쪽 참조.
- 7) 『연합뉴스』, 2008/09/15.
- 8) 『중앙일보』, 1997/10/21.
-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310~311쪽.
- 10) 윤대일, 『악의 축』 집현부 — 국가안전보위부의 내막』 (서울: 월간조선사, 2002), 22쪽.
- 11)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 (서울: 통일연구원, 2003), 3쪽.
- 12) 『연합뉴스』, 2008/10/14.
- 13)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서울: KIDA Press, 2009), 64쪽.
- 14)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 구상』, 64쪽.
- 15) 정성장, “김정일 건강이상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정세와 정책』, 2008년 11월호, 3~4쪽 참조.
- 16)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34~36쪽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
- 17) 맥마흔 볼·손중기 역,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1) 참조.
- 18) 2014년 4월 11일 KBS 뉴스.
- 19) 전현준 박사 등은 2006년 8월 1일과 3일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남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은 컸으나 그것이 ‘반문화’ 현상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6), 211쪽 참조.
- 20) 북한에서 주민통제의 최일선 조직은 인민반이다. 인민반은 보통 20~3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장과 선동원(인민반 당분조장 겸임) 등이 주민 감시와 통제를 맡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당세포, 인민반장, 담당 보안원, 담당 보위부원 등에 의해 3중으로 감시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밀착 감시하는 것은 인민반장이다. 인민반장은 인민반원들의 행동을 감시·조사하여 문제발생시 즉시 보안원(안전원)에게 보고,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138~139쪽 참조.
- 21) 『주간동아』, 918호 (2013/12/31), 54~56쪽.
- 22) 『주간동아』, 929호 (2014/03/25), 50~51쪽.
- 23) 『연합뉴스』, 2013/08/29.
- 24)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14년 양곡연도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은 503만 톤(정곡 기준)으로 최소 소요량 537만 대비 34만 톤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정도의 부족량이라면 통상적인 곡물 수입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수급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주민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량배급량이 증가하여 시장의 식량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권태진, “2014년 북한농업 현실과 남북협력 방향,” 『시선집중』 제175호 (2014/03/04), 4쪽 참조.
- 25)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정성장, “통일한반도의 미래상: 새로운 통일방안 모색,” 제2차 한반도통일비전과 동북아평화구축 전문가 정책포럼 발제문(2013/10/05), 13~18쪽 참조.
- 26) “이산가족 교류 현황(14.2.8 현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on/index>(검색일: 2014/03/31).
- 27) 『헤럴드경제』, 2013/12/13 사설 참조.
- 28) 정성장,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국방연구』, 제57권 제1호 (2014년 3월), 1~25쪽 참조.
- 29) 『연합뉴스』, 2008/09/15.

한국의 대(對) 미·중 통일 외교

신 성 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I. 서론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¹⁾ 이 말은 진위를 둘러싼 논란을 떠나 흔히 통일비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통일 담론을 한 번에 뒤집는 효과를 가져왔다. 1990년대 초 갑작스런 독일 통일을 선망과 부러움으로 지켜본 대한민국은 곧 이어진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부작용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어느덧 남북 간의 통일도 민족분단 비극의 해소라는 문제에서 천문학적 경제부담의 문제로 다가왔다. 여기에 전후세대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통일은 더 이상 당위의 문제가 아닌 멀고 어렵게만 느껴진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의 당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통일의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모든 세상일이 그렇듯 통일 역시 무조건 좋다거나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단순한 접근법이 정작 통일문제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과오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혹은 원치 않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분단을 우리가 원치 않았음에도 겪었듯이 통일도 정작 우리가 가장 원치 않을 때 혹은 가장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그 기회가 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통일에 대한 지나친 환상과 낙관론을 경계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항상 주시하고 그 과정에서의 여러 도전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과제의 가장 중요한 도전의 하나가 주변국과의 외교다. 그 중에서도 남북

과 더불어 한반도 지정학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는 통일의 준비에서부터 완결까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 남북문제 및 통일과 관련한 미·중의 입장과 이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전략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상당수가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일부 지나친 편향적인 분석이나 오해에 기반을 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통일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한반도 통일과 미·중의 함수관계도 부정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양국 다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혹 미국이 통일을 지지하더라도 미·중 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혹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야심 때문에 통일이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흔히 듣는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중의 통일의 대한 접근법 역시 우리 못지않게 복잡하고 양국에게도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글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미·중 외교의 도전과 기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외교 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II. 미·중 통일 외교의 조건

통일 외교의 첫 단추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 및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혜택에 대한 논리와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한국사회에 통일의 손익과 당위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1. 통일비용론의 재평가

그동안 한국 사회의 통일 담론은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경향이 있다. 하나는 내적 통일비용의 문제에 기인한 통일비용론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의 외적 장애요인에 기인한 통일불가론이다. 전술하였듯이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 이전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통일은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추구해야할 당면과제로 여겨져 온 현실에서 출발하였다. 해방

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과 한국전쟁은 7세기 후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세계사적으로 드물게 천년이 넘게 일민족 일국가로 존속해온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남북모두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과업이었다. 더욱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지속되는 대남적화 의욕은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제거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처방으로써 통일의 당위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의 해체와 독일 통일은 역설적이게도 기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속에 추진된 한·러, 한·중 수교와 남북화해 분위기는 기존의 공산주의 위협, 나아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극심한 경계를 누그러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통독과정에서 드러난 경제, 사회적 후유증은 통일비용과 부담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웠다. 당시 서독은 세계 최고의 선진 경제대국이었던 반면 동독은 공산권에서는 나름 가장 선진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제 막 개도국을 벗어나려는 남한과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경제를 가진 북한과의 통합이 어떤 경제적 고통을 수반할 지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²⁾ 문제는 이후 한국 사회의 통일 논의가 경제적 통일비용론 대 정치적 통일당위론, 혹은 젊은 세대의 통일부담론 대 기성세대의 통일향수론 등의 지극히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로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건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논의는 통일의 민족사적, 정치적 당위성과 함께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부담과 이익을 냉철하게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더불어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막대한 국방비용의 상쇄 외에도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해 해외 투자 및 국제금융을 포함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제약으로 작동해온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소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사업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작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도 이러한 투자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500만 북한 인구의 통합은 한국사회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북한 인구의 한국 경제 편입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과 함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는 한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나친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견실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

경제의 편입은 중국의 동북3성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다양한 경제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시베리아 및 21세기 신실크로드를 통한 유라시아로의 진입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활동 및 물류의 중심으로서의 한반도의 역할을 가능케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합 인구 7,500만 플러스의 통일 경제는 인구 1억으로 세계 경제 2위를 달성했던 일본경제에 버금가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물론 통일은 경제적 손익문제를 넘어서는 다른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크게는 민족사적 정통성의 회복에서 작게는 개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가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에서 가지는 근본적 취약성의 극복도 통일이 가져다 줄 무형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통일외교의 첫 출발점은 그것이 당위가 되었든, 경제적 이익이 되었든 우리 스스로가 통일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미국이나 중국이 나서서 통일을 위해 애써 줄 일은 없을 것이다.

2. 통일불가론의 재평가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그동안 우리의 통일담론을 크게 지배해 왔다. 통일비용론이 우리 내적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통일불가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남북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이다. 북한은 중국이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한국전쟁당시 미국의 개입으로 수세에 몰리던 북한을 돕기 위해 중국은 100만이 넘는 지원군을 파견하고 눈앞에 있었던 북진통일은 무산된다. 이후 북·중은 1961년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군사동맹을 정식 체결한다. 북·중동맹은 공산주의 이념적 동질성,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걸쳐 일본, 미국에 대항해 함께 싸운 혈맹의 역사, 김일성과 모택동의 개인적 친분에 기반한 북·중 지도부, 특히 군부 간의 끈끈한 유대감 등 여러 요인이 있다.³⁾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본토의 동북지역과 수도인 북경으로의 대륙진출의 길목에 놓인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중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존재가 날로 불편을 더해가는 중국에게 전략적 완충지대로써의 북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최근 북·중 관계는 이전의 혈맹관계가 아니며 신세대 지도부가 북한의 퇴행적인 세습과 낙후

한 통치에 불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는 그래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는 곧 남한주도의 통일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해에 반하며 따라서 중국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편 외적 요인에 의한 통일불가론은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진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북한의 체제와 핵위협을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통일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북분단의 원인이 해방직후 미국의 신탁통치정책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한·미 동맹과 한반도주둔 미군의 가장 큰 근거가 남북 군사대치인 현실이 있다. 남북이 통일되면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를 주둔시킬 정당성을 잃게 되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상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남북통일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남북분단이 지속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의 경쟁이 가열되고 동북아가 이들 패권경쟁의 주 무대가 되면서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된다.

외적불가론은 결국 아무리 남북이 통일을 원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강대국인 미·중 모두가 통일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관론으로 이어진다. 미·중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근거를 둔 이러한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독일 통일은 동서독의 내부변화와 함께 헬무트 콜 서독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참모들의 찬반 양론 속에 이를 지지토록 결심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노력과 무엇보다 동독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던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양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⁴⁾

이런 맥락에서 남한 정부가 과연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 또한 과거 몰락하던 소련에 비해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자산을 쉽게 포기할지는 쉽게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중대사를 시도도 하기 전에 외적요인 만을 근거로 미리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정치에 대해 세간에서 말하듯 국제정치도 가능성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정작 미·중 당사자들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 현실은 미·중도 우리처럼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과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통일의 외적불가론은 우리 스스로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한민족 한국가의 정당한 통일의를 부정 또는 무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독일과는 다르게 2차대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통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적절

한 시점에 남북한 주민 모두가 통일을 원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이를 반대하기란 민족자존,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자유주의와 민주, 인권 등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가치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미국은 물론 최근 영토,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등을 핵심가치로 공식 천명한 중국 역시 통일을 드러내놓고 반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통일이 미국이나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한다는 전제자체도 두 나라 국가이익의 단편적인 이해에 기반을 둔다.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분단의 지속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은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해 왔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도적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정파를 막론하고 역대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기본 정책이다. 1970년대 닉슨과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군 철수정책에 이어 1990년대 클린턴, 2000년대 부시 행정부와 오마바 행정부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축소내지는 전환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물론 미국은 통일 이후에도 한국과의 동맹유지를 원한다. 그러나 동맹유지의 전제가 반드시 지금과 같은 대규모 군사주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 발전과 군사혁명으로 정보전과 무인기가 차세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시대에 한반도 군사주둔을 위해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전략적 유용성은 여전하다 하더라도 북·중 관계에 점점 불협화음이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퇴행성과 폐쇄성, 후진성에 중국의 일반대중은 물론 지도층도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세습 정권이 중국이 바라는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통한 자립과 부강의 길을 갈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정권을 물려받은 지 2년이 넘도록 아직 북경의 지도부와 정식 상견례를 못한 김정은은 그나마 중국이 가장 신뢰하던 후견인이자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고모부를 하루아침에 총살해 버렸다. 지금 중국이 한반도와 북한에 대해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과 충돌가능성이다.

중국의 최우선과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를 위해 주변상황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은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북한의 전략적 자산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북한정권의 무모함과 위험성이 증가할수록 중국정부의 고민은 증폭될 것이다. 혹자가 가정하듯 북한에 중국의 괴뢰정권을 수립하거나 직간접으로 지배한다는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불확실성과 위험비용을 내포한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지역번영을 추구하는 통일한국이 장기

적으로 중국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Ⅲ. 통일외교 전략

1. 통일 비전 제시

통일 외교의 출발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어야 한다. 이는 남북한 주민 뿐 아니라 주변을 사는 이웃국가들, 즉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상호 제로섬이 아닌 것처럼, 통일 역시 미·중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미·중 통일외교의 기본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익에 대해 주변국도 동의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나아가 미·중 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한반도의 통일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와 미·중 간의 세력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요소와 대결가능성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21세기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주변국들 뿐 아니라 세계의 패권국 미국에게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로운 부상과 협력 공생의 신형 강대국관계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럼에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패권국 중국의 미래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최근 불거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마찰은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 모두 전면적인 전쟁이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물리적인 세력전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존의 지역질서나 미·중 간의 역학관계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쪽이나 여기에 변화를 요구하는 쪽 모두에게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신감은 증폭되고 급기야는 원치 않았던 대결로 치닫는 국제정치의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상황이 전개된다. 강대국 사이의 안보딜레마와 패권경쟁은 종종 이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영향력 다툼의 형태로 나타났다. 현재 러시아와 미국사이의 긴장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크림반도는 1, 2차 대전을 전후로 전통적으로 유럽 강대국간 힘의 정치가 발현된 전형적인 전략적 요충지이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강대국 힘의 정치가 발현되는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9세기 말 일본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

가 청·일, 러·일 간 세력다툼의 각축장이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조선은 아무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대신 서로의 세력확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일, 청, 러에게 언제라도 접수될 수 있는 너무나도 취약한 국가였다. 문제는 조선반도가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이다. 청·일·러 간의 안보딜레마는 곧 조선반도에 대한 제국의 쟁탈전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1894~1895년 청일전쟁과 1904~1905년 러일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당사국이 아닌 조선반도였다. 참으로 조선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역사적 모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다시 남북분단으로 이어졌다. 주변 강대국간 세력전으로 인한 패권정치의 전형적인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비극의 모든 책임을 주변국에게만 돌리는 것도 맞지 않다. 당시 조선이 어느 세력에게도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나 지도층의 명민한 외교력 하에 단결된 국민의식만 있었다더라도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억울한 일이지만 구한말 조선의 취약성이 중, 일, 러 간 안보딜레마와 세력다툼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또 다른 세력다툼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북한이 있다. 구한말 조선을 연상시키는 북한의 취약성은 이를 둘러싼 중국, 한국, 미국 등 주변국가 간 안보딜레마와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면서도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과 중국, 미국이 각자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서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현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21세기 신 동북아 패권경쟁의 단면을 드러낸다. 물론 100만이 넘는 군대와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구한말 조선보다 훨씬 군사적으로 강하고 위협한 존재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냉전시절 소련이 핵무기가 적어서 붕괴한 것은 아니었듯이 북한정권의 취약성은 핵과는 별개의 문제다. 북한 스스로가 진정한 자력갱생의 길을 걷지 못한다면 그 불안정성의 제거는 결국 외부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남북 간의 대립의 역사를 종결지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세력균형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진정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한반도는 동북아의 평화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최근 일본의 고위 외교관이 말하였듯이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적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일본에게 가까운 경제성장의 협력 동반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⁵⁾ 통일한국은 새로운 시장과 노동인력 및 생산시설을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상생의 경제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다. 통일은 그동안 폐쇄된 북한의 시장과 자원을 활용한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의 동북지역에도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유라시아 철도사업 및 도로, 에너지 사업 등은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러시아의 극동과 중국북부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지역의 물류비 절감과 무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성장벨트를 창출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통일 과정의 정당성

미·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의 비전과 결과를 설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일의 과정에 대한 우려의 해소이다. 사실 미·중의 정책 담당자가 당장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통일 후의 모습보다 통일의 과정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미·중이 지금 무엇보다 한반도에 원하는 것은 안정이다. 모두가 북한 정권의 행보와 핵 개발에 주목하는 이유도 당장 이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원하는 것도 이것이 되도록 안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다. 바꾸어 말하면 미·중은 그 결과에 앞서 통일의 과정이 긴장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 한국이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통일 논의나 정책이 한반도에 의도치 않은 긴장을 조성하거나 폭력적인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통일에 있어 결과의 정당성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통일논의와 외교에 미묘한 딜레마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안정이란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현상유지를 바꾸려는 측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안정적인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현재의 분단 상황이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정서상 비정상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분단 60년이 지난 현재 남북의 두 체제는 엄연한 현실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자칫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무리한 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다. 미·중이 한반도 상황의 안정을 원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통일외교는 이들의 국익에 반하는 현상변경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미·중은 우리의 통일외교나 통일정책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우리의 통일외교가 남북의 분단을 인정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시에 우리의 통일정책도 우선은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리를 우선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남북의 분단을 영속화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서는 안 된다. 대신 이미 기존에 우리가 천명하였듯이 통일의 기본 대원칙은 남북의 평화적 합의에 의한 자연스럽게 점진적인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여러 현실적인 대안이 논의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남북관계의 안정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각종 대남 군사도발, 우발적 무력충돌, 북한정권내부의 정변이나 권력투쟁, 일부 사회계층이나 지역의 소요사태, 또는 전면적인 내전이나 무정부 사태에 이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단 제1원칙은 북한과 한반도 상황의 조속한 안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선부른 대응이나 과잉 반응은 원인제공자에 상관없이 한국이 한반도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책임을 뒤집어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공공연히 논의되는 북한 급변사태나 붕괴론이 북한의 불신과 불안감을 자극할 뿐 아니라 미·중의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불안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들리는 북한 급변사태론과 통일논의가 미·중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독의 경우 통일직전까지도 자극적인 통일구호보다는 자유와 평화의 기치아래 동서독 주민 간, 정부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힘썼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통일 외교와 정책도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기반할 때 오히려 미·중의 신뢰와 정당성을 더 확보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이나 우리의 적극적 통일정책이 자칫 현재의 남북상황을 무리하게 억지로 변경하려는 의도처럼 해석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핵을 포함한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안정되게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필요할 경우 미·중과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보다 안정적인 공동 평화와 번영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3. 전략적 소통

많은 사람들이 통일과 관련한 미·중과의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미·중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하지가 않다. 당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미·중에 드러내고 북한 급변사태나 통일을 논의하자고 하면 중국은 물론 미국도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들이나 정책전문가, 혹은 비공식의 1.5 채널을 통한 논의들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한국 측 참석자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히려 미중에게 한국의 의도나 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현상들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국내의 언론이나 대중매

체를 통해 전달되는 일부 감성적 통일론이나 급진적 통일방안 등이 더욱 미·중의 의구심을 악화 시키는 경향도 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인과 언론의 다양한 의견들을 강제로 통제할 수도 없다. 정부의 미·중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일과 관련한 미·중의 우려사항에 대한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첫째, 남북과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무리하고 갑작스런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안정적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다는 점을 적시해야 한다. 동시에 통일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당사자 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추구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통일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통일과정에서 미·중과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비핵화조치를 취할 것을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비핵화는 통일이후에도 확고한 정책으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불어 통일 한국은 현재 확립된 주변국의 주권과 영토를 확실히 존중할 것임을 밝혀야 한다. 특히 중국과 관련하여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합의된 국경선을 존중할 것이며, 옛 고구려 영토나 동북 삼성의 조선족 자치지역 등에 관한 일부 한국사회의 감성적 주장은 정부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 통일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면서도 국제사회와 주변국, 특히 미·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질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일의 경우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 정부와의 종합적인 정책협약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임을 밝혀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현재 북한의 정부가 건재한 현실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미·중에 대한 통일외교가 당장 그 구체적 방안이나 북한급변사태를 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통일방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견개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중 정부 간에 밀실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한다는 상상은 현재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 그에 앞서 북한을 최대한 대화로 끌어들이고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일관된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무도한 행동이나 비이성적 정책을 냉정하게 주변국과 협의하며 관리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미·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기본적 신뢰

야 말로 진정 통일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미·중과의 통일외교에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IV. 맺음말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외교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국민과 주변국에게 교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작업이 미묘한 긴장과 모순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먼저 통일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없다. 통일이 남한 국민은 물론 북한 주민의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 상호 신뢰는 통일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를 위해 통일비용과 이익, 민족적 정당성의 회복,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망리한 종합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일한국과 함께 살아갈 주변국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오래된 이웃이자 북한의 후견인인 중국의 입장을 배제한 통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의 적극적인 통일외교는 자칫하면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안정을 해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위험이 있다. 내부적으로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날수록 미·중에게는 오히려 통일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우리의 입장을 강조해야 하는 역설이 생긴다. 미·중과의 통일외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저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체제의 취약성이 동북아 세력전에 가지는 위험성을 한·미·중 삼국이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미·중이 함께 만들어 가야함을 강조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미·중 간의 평화적 세력균형에 기여해야 한다. 통일외교는 이것을 미국과 중국에게 설득하는 작업이다. 통일은 모두에게 대박이다. **외교**

註

- 1)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 2)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간 경제규모 격차는 5:1이었던 반면, 현재 남북간 격차는 20:1이다. 인구면에서도 동서독간 인구격차는 4:1, 남북은 2:1이다. 신성원, “통일전후 독일 경제 상황과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주요국제문제분석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년2월10일)
- 3) 북중동맹의 역사적 기원과 내부의 긴장관계에 대해서는 최명해, 『중국과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오름: 2009) 참조
- 4) 독일 통일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과정에 대해서는 Philip Zelikow and 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 5) 뱃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의 비공개 강연 (2014년4월9일 서울클럽)

통일과정에서의 과제와 대안

김 갑 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국회입법조사관)



I. 통일의 비전과 경로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아시아 번영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남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삶의 가치를 증진하고 자유·평등·인권·평화·민주주의·안전·풍요·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반도강국'을 지향하는 통일한국은 평화통일 과정을 통하여 대륙·해양·반도세력의 안정적 3극 정립을 이룩하여 동아시아 항구평화의 토대를 공고화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 반도강국으로 도약한다면, 대륙세력에게는 해양세력의 복상을,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세력의 남하를 방어해주는 '반도세력'으로 부상하여 두 세력의 정면충돌을 완충해주는 '완충국(buffer state)' 역할을 수행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륙·해양·반도세력의 3극 정립체제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양대 세력의 국방기능을 대신해주어 양쪽으로부터 정치외교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가 일국의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자유로이 유통되고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국경'은 점차 희미해져 경계선이 유동적인 '프런티어'로 변하고 있다. '프런티어'는 계속 열리고 개척될 수 있어 경계선이 외부

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유동화되는 가변적 변경이다. 통일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전역을 프런티어로 만들고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동아시아 프런티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듯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비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¹⁾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통일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연합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일 것이다. 그런데 통일에 소극적인 북한이 연합제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내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연합제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라 함은 사실상 '연합'을 의미하지 않고 '연방제 국가' 또는 '단일제 국가'를 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의 방식이 아닌 남북 상호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일 것이고, 엘리트 중심의 급진적 통일이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점진적 통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세계사적 흐름, 남북한 국력 차이, 국제환경 등을 고려하면 한국주도의 점진적 합의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이 통일과정을 주도하고 주변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소극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남과 북이 통일에 합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의통일이란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증대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합의통일에서 중요한 것은 전민족적 합의이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통일에 동의해야 하고 특히 북한 주민의 동의가 요청된다. 또한 남북 합의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 국가 실현,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선진 복지국가 구현, 구성원들은 활동영역의 확대와 폭 넓은 선택의 기회 향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선진 일류국가 지향 등이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될 때 가능하다.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흐름으로 볼 때, 수렴론적 발상에 입각하여 남북한 체제를 양 극단으로 두고 양 체제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체제를 통일국가의 체제로 파악하는 기존 논의는 극복되어야 한다.²⁾ 물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한체제도 분단으로 인해 왜곡된 부분을 교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³⁾

그런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정당체제와 의회제도, 주한미군, 사회복지, 비핵정책, 과거사 정리, 통일법제, 통일비용, 인력 운용, 지역갈등, 국제협력과 국제관계, 통일담론, 평화협정, 통일수도 등. 이러한

문제들은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완성단계 등에 걸쳐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중요하거나 그동안 간과되었던 여섯 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그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하겠다.

II. 통일과정에서의 고민들

1. 새로운 통일담론의 모색

현재까지 제안된 통일한국의 기본원리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 원칙, 권력분립, 법치주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승종의 ‘다원적 자유민주주의’, 양호민과 이상우의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백영철의 ‘자유·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김학준의 ‘민족자결 및 민족다원주의’, 방영준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체로서의 다원공동체’, 권영설의 ‘시민적·자유주의적 법치국가’, 박영호의 ‘다원적 정치체제’ 등이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들어 ‘민족주의’ 대신 ‘열린 민족주의’를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⁴⁾

이제 한국 사회는 탈냉전과 세계화, 다양한 이주민의 존재로 한국 국민을 더 이상 민족적 범주로만 묶기 어렵다.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국가’에서 벗어나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백만 명이 훨씬 넘었고 전체 결혼의 10% 이상이 국제결혼이다. 2020년이면 남한 어린이 다섯 중 한 명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되리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남북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더 이상 민족만을 강조해선 안 된다. 한국 청소년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보다 북한 출신을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개인·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다문화주의’를 새로운 통일담론의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차이를 무시하고 타자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통합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통일의 주체는 더 이상 선형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근거한 동질적 주체가 아니며, 다중화된 주체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즉,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적 삶의 중시,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민주적 참여, 그리고 균등한 복지를 보장하는 통일 국가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열린 민족주의’ 역시 통일담론으로 유효하다. 열린 민

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주의적 개방성을 추구하는 민족주의다. 하지만 진정한 열린 민족주의는 안으로도 열려 있는 민족주의다. 열린 민족주의는 타국과의 대립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의 시민사회를 민주화할 때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가 내의 시민들 상호관계도 일반적인 자유의 법칙에 따라 평화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다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민족의 개념 정의에 있어 혈통을 중시하는 기존의 태도를 완화하고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한 이해, 한민족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민족 개념을 재정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⁵⁾ 이런 점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으로 다문화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는 일맥상통하다 하겠다.⁶⁾

2. 통일외교 강화와 다자안보협력체 강구

한반도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가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분단되었고,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들의 주체적 노력과 더불어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변국들은 동북아의 세력균형 역할을 하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현상타파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통일과정에서 북한 재건화를 위한 한국재정의 과도한 투입,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 무력충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3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량난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미 완충지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타파에 호의적이지 않다. 일본은 두 개의 분단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이 한반도 및 대륙아시아에 발언권을 증대하려는 일본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국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남북한 등거리 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한반도 휴전선이 남북분단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동아시아 분단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한반도문제는 상위체계로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중/중·일 세력경쟁과 상호 결합

되어 그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의 고민은 미·중 관계에 의해 한반도 통일 문제가 종속변수화 되고 우리의 독립적 공간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과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맞물려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구축과정을 활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질서 구축을 한반도 통일과 정(正)의 관계에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외교정책의 목표는 당연히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는 ‘통일외교’이며 그 방도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 협력관계의 격상’이라 하겠다.

또한 현재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다자안보협력에 대체로 긍정적 입장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고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남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호의적이다. 그런데 역내 국가들이 다자주의적 방식을 선호한다 하여 이것이 곧바로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다자안보협력만이 지역내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에게는 국제제도에의 참여가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경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속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기의 국가중심적 분석에 기초한 양극성이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보장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특성이고 따라서 탈냉전기의 다극적 국제질서는 국가들 간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동(북)아시아에서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자동맹을 병행·보좌하는 다자기구 창설, 양국관계에 다자관계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이중적 협력관계 구축, 양·다자협력의 틀(bi-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 모색 등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⁷⁾ 이래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와 역내 안정성의 중요한 축인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여 미국이 방관자 또는 불개입의 자세를 갖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의 참여로 대항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한반도 통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⁸⁾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독일은 국가조약을 통해 독일통일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다졌고 통일조약을 통해 대내적으로 통일을 환수했지만, 통일에 대한 대외적 마무리는 2+4협약(독일에 관련된 최종 규정에 관한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2+4조약의 의미는 독일 내부적으로 평화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전후 연합국과 구축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전쟁의 부산물로 발생된 동서갈등의 종결에도 있었다.⁹⁾

한반도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간 실질적인 평화보장조치가 마련되며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통일과정 전에도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남북한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의 법적 종결 및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 남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적대적 긴장관계를 초래했던 제반 긴장요인들을 완화·해결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있어 고민은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다. 현재 남한의 입장은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이다. 평화협정은 남북이 중심에 서고 국제사회(미·중)가 지지·보장하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사자 문제에 있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북한은 1974년 이후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견지하고 있으나, 얼마 전부터 한국 참여에 긍정적이고 평화협정 논의를 남·북·미·중 4개국으로 하는 데에도 부정적이지 않다.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는 교전당사자 및 정전협정 서명국 논리,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별도 포럼 구성 합의를 고려하면 남·북·미·중 4개국이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처럼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3자냐 4자냐’ 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중국을 포함시킬 것인가로 귀착된다. 4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실질적 교전 당사자이며 휴전협정 조인자로서 사실상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북한의 태도가 애매하기는 하나 대체로 중국을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3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전협정 서명당사자가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니라 현재 해체된 ‘중국인민지원군’의 사령관인 팡덕회이기 때문에 중국이 참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평화협정의 형태는 ‘양자협정’, ‘남북+미·중 협정’, ‘4자협정’, ‘3자협정’, ‘4자 기본협정 하 남북/북·미 양자 부속협정’ 등 다섯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남북

협정 또는 북·미 협정 등 양자협정인데 이는 남한과 북한이 극도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둘째, 남북+미·중 협정인데, 남북 당사자에 미국과 중국의 하기서명을 통한 미·중 보장방식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적 지지의 보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한이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 4자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 당사자인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체제에 대한 당사자 문제와 국제적 보증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나 중국 참여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주변국의 역할을 과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넷째, 3자(남·북·미)협정인데,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련한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미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과도하게 종속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4자 기본협정 하 남북/북·미 양자 부속협정인데 이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지역적·남북관계 차원을 동시에 포괄하는 방안으로서 정전협정체제의 대체로서의 평화체제라는 명분에 부합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국 역할이 과도할 우려가 있고 주변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제도화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체결당사자 문제에 있어 ‘한국이 배제되는 비정상적 시나리오’가 아닌 한 한국의 신축적 자세가 필요한데, 명분(한반도 문제의 당사자화)과 현실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 두 번째 안이 최적으로 사료되나, 다섯 번째 안도 검토할 만하다.¹⁰⁾

4. 포용의 정치제도 구축

통독의 정당체제는 서독이 동독의 정당체제를 흡수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통일 이전 서독의 정당들은 통일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동독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러나 통일이 가시화되고 동독에서 인민의회선거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확정하자, 서독의 정당들은 당리당략적 입장에서 무계획적으로 통합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동독 정당들의 조직적·이념적 특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하여 동서독 간의 정치적 통합은 어려움을 겪었고 정당체제는 지역갈등에 노출되었다.¹¹⁾

통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정당들은 남북의 이질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발전의 기반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 환경, 산업화, 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도 수용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의 정당들은 타당과의 이념적 차별

화를 모색해야 하나 이와 더불어 북한의 이질적 사회체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수용의 폭을 확대하여 남북의 다원적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이념적 포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남한 정당들의 이념적 포용성과 더불어 북한 정당체계의 온건다당제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조선노동당의 역할을 제한하고 조선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신생 보수정당의 태동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바, 북한의 신생정당이 지역정당화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북한에서 신생 지역정당이 출현할 경우, 통일한국의 지역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간 정당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¹²⁾

북한지역의 정당 활성화는 남북 정당 간 또는 북한 지역내 정당 사이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¹³⁾ 먼저, 남북한의 정치단체 및 정당 간 상호교류를 실시하여 이념적·정치적 영역에서 상호이해 및 협력범위를 확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정치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정치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차후 단계에서 북한지역의 정치단체 및 정당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남북의 정치단체 및 정당의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의회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거리다. 단원제를 지지하는 견해는 양원제가 국민주권의 단일성과 불가분성에도 맞지 않으며, 좁은 영토, 단일민족의 한국사회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통일한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도 단원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단원제는 국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정심의회 있어 양원제보다 세심함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의회의 정부에 대한 전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¹⁴⁾

양원제를 주장하는 견해가 명분상으로는 더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양원제는 일반적으로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고, 상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이익 또는 직능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으며 사회의 다원성을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며 소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의도적으로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원의 미흡할 수도 있는 의사결정, 정부와 의회 간의 충돌, 그리고 급진적 개혁에 대해 제동을 걸고 조정함으로써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⁵⁾ 과도적으로 양원제를 채택하여 남북 간의 통합 이후 상호 적응하는 기간을 갖도록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¹⁶⁾ 상호 적응기를 거치면서 남북한이 완전히 통합을 이룬 다음에 다시 단원제로 복귀하는 수순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지역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등 자유 선거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자유선거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독일통일과 같이 남한에의 편입을 의결하든지 혹은 북한에 새로 선출된 주권기관과 남측의 국회가 연석으로 통일을 합의 선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의회구성이 양원제일 경우, 하원은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인구대표성을 가미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원 의석수는 500명 내외, 상원 의석수는 100명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원의장은 부통령 또는 자체 선출 또는 ‘도지사 순번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외관계의 재조정

남과 북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남북한은 각기 독립된 국가인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두 개의 한국 인정과 달리 남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 문제임을 확인하고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즉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과정에 돌입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보장, 협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신뢰구축 및 공동보조를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내부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도록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민족자결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외교문서형식으로 주변국에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유엔을 적극 활용하여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외부 불간섭 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남북한이 통일과정에 진입하면 국제무대에서의 통일한국에 대한 신뢰구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해외주재 남북 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남북한 해외주재 공관의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기구 및 제3국에서 외교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에 남북이 단일의석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외교의 공동원칙을 설정하고 합의한 이후에는 단일체로 외교를 행사하는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즉, 남과 북이 단일한 단위로 활동함으로써 하나의 국가 지향성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과 모순되는 조약을 정비하고 국가승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합하여 통일을 하는 경우에 북한은 소멸하고 통일한국은 그 영토가 확대되어 통일 이전의 한국의 국제법적 법인격이 계속 유지되는 통일국가 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하여 새로운 통일한국이 수립되고 남북한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통일한국은 남북한과 다른 새로운 국제법 주체가 되며, 남한 또는 북한의 계속이 아닌 국제법상 신국가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통일시의 국가승계처럼 일방적으로 통일한국이 남한을 그대로 승계할 수는 없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제 3국과 체결했던 조약·협정 및 대외관계를 정비·통합해야 한다. 특히 타국과의 군사조약,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시주둔국지원협정(WHNS), 북·중 동맹조약 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나아가 통일과정에서 외교정책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새로이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 중 민족적 이해와 관련된 것은 남북 양측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¹⁸⁾

6. 분산형 통일수도

통일수도는 분단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성을 가질 수 있고 남과 북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역사성, 대외적 이미지,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즉, 통일수도는 민족적 통합을 상징하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며, 한반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통일과정에서도 통독의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베를린 제안’과 ‘본 제안’ 등 두 개의 방안이 제출되었다. ‘본 제안’의 근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본의 경제발전을 강조한 것이었다. 반면 ‘베를린 제안’의 논거는 본이 원래 임시수도였고 베를린이 정파를 떠나 통일의 완성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었다. 팽팽한 논쟁 끝에 연방의원 표결 결과 338 대 320으로 베를린으로 수도이전이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베를린 수도 이전의 후유증을 염려하여 연방 국방성, 환경성, 교육성의 본부를 본에 남기는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우리는 통일수도의 모형을 분산형과 집중형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분산형은

유럽연합처럼 수도의 기능을 몇 개의 도시가 분담하는 것이다. 물론 유럽연합 이외에도 몇 개 국가는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별도로 두고 있다. 집중형은 통일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한 도시에 총괄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조선왕조를 감안하면, 서울이 역사성 및 위상과 역할로 보아 집중형 수도의 제1후보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¹⁹⁾

그렇지만 국민통합과 민족통합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면, ‘신3경 정책’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수도는 다경(多京)체제로 운용되었다. 통일신라는 왕도(서라벌)와 5소경(小京)을, 고려는 왕도(개경), 동경(경주), 서경(평양) 등 3경을 설치하였다. 독일도 사실상의 3경체제라 할 수 있다. 베를린(연방의회+총리공관+대통령궁, 일부 행정부처), 본(일부 행정부처), 칼스루에(각급 연방법원+헌법재판소) 등.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서울, 충청, 평양을 각기 정치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정치수도에는 청와대와 국회가 소재하고, 충청행정수도에는 총리공관과 행정각부가 소재하며, 평양사법수도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소재할 수 있다.

Ⅲ.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지향

우리 대북·통일정책의 총적 목표는 ‘분단관리’와 ‘통일대비’다. 이는 한국이 평화적 통일을 헌법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휴전상태의 분단국가라는 사실에서 도출될 수 있다. 우리는 대북·통일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변영을 증진하고 이와 동시에 통일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5년간의 대북·통일정책에서는 분단관리와 통일대비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상대를 겁박하는 형국이었다.

실제로 분단관리 정책은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치중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남북 간 자유왕래가 보장되는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강조했다. 반면, 통일대비 정책은 통일의 달성 여부 및 시점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분단의 현상타파를 위해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추진했다. 이 정책은 ‘법적·제도적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집중했다. 전자는 주로 대북 포용정책에 찬성 내지 우호적인 진보 및 중도세력이 지지했고, 후자는 대체로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보수 및 중도세력이 지지했다. 대북·통일정책의 구성을 둘러싼 대립은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한반도와 북한의 현실, 그리고 주변국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북·통일

정책을 합리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통일대비 없는 분단관리’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도외시된 통일대비’를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분단관리와 통일대비가 힘을 합쳐야 정확히 목표지점에 다가갈 수 있는 대북·통일 정책이라는 자전거의 두 바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바퀴와 뒷바퀴의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앞바퀴는 방향타이며 뒷바퀴는 자전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장치이다. 앞바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힘들게 밟은 페달이 도로가 될 것이고, 앞바퀴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하더라도 동력이 없으면 자전거는 멈춰서고 넘어질 것이다.

분단관리와 통일대비 중 어느 것이 앞바퀴이고 뒷바퀴일까? 예상외의 북한내구력, 현상유지를 바라는 동북아 정치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반도 분단구조를 주도적으로 타파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분단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대북 관여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상타파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인정한다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대북·통일정책의 뒷바퀴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분단관리와 통일대비의 적절한 균형 배치의 관점에서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분단관리와 남북협력을 토대로 통일대비를 가미하고, 사실상의 통일을 토대로 법적·제도적 통일을 가미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의지 과잉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악순환을 경계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통일의 준비는 통일‘강요’가 아닌 통일‘대비’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²⁰⁾ **외교**

註

- 1) 김갑식,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1).
- 2) 조민 외, 『통일비전개발』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3) 황병덕·김갑식 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서울: 늘봄플러스, 2011).
- 4) 정용길, “통일국가의 정치제도,”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형』 (서울: 국가정보연수원, 1997); 황병덕,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5) 이수정, “다문화주의와 통일담론,” 『한반도 통일론의 재구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학술회의 자료집(2010); 추병완,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통일교육원 2007).
- 6) 김갑식, “동아시아 시대,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1).
- 7) 김병기·김태형, “미국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의도와 우리의 대응,” 『전략연구』, 36호(2006); 이신화, “동북아 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36호(2006).
- 8) 김갑식,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통일문제연구』, 52호(2009).

- 9) 신용호, “독일 통일과정에서 제기된 국제법적 문제들,” 『국제법 동향과 실무』, 2권 4호(2003).
- 10) 김갑식, “남북관계와 북한변화: 남북관계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2권 1호(2009).
- 11) 김영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정당체계의 변화와 역할,” 『통일경제』, 57호(1999).
- 12) 박광기,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정당통합문제와 바람직한 정당의 구조 및 체제연구,” 『사회과학논문집』, 18권 1호(1999).
- 13) 조민 외,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9).
- 14) 라종일·강량, “통일한국을 대비한 권력구조,”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역음, 『한국의 권력구조논쟁』(서울: 풀빛, 1997).
- 15) 박종철, 『통일한국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16) 손희두·오유석, “통일에 대비한 의회의 역할,” 『의정연구』(서울: 한울, 1997).
- 17) 이순천, 『조약의 국가승계』(파주: 열린책들, 2012).
- 18) 김근식, “북한 급변사태와 남북연합: 통일과정적 접근,” 『북한연구학회보』, 13권 2호(2010); 박종철 외,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서울: 통일연구원, 2008).
- 19) 김창수 외,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통합과 통일수도 결정 정책연구』, 서울시의회 용역보고서 (2013).
- 20) 김갑식,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통일인가? 평화인가?”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파주: 나남, 2013), 43-45쪽 발췌.

통일 이후의 한국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비전 -

박 영 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I. 문제 제기

세기의 전환기는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배태한다.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통일의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가 해체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한반도는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남북관계의 진화로 보였던 교류협력이 사실상 단절된 지도 이미 여러 해가 흐르고 있다. 1990년 대 초 만해도 극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렀던 북한의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은 이제는 '핵 보유 국가'를 자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넘어서 안보 차원에서 핵무기에 기반한 군사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 간 역학관계는 변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한때 제국(empire)을 꿈꾸던 미국은 상대적 힘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또는 rebalancing)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개혁·개방정책 30년의 결과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주요 2개(G2)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군사력의 확장과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정립 제안은 과거 누렸던 '중화(中華)의 힘'을 강력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21세기 '중국의 꿈(中華夢)'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다. 일본은 다시 정권을 장악한 아베 정부가 강력한 경제회복정책의 추진과 함께 보통국가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3기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명하듯 강한 러시

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 및 재정 위기는 국제정치와 안보관계의 저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에는 새로운 갈등현상이 등장했다. 미·중의 경쟁구도가 가장 현저한 곳이 이 지역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된 상태이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섬들을 둘러싼 역내 국가 간 갈등을 현재화하고 방공식별구역(Air-defense Identification Zone)의 재설정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을 유발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면서도 아시아중시정책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편승하여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또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는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을 통해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북핵문제 등 안보문제를 다루면서 지속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3대 세습을 통해서 국제환경의 변화와는 동떨어진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냉전구조 해체 이후의 한반도 내외의 전략적 환경은 결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분단 70년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결국 분단 극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배가되지 않으면 분단 100년을 맞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아 미래를 그리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미래는 오늘의 과제인 것이다.

II. 통일 후 10년의 미래상

오랜 기간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오늘날은 미래 예측이 더욱 어려운 복합체제의 시대이다. 남북관계의 현실, 북한체제의 내구성과 지속성, 동북아 전략 환경 등 제반 요소들은 한반도 통일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통일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일의 상황이 되도록 준비하고 통일을 실현하도록 전략을 짜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예측하고 비전을 설계해보는 작업도 필요하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2020년, 2030년 및 2040년의 세 경우로 상정보자. 2012년 현재 한국의 명목 GDP는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분단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여러 장애요소가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의 명목 GDP는 통일 후 10년이 지나면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7~8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1> 한반도 통일 10년 후 세계 GDP 예상 순위

순위	2030년	2040년	2050년
1	중국(25,652)	중국(45,019)	중국(70,605)
2	미국(22,821)	미국(29,827)	미국(38,520)
3	인도(6,748)	인도(16,715)	인도(38,227)
4	일본(5,812)	브라질(6,631)	브라질(11,366)
5	러시아(4,269)	러시아(6,316)	멕시코(9,343)
6	독일(3,764)	일본(6,040)	러시아(8,564)
7	브라질(3,720)	멕시코(5,455)	통일한국(7,166)
8	통일한국(3,655)	통일한국(5,333)	인도네시아(7,010)
9	영국(3,627)	독일(4,391)	일본(6,675)
10	프랑스(3,306)	영국(4,383)	영국(4,786)

추정근거: Goldman Sachs, *BRICs and Beyond* (November 2007), p. 149 자료 (단위 : US\$ bn)

경제력뿐만이 아니다. 한국이 그동안 진화해온 경제사회 발전의 추세를 준거로 통일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몇 가지 지표로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산정·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표2>에서 보듯이 꾸준히 진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통일한국의 GDP 예상 순위에 따라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추정하면, 2030년에는 10위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7~8권, 2050년에는 5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나라의 지적 능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대학경쟁력의 순위를 보면 2010년 한국은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²⁾ 한국에 앞선 나라들은 1위로 평가된 미국

<표2>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경쟁력 순위	27	32	29	31	27	23	22
*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순위	9	11	10	11	10	8	8
*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순위	10	14	12	13	11	9	9
* G20 국가 중 순위					8	7	7

을 필두로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의 순이었다. 500위 내의 대학 수, 전체 인구 중 대학생 비율, 우수 대학이 대학평가에서 차지한 순위, 국가 경제력 대비 대학투자 등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의 GDP 상승과 남한의 대학 경쟁력 상승 및 북한의 종합대학 등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상승에 따라서 통일한국의 대학경쟁력은 2030년이면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평균수명, 국민소득, 교육 수준 등의 요소를 지표로 삼아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낸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표3>에서 보듯이 2010년에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민소득과 교육 수준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HDI도 상승하여 2030년이면 세계 10위권, 그리고 2050년에는 5위권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표3> 인간개발지수(HDI) 순위

연도	2000	2005	2010	2030	2050
순위	22위	20위	12위	10위권	5위권
지수	0.815	0.851	0.877	0.890	0.900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경제·기업, 과학·기술, 인프라, 정책·제도,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전통문화·자연 등의 영역을 준거로 산정한 국가브랜드 지수에서 한국은 2010년에 세계 주요 50개국 중 종합 18위를 차지하였다.³⁾ 종합순위 1위는 미국이었으며,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호주,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국민소득 향상, 소프트웨어 성장 등의 추세와 통일 후 북한 지역의 대규모 재건사업에 의한 인프라 구축,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 등에 따라 국가브랜드 지수도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2040년에는 7~8위권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산정한 국가선진화지수의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에 OECD국가를 포함한 세계 40개국 중에서 31위를 기록하였다.⁴⁾ 인구규모가 2,000만 명이 넘는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독일 8위, 호주 10위, 프랑스 11위, 캐나다 12위, 영국 13위, 미국 17위, 스페인 20위, 일본 21위, 이탈리아 27위, 중국 39위 등으로 평가되었다. 통일한국은 GDP 등 경제적 측면의 상승, 정치·사회·경제적 국제화 및 문화개방성 등 다문화 공생사회로의 진화 등에 따라서 국가선진화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에는 25위권, 2040년에는 20위권, 2050년에는 15위권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지 충족, 복지 수요, 국민 행복, 경제 활력, 재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복지 지표에서 한국은 2011년에 OECD 국가 중에서 26위를 기록하였다.⁵⁾ 재정과 경제 활력 부문은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으나, 복지 충족(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육지원) 부문과 국민 행복(여가시간, 자살률, 평균수명, 행복도) 부문은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인구 규모가 2,000만 명이 넘는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호주 9위, 프랑스 10위, 영국 11위, 캐나다 13위, 독일 15위, 스페인 17위, 일본 23위, 미국 24위, 이탈리아 25위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 수준은 통일 이전부터 특히 복지 충족 부문과 국민 행복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복지비용의 비율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 증대와 정부의 정책사업 확대에 따라서 복지 수준은 꾸준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 수준은 20위권 후반에서 20위권 전반으로, 그리고 점차 10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4〉는 2020년, 2030년, 2040년에 통일을 성취하였을 경우, 그로부터 10년 후 통일한국의 경제사회 미래상의 일부를 몇 개의 선택적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미래상은 현재의 한국이 달성해온 경제사회 발전과정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아 경제사회 분야는 물론 제반 영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이념, 계층, 소득, 세대, 지역별 갈등 전선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숙한 선진국의 위치에 서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밋빛 미래로만 남겨지게 될 것이다.

〈표4〉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미래상: 경제사회지표 순위

구분	2030년	2040년	2050년
명목 GDP	8위	8위	7위
IMD 세계경쟁력	10위권 진입	7~8위권	5위권
대학경쟁력	5위권 진입	5위권	5위권
인간개발지수(HDI)	10위권 진입	10위권	5위권
복지지수	20위권	15위권	10위권
국가브랜드지수	10위권 진입	7~8위권	5위권
국가선진화지수	25위권	20위권	15위권

Ⅲ. 통일한국의 비전

우리의 적극적인 통일 의지와 통일 역량의 준비, 남북관계의 발전 및 정상화, 국내외적 환경 조건의 성숙 등 제반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지는 평화로운 통일이 2020년대 이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상정해보자. 통일한국은 2030년에 인구 약 7천5백만 명, 영토 면적 약 22만km² 정도로 오늘날의 영국(인구 약 6,300만 명, 면적 24만km²), 독일(인구 약 8,100만 명, 면적 36만km²), 이탈리아(인구 약 6,100만 명, 면적 30만km²)와 상응할 수 있는 규모로 평가된다. 통일한국의 GDP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2030년 이후에는 이들 국가를 상회하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통일이 물리적 국력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는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떠한 국가가 될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통일은 통일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국가도약의 기회를 찾으려는데 있지 않다. 또 그래서 안 된다.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 공고하고도 안정된 평화를 이루고 통일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 모든 영역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한반도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려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지향점을 통일한국의 비전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비전은 국내적 차원에서는 선진일류국가의 실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에 있는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할 때,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세계 평화와 번영의 가교국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선진일류국가의 구현을 지향하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는 아시아의 허브국가(Asian Hub: Bridging World's Peace and Prosperity)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한국의 비전은 정치, 안보와 경제, 자연과 생태, 사회와 문화의 네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선진민주국가를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에 토대를 둔 선진일류국가를 목표로 한다. 통일국가의 공간은 공동체적 자유가 향유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구현되며 남북한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국가의 달성을 추구한다. 이

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번영이 바탕이 되는 경제선진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민주국가는 ‘풍요로운 국가’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평화와 번영의 모델국가로서 비핵·평화·개방국가를 지향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이에 토대를 두어 통일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 모델 국가로의 부상을 지향한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군사위협을 해소할 것인데, 즉 통일한국은 비핵·평화국가로서 세계적 비확산의 모델이 될 것이며, 군사적 위협의 해소 및 군축으로 국제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지역의 견고한 평화를 위한 평화촉진자 및 평화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 및 발전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향한다. 나아가 국제 평화질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국가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지역의 경제통합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한반도는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인구 6억 5천만 명 이상, GDP 7~10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교통망(TKR)과 대륙교통망(TCR, TMR, TSR)의 연결 및 태평양 항로의 연계로 동북아시아 물류가 발전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의 개발 등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모두 이익이 되며 상생하는 번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비핵·평화·개방의 통일한국은 ‘평화로운 국가’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자연과 생태 친화적인 국가를 지향한다. 자연과 생태 친화적인 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자 인류의 미래성장 동력의 원천이다. 통일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균형발전과 친환경의 산업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미래발전의 모델을 제시하고 지향한다. 자연과 생태 친화적인 통일한국은 ‘자연과 어우러진 국가’이다.

넷째, 통일한국은 창조적 문화국가를 지향한다. 오랜 기간의 분단을 극복한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은 국민적 긍지와 자존심 고양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통합된 사회·문화적 동태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통일국가로서의 새로운 국민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고 개방적 국제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통일이전 한류(韓流) 문화의 소프트파워가 그 개방성과 창조성, 세계 지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영 받았듯이 통일한국은 이러한 개방성, 창조성, 세계 지향성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창조적 문화국가는 바로 ‘멋있는 국가’이다.

요컨대, 통일한국의 비전은 구체적으로 선진민주국가(풍요로운 한국), 비핵·평화·개방국가(평화로운 한국), 생태 친화적 발전국가(자연과 어우러진 한국), 창조적 문화국가(멋있는 한국)의 달성을 지향한다.

IV. 통일 가능한 시기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오늘날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적 통일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참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는 주변국들도 통일의 가능성을 당면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사례는 현실적 판단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 또는 시기 예측과는 다른 현실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1950~1960년대에 서독 국민들은 '통일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데 상당히 큰 비중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서독 국민들은 통일을 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서독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내려놓지는 않았으나,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을 극히 낮게 보았다.

<표5> 통일 이전 서독 국민의 통일 인식

년도	통일이 당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①	통일 희망 ②③	통일 실현 가능성 ②③
1952	23%	-	51%
1954	38%	88%	56%
1961	35%	91% (1960)	48%
1965	45%	-	58%
1969	22%	-	13% (1968)
1970	12%	-	18%
1972	1%	78%	12%
1981	1%	79% (1980)	13%
1983	0.5%미만	81% (1984)	5%
1988	0.5%미만	80% (1987)	3% (1987)

출처: ①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Handwoerter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91), p. 277. ② Seike Jansen, Zwei Deutsche Staaten—zwei deutsche Nationen? In: Deutschland-Archiv, 1989년 10월호, p. 1139. ③ Institut fuer Demoskopie, DIVO-Institut, Ifas, Infrayest 여론조사 결과 종합; 국가정보원, 「통계에 나타난 독일통일 20년」(2009. 5), pp. 488-491 표에서 재정리.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서독을 가로 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2년 전인 1987년 동서독의 통일 가능성을 보았던 서독 국민들은 3%에 불과하였다. 1년 전인 1988년 통일을 국가의 당면한 주요 정책과제로 보았던 비중은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은 1989년 11월에 무너졌으며, 1년이 지난 1990년 10월 동서독은 서독의 기본법에 따른 하나의 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으로 통일되었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현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동독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서독의 TV를 큰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동독의 연금수혜자(남: 65세, 여: 60세 이상)의 서독 방문은 1965년도에 이미 120만 명이 넘었으며, 1987년에는 220만 명 이상이었다.⁶⁾ 북한의 3대 권력세습체제와 동독의 공산체제의 지배강도와 체제 내구성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독일의 경험을 준거로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어느 날 갑자기’식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초대 대통령 폰 바이체거의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나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중히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실의 제반 요인들에 준거한 합리적 판단은 한반도 통일 가능의 시기는 여전히 멀리 있다는 결론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통일 이후의 한국에 대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비전은 다른 방식으로도 제시될 수 있으며, 더 좋은 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통일한국과 관련 국내적으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한국에 대하여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에 토대하여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통일한국의 등장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전략 환경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자국의 국가이익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또 통일한국을 달성하려는 국내적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고 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남북관계의 발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통일한국을 말하는 것이 공허할 수

있으며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에 의한 통일한국의 등장을 현실의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와 통일에 대비한 능력을 꾸준히 신장시키고 배양해야 한다.

독일은 분단 41년 만에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했다.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베트남은 분단 22년, 예멘은 분단 28년 만에 통일이 되었다. 남북한의 분단 기간은 이들 국가들보다 훨씬 길며, 1970년대 초 남북대화와 접촉이 시작된 이래 4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정상회담, 총리급회담과 장관급회담 등 600회가 훨씬 넘는 회담과 접촉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은 우리에게 냉철한 반성을 요구한다. 특히 통일을 위한 준비는 국내적 조건의 철저한 구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과 러시아·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율은 23%에 불과하였으며 29위를 기록하였다.⁷⁾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외교**

註

- 1) 1999년의 경우 세계 41위였다. 지식경제부, 「2010년 수출입 실적 및 평가」, IMD, 2010 세계경쟁력 순위 데이터.
- 2) Quadquarelli Symonds, 「QS 세계대학평가」(2010), 「조선일보」, 2010. 9. 8.
- 3) 삼성경제연구소, 「2010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2010. 11. 23.
- 4) 한반도선진화재단, 「2010 국가선진화지수 연구결과」, 2010. 9. 17.
- 5) 「복지백년대계」, 「조선일보」, 2011. 3. 5.
- 6)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 관계의 조명」(서울: 지식산업사, 1988), p. 171 '동·서독 관계에 관한 주요 통계 자료 중 3) 동독 연금수혜자의 서독 방문.
- 7) 「중앙일보」, 2014. 5. 8.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이 수 혁 (전 주 독일 대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1. 서론

유럽의 1989년은 현실이 환상을 뛰어넘는 해였다. 중요한 국제사건은 정치인, 장군, 외교관들이 계획하고 구도를 짜고 통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동독 비밀정보기관 Stasi도, 미행정부도, 크레믈린도, 그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고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던 사건들에 대한 혼돈의 반작용이었다. 자생적인 결과라고나 할까.

세계 제2차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일이 분단된 후 동독은 가장 위험한 모험의 임무를 안고 있었다. 소련이 제어하기 어려운 서독을 포위 봉쇄하는 임무가 동독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 임무는 주권국가라 할 수 없는 국가에게는 수행 불가능한 임무였다. 동독이 민주적 자결권을 가진 국가로 발전한다면 동독은 서독의 품으로 무너질 것이었다. 아테나워 수상으로부터 콜 수상까지 역대 서독 정부는 그들의 동방정책을 '1민족 2국가'에 기초를 둬으로써 소련의 민감성에 부응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지도자들의 판단은 무엇이였을까? 공개된 크레믈린 문서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준다. 만든다.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역사의 인물들은 훨씬 덜 영웅적이었음을 알게 한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독일 통일이 자유민주주의의 입증이며 평화를 증진시키는 길로 보거나 그 길을 설계하는 기회로 보지 않고 위협으로 보았다. 정치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24년 전 서유럽 지도자들의 불안과 걱정은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통일 독일은 사회통합 문제를 큰 인내심을 가지고 다루어왔다. 사회통합과 동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왔다. 통일은 값비싼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통일이 가져온 열매는 통일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II. 베를린 장벽 붕괴 전까지

1945년 얄타협상으로 유럽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의 영향권을 갖게 되었고 서방 동맹국은 그들의 영향권을 갖게 되었다. 얄타협상 후 40년 동안 서방에게는 안정과 번영의 40년을 제공하였으나 동구는 사정이 달랐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크레믈린에서는 외교정책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크레믈린은 동·서독 문제를 사회주의 국가 전체, 사회주의 그리고 소련의 이익에 합당하게 전개시켜야 하며 독일통일문제는 중요한 카드로서 모든 결정권을 소련의 손에 두기로 했다. 1988년 10월6일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의 약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동구 사회주의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간파했다. 1989년 7월17일 헝가리는 국경통제를 해제하여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을 허용하였다. 1989년 9월에는 수천 명이 동유럽 주재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들었다.

1989년은 서구 국가 간의 우호에 상처 깊은 해였다. 1989년 9월23일 대치는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에게 독일통일에 반대하면서 바르샤바조약 지지를 표명하고 동구의 탈공산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소련도 소련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독일 통일 움직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치는 자기의 발언을 기록하지 말고 대외보안을 각별히 당부했으나 소련측 회담 기록자는 대치가 한 말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다.

1989년 10월에 접어들며 크레믈린은 동독사태에 더 불안해졌다. 동독의 호네커가 물러나지 않으면 베를린 장벽으로 사람들이 밀려올 터였다. 결국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는 축출되었다.

계속되는 동독의 시위는 크레믈린을 망연자실케 했다. 고르바초프가 동독사태를 통제할 수 없게 된지 오래되었다. 11월 초에도 소련 정치국은 정보를 얻으려고 허둥댔다. 사태는 시시각각 달라졌다. 50만 명이 동베를린 거리로 모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KGB 국장은 보고 했다. 고르바초프는 동독공산당 의장인 Krenz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였다. 동독이 무너지면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서독의 도움 없이 어떻게 동독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고르바초프

의 고민이었다. 소련 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차라리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자고 제안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서방 지도자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서 크레믈린이 통일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1989년 11월 초에 동독 이주자의 물결이 크게 불어나고 있었다. 11월8일 하루에 11,000명 이상이 동독에서 넘어왔다. 동독 탈출자가 주말인 11월4일 이후 11월8일 까지 거의 5만 명이나 되고 1989년 전체로는 20만 명 이상이 되었다. 이주자 수의 급속한 증가는 1961년 8월13일 난민 물결을 막기 위해 장벽을 쌓았던 극적인 날을 상기시켰다.

11월 4일에는 동베를린에서 50만 명이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그 후로 동베를린의 알렉산더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들었다. 동독 지도부가 사태를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Ⅲ. 베를린 장벽 붕괴

11월9일 드디어 동독은 “당장이라도 모든 사람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여행해도 좋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벽이 붕괴되었다. 동독 공산정부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대량 난민이 서독으로 몰려오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였다. 그럼에도 독일인들은 지금이 통일을 이룰 시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의 바퀴는 통일의 길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극적인 세계사가 기록되고 있다고 믿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공산주의의 붕괴, 냉전의 종식, 그리고 독일뿐 아니라 소련 탱크로 분할된 유럽의 통일을 알리는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에 즈음하여 소련은 기존 조약의 유지, 국경 불변성, 미·소·영·불 등 4국 권리와 책임을 주장하였다. 독일은 불간섭 원칙, 동독에서 인권·국제법 원칙 인정, 통일에 대한 자결권 인정, 긴장완화 과정에 서베를린 포함 등 4개항을 주장하였다.

1989년 11월15일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독일통일 문제는 ‘오늘’까지도 전혀 현실정치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제3자의 여러 가지 발언은 동독과 서독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독일 통일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개 언급이었다. 분석가들은 고르바초프가 독일통일이 가능한 시점을 50년 후나 100년 후로 보지 않은 채 단지 오직 ‘오늘’을 배제시켰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1989년 11월 중순 주말에 서독을 방문한 동독인의 수는 300만 명에 이르렀다.

동·서독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일분단이 실질적으로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아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독의 새로운 지도층들은 여전히 동독을 향한 민주주의 요구가 사회주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의견이 다르며 그러한 민주주의는 후손들이나 시도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1989년 11월에는 동독의 여러 도시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관례가 되었다. 라이프치히의 11월20일 월요 집회에는 25만 명이 참석하고 여타 도시에서도 수만 명이 데모를 하였다.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구호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도 같은 독일 국민이다”라는 구호는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독일 국민이다”로 발전되었다. 불꽃이 당겨지기 시작했다.

1989년 11월 하순, 서독정부는 크레믈린 내부 검토보고서를 입수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와 동독 사태 관계, 서독 정부의 대동독 및 대소 정책, 서독의 영향력, 독일 통일과 관련된 EC 및 나토의 입장, 평화조약, 통일 형태, 국가연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독일문제에 관한 모든 가능한 방안과 입장을 검토한 보고서였다. 소련의 지도부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검토가 이미 얼마나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된 서독 수상 콜은 흥분과 함께 조급증까지 느꼈다. 서독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간 것이었다. 콜과 그의 보좌관들은 고르바초프와 그의 고문들이 통일의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면, 서독 정부는 더 이상 조용한 방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할 절호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였다.

1989년 11월22일 유럽의회에서 콜 수상은 통일을 목표로 하는 독일인의 자결권을 강조했다. 11월21일 미국을 방문한 독일 외무장관 겐서는 미국으로부터 자결에 의한 통일을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11월23일 유럽 의회는 동독 국민들에게 통일된 독일과 통일유럽의 부분이 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독일 통일의 목표가 국제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얻어 가기 시작했다. 독일은 이제 공개적으로 통일을 주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모티브를 얻게 되고 동시에 확산되어 갔다.

소련 내에서 독일문제에 대한 심각한 검토에 자극을 받은 콜 수상은 11월23일 극비리에 행동 강령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작업팀은 동독의 상황과 전망, 소련의 대외정책 환경, 미국의 정책, EC 회원국 입장 등을 분석했다. 또한 조약공동체, 국가연합, 국가연합적 구조, 하나의 연방 안 등을 검토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등 통일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조치를 검토했다. 점차적으로 이 단계들이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며 10개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특별히 논쟁이 된 것은 국가연합적 구조와 하나의 연방 제안 문제였다. 콜 수상은 ‘국가연합적 구조’의 발

전이 오직 '연방' 형성의 과도 단계로서만 생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연합'의 잠정성격이 더 강해지게 되었다.

통일 시기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 콜 수상은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5년 내지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일이 20세기 말에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사의 행운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내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너무 빠른 통일과정은 거의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동독공산당이 남겨 놓게 될 '유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콜 수상의 걱정은 예상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신문화적인 문제와 법적 동화와 같은 문제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경제적 회복보다 독일의 노력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11월27일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의 단계적 계획에 대한 구상 10개항을 발표하였다. 동·서독 간의 협력, 조약공동체 구축, 국가연합적 구조 발전, 연방국가로 재통일 등 이 10개항에는 (1) 동독과의 협력 속에서 통일에 이르는 길 (2) 통일에 대한 국제적 수용의 틀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모든 것이 변하였다. 장벽 붕괴 후 독일 통일 논의가 본격화되고 콜 수상이 10개항을 발표한 것에 자극을 받아 고르바초프의 독일 통일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강경으로 바뀌었다. 고르바초프는 겁을 먹기 시작했다. 서방 특히 서독정부의 승리주의에 대해 격노했다. 고르바초프는 미국이 서방의 가치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강요하려고 한다고 불평하였다. 또 콜 수상이 통일을 재촉한다고 공격했다.

고르바초프뿐만 아니라 미테랑과 대처도 사태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처는 말했다. “나는 통일까지는 긴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전 유럽은 통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가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켰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나는 독일을 너무 좋아하여 두 개의 독일을 원한다”고 했다. 폴란드 등도 불안했다.

예기치 못한 분단 종말의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적시에 방향을 확정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직관력이었다. 콜 수상의 부추김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16일 전인 1989년 10월24일 부시는 언명하였다. “나는 통일 독일에 대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

서독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은 서독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소련을 달래고 안심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통일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속히 다가온다.” 이런 전제하에 미국의 대담한 정책은 진행되었다.

실상을 속이고 걸만 번지르르한 포퓰리즘과 같은 동독은 무너지고 있었다. 하루 2,000명, 매월 6만 명의 동독 이민자들이 서독으로 몰려들었다. 1961년 베

를린 장벽을 쌓게 만들던 때보다 두 배가 더 많은 것이었다. 1989년 12월2일, 말타에서는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의 미·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최초의 회담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미국이 동구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독일을 중립국가가 될 것인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인가 등의 논의는 시기상조다. 통일과정을 두고 보자. 너무 밀어붙이지 말자. 독일 분단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다. 역사의 문제였다. 미래에도 역사가 결정하게 하자.” 속도조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부시는 “독일사람들은 통일문제를 얘기할 때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고 하며 독일사람들의 꿈을 설명했다.

1989년 12월에도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문제에 대해 “두 개의 독립된 독일국가의 실존은 반드시 ‘전후에 일어난 현실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안정하게 될 위험을 안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반면에 콜은 동독인을 향해 외쳤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우리는 함께 속해 있다. 오늘 이 변화과정의 내용과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며, 동서 유럽의 다른 사람들도 아니다. 동독의 발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녹색 식탁보를 깔 탁상에서나 또는 회의 일정 캘린더를 손에 쥐고 계획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989년 말까지의 사태발전을 보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헤엄쳐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커다란 장애물은 두 독일이 상이한 동맹 소속에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것이 유일한 실제 문제점이었다. 자칫 독일의 중립화라는 위험이 존재했다.

1990년이 되어서도 계속 밀어닥치고 있는 동독 이주자 문제는 서독에게 큰 두통거리였다. 1989년에는 72만 명 이상이 서독으로 넘어 왔으며, 이 중 34만여 명이 동독 출신이다. 1990년 1월8일 하루에도 2천여 명의 이주민과 9천 명의 난민이 있었다. 동독 이주민의 급증은 서독에서 통일에 대한 희망의 분위기를 급변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주자문제는 동독에도 큰 문제였다. 매일 2천 명이 나라를 떠나는 마당에서는 경제가 회생될 수 없으며 경제가 개선될 수 없다면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서방으로 이주할 것이었다.

1990년 1월이 지나면서 동독의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주민과 난민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통일 이외의 차선택들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였다. 고르바초프는 (1) 소련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고 (2) 영토의 현상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바르샤바동맹국의 내적 개혁을 인정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동독에서의 사태 전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었다. 봉

괴할 가능성이 있는 동독의 상황은 정치적이고 영토적인 차원에서의 전후 유럽질서를 새로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었다.

동독의 와해 가능성이 더 이상 배제될 수 없었다.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계선을 다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력을 투입하는 것 역시 파국을 초래할 것이었다. 동독인이 통일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통일 이외의 차선책은 점점 적어지고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5월6일로 공포된 동독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990년 1월15일 동베를린에서의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구 슈타지 본부가 습격 당했다. 수 만 명의 사람들이 건물을 폐허로 만들었다. 다른 도시에서도 수십만이 시위를 벌였다. 최초의 파업이 일어났다. 파국적인 상황이 매우 우려되었다.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한 독일은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서구 국가들이 가지는 독일인의 민족적 독주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했다. 폴란드가 여전히 갖고 있는 오데르-나이세 국경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노력이 필요했다. 독일통일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독일 국경선 불변을 확신시키는 일이었다.

1월22일(월) 동독의 많은 도시에서 또다시 시위가 있었다. 주요 슬로건은 ‘사회주의통일당(동독공산당) 타도’와 ‘독일 조국통일’이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10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에 가담했다. 독일의 통일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취하는 새 정당들과 지지자들이 동독 안에서 늘고 있었다. 서독은 중립을 대가로 하는 민족통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

1월 하순에도 독일 통일의 조기 실현에 반대하는 대치의 입장은 불변이었다. 1990년 1월26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대치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대치는 지금까지의 자세를 포기하고 독일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만일 독일 통일이 너무 빨리 온다면, 이것은 아마도 고르바초프에게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각할 수도 있을지 모를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재난이 된다. 독일 통일은 모든 요소가 고려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통일은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고르바초프에게는 가장 온당치 못한 일이 될 것이다.”

1990년 1월28일 시위의 확산 속에서 동독에서의 선거가 3월18일로 두 달 앞당겨졌다. 동독의 위기는 계속 첨예화되고 국가는 계속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경제상황은 파업과 휴업 등으로 점점 더 위협에 처해지고 있다. 1월30일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 연설에서 중부유럽 지역에 있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를 19만5천 명

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르바초프는 동유럽으로부터 철군의 명분을 얻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열렬한 환영의 기분은 아니었지만 동의하였다. 부시의 제의가 현실이 된다면, 소련은 소련군의 반을 동독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독일 통일은 그러한 전 유럽적인 해결의 콘서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선전환에 근거하여 독일통일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현실로 다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실무작업 팀을 설치하여 이제 급격하게 터져나올 사유재산권 청구와 법적 동등화 문제, 이주자 문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1월 말부터 경제와 통화통합에 관하여 서독에서는 논쟁이 시작되었다. 서독 재무성은 통화통합을 위한 3개의 방안을 검토하였다.²⁾

그러나 1990년 2월의 상황을 볼 때 동독은 붕괴상태에 처해 있고 곧 위급한 지불금 부족 위기를 맞을 것이므로 어차피 서독정부가 결정하고 책임도 떠 맡을 수밖에 없었다. 피를 연방은행 총재는 주장했다. “단계적인 전진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경제와 통화통합을 위한 모델만이 현실적이다. 엄청난 지불 기여금이 요구될 것이지만, 이런 큰 숫자에 경악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독일이 오늘보다 더 부유해지게 될 것이다. 통화통합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 사람들이 이주하고 동독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결정에 이제 ‘좀스런 소매상 심리’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

1990년 2월1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소련·독일 정상회담에서는 독일통일의 내적, 외적 사항이 주제가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 “소련, 서독, 동독 사이에는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하등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는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동독인과 서독인들은 그들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냈고, 독일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역사적 발언이었다.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에 찬성하였다. 또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콜의 입장으로 보아 중립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독일 국민을 욕되게 하는 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독일의 군사적 위상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숙고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모색해야 한다.”

장벽 붕괴 후 불과 3개월 만에 고르바초프의 독일통일 동의는 통일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활력이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통일의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제반 현실을 수용하였다. “고르바초프는 그의 손님 헬무트 콜에게 독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를 넘겨주었다.”³⁾ 그러나 여론 조사에서는

서독 국민들 사이에 자신들이 통일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가까워지면서 서독인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자신들의 문제로 점점 크게 보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가 독일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후 군사적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1) 나토 관할권이 동독 지역까지 확대할 것인지 여부, (2) 서독 군대의 동독 지역에 주둔 여부와 그 규모, (3) 소련 군대의 독일 주둔 기간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였다.

1990년 3월5일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고 소련과 서구 국가들도 독일 통일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게 되자 서독 정부 내에서는 통일이 적용될 기본법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기본법 제23조⁴⁾와 기본법 제146조⁵⁾에 대한 찬반을 토론했다. 제23조는 영토조항으로 동독의 5개 주가 독일 연방에 편입하는 내용의 조항이며 초대 수상 아데나워와 그 후 기민당의 흡수통일 노선의 기반이었다. 제146조는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 독일에 적용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모두들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 통일을 실행할 것을 찬성했다. 흡수통일이었다. 동독에서는 이날 원탁회의에서 기본법 23조에 따른 ‘연방 독일에 동독이나 개별 주(州)들이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다.

서독정부의 경제 통화 사회 통합계획은 착실히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1990년 3월14일 서독 정부는 동독의 소액 예금 자에 대해서 1대1로 교환해 주기로 의결했다.

1990년 3월18일 동독 선거에서는 ‘독일을 위한 동맹’ 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93.38%라는 높은 투표율에서 동맹당은 192석을 차지했다. 반면 사민당은 88석, 자민당은 21석이었다. 콜은 좌우 극단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만족했다.

4월30일 베를린에서 2+4 실무회담이 열렸다. 6개국의 대표단⁶⁾은 앞으로 개최될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룰 네 가지 주제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즉 (1) 국경문제 (2) 정치 및 군사적 문제 (3) 베를린 문제 (4) 국제법적 절차와 4강국의 권리와 의무의 종결 등이다.

7월1일 동·서독이 경제·통화 및 사회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그 후에도 고통스러운 적응이 요구되겠지만 독일의 경제적 통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성장력이 추가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예측들이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세금을 인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콜은 말했다. 세금인상은 지금 동·서독이 경제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투자와 사업의욕을 위협하게 될 뿐이며 오늘의 독일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도전을 극

복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1990년 5월18일 서독 국무회의에서는 통화·경제·사회 통합 협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협정은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는 것이었다. 이 날 오후에는 이 조약이 동·서독 간에 서명되었다. 조약이 서명된 샤움부르크 궁전의 옛 국무회의실에는 감동과 기쁨이 흘러 넘쳤다. 독일통일의 실제적 실현이 시작되었다. 이제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과 동·서독 통합선거가 멀지 않게 되었다.

유럽에서 독일 통일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도 심각한 문제는 오데르-나이세 국경문제였다. 독일 정부는 2+4 협상의 틀 안에서 독일을 심하게 격동케 하는 결단, 즉 오데르-나이세 국경 승인 앞에 서 있었다. 독일 국민의 대다수는 이미 오래 전에 이 국경을 인정하였으나 일부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일의 통일도 없다는 사실에 독일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1990년 6월21일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1990년 5월18일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국가조약, 통화 경제 사회 통합의 수립, 독일 통일의 외부적 사항과 그리고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경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 역사상 이 날처럼 독일이 중요한 결단 앞에 서게 된 적이 드물었다. 국가조약안과 오데르-나이세 국경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독일의 국가적 통일을 재창출하는 길에서 결정적인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었다.

1990년 7월1일 통화 경제 사회 통합에 관한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이 발효되었다. 또 양 동·서독 국경에서는 어떤 종류의 통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로 가는 길에 하나의 결정적인 발걸음이며, 독일 민족의 역사에 있어 위대한 날이었다.

1990년 7월5일 런던에서 나토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독일통일과 유럽의 안보문제로 각국 간에 입장차이를 조정해온 그 간의 성과물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회의였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측은 이전까지의 서방측 핵전략의 핵심이었던 소위 '유연한 대응(flexible response)'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최종적인 방어수단으로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소위 '런던 선언'을 공표하고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선포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한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을 겨냥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나토는 한편으론 소련 내부의 전통주의자들의 안보 위기감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론 고르바초프의 국내정치 입지를 공고화시키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바르샤바 조약국들에 대한 주적 개념을 폐기하였던 것이다.

1990년 7월14일 콜은 고르바초프와의 정상회담을 위하여 모스크바로 출발하였다. 콜 수상의 가장 중요한 외국 여행이다. 통일로 향해 가는 길에 놓인 두 가지 결정적인 장애물이 아직도 극복되어야 한다. (1) 하나는 4강국이 독일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2) 다른 하나는 나토에 있어 통일된 독일의 완전한 회원 자격이다. 7월15일 역사적인 소련·독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콜은 “비스마르크는 역사의 외투자락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역사적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말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콜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동독의 사정을 설명했다. “동독의 사태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당초 시간 구상과 전혀 다르게 되었다. 통일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더 많으면 오히려 나에게는 좋겠지만, 동독의 경제적인 몰락은 극적이다. 그 때문에 12월2일에 있을 전독(全獨) 총선은 매우 중요하다.”

콜 수상은 2+4 회담과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적 범위를 엄수하려 한다면 협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세 영역에 대해서 말했다. 즉, (1) 동독으로부터의 소련군 철수의 이행, (2) 나토에 있어서의 통일된 독일의 회원자격 (3) 통일된 독일의 군사력의 상한선 등이다. 덧붙여 콜은 2+4 회담의 마지막에 독일의 완전한 주권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고르바초프는 “만물은 흐르고 변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옛말을 들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미국·소련 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는 일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했다. 부시가 소련에 대한 관계를 새롭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특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 미국 행정부에 대한 콜 수상의 영향력이 매우 효력을 냈다. 내가 유럽에 있어 미국의 주둔은 안정에 이바지한다고 말하자 부시는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⁷⁾ 고르바초프는 런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소련은 더 이상 나토의 주적이 아니라는 선언은 정치적 진전이며 나토의 근본적 개혁의 증거로 간주한다고 했다.

고르바초프는 2+4 테마로 넘어갔다. “(1) 국경선 불변경 (2) 독일의 화생방 무기 불보유 (3)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동의 및 나토의 군사적 구조의 동독으로 확장 불가 (4) 동독 내 소련군 주둔 경과규정 필요 (5) 4국의 권리 이양 지지를 언급하였다. 고르바초프는 통일된 독일의 나토 회원자격은 법률상으로는 분명한 것이나, 실제상으로는 나토의 적용범위가 동독 영토에까지 확대되면 안 되며, 경과규정이 있어야 한다.”⁸⁾ 두 번째 놀라움이 곧 이어졌다. 고르바초프는 2+4 회담의 종결문서가 과도기간 없이 미·영·프·소 4국의 책임의 종료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단 3년 내지 4년 기간으로 동독지역에 소련군이 체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약으로 합의할 것이라 했다. 고르바초프는 “지금의 소련의 상황은 존 리드(John Reed)의 저서 「세계를 진동시킨 열흘」⁹⁾ 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군사문제가 타개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진술이 그토록 분명하리라곤 독일 측은 기대

하지 않았다. 콜에게 이 회담은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승리였다.

양 정상은 모스크바 회담을 마치고 다음 날 비행기로 모스크바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코카서스의 고르바초프 고향 스타브로폴을 방문하고 다시 셀렘츠크(Selemtschuk)강의 계곡에 있는 아르히츠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가진 회담은 모든 미결 문제들을 타결하는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독일 연방군 부대가 독일 통일 후 즉시 구 동독 지역과 베를린에 주둔할 수 있고, 이 부대는 소련군의 철수 후에 나토에 통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제 통일된 독일의 군사적 위상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독일이 통일된 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임은 이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이 위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세바르드나제의 보좌를 받은 고르바초프였다.¹⁰⁾

1990년 8월22일 동 베를린에서는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990년 10월3일부터 효력 발생하는 동독의 기본법 적용 영역에 가입안이 가결되었다. 독일 통일의 날이 드디어 10월3일로 확정되었다. 전쟁이나 유혈 혁명과 폭력이 없이 통일되는 것이다. 콜은 불과 11개월 전인 1989년 11월 통일은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의 시간대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니 그 보다 3~4년이 빨라진 것이다.

통일의 날 하루를 앞둔 10월2일 독일 연방수상 헬무트 콜은 연방군 비행기로 본에서 베를린 템펠호프로 직행했다. 처녀비행이었다. 독일 연방수상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 비행기로 직접 베를린으로 날아갔다. 저녁 9시에 동베를린의 샤우슈필 하우스에서 축하 음악회가 열렸다. 쿠르트 마주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했다. 제국 의사당 앞에는 200만 명이 운집하였다. 1990년 10월3일 자정에 연방 국기가 올라갔다. 독일인들은 독일 국가를 불렀다. 동·서독이 통일이 된 날이었다. 독일은 통일되었다.

IV. 결론

고르바초프에게 역사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러나 통일을 밀었던 콜과 부시에게는 역사는 보이는 손이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일에 반대했던 대처와 미테랑은 보이는 손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 통일을 소련의 손으로 막아보려 하였다.

1990년 12월2일 말타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사람들은 통일문제를 얘기할 때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고 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독일인들의 열정과 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었다. 독일인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미국 대통령이 충심에서 이해해주고 통일을 이루어 독일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야 함을 그 이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독일은 미국을 더 이상 설득시킬 필요가 없었다.

대처는 고르바초프에게 독일의 통일은 영국과 소련의 이익이 아니라며 통일에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독일이 통일로 향하는 움직임을 중단시키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1989년 11월10일 브란덴부르크 문이 열린 날 밤 서베를린과 포츠담을 잇는 그리니케 다리 위에 있었던 월터스 주독 미국 대사는 “나는 군인 출신으로 네 차례나 전쟁에 참가했지만 이 날 밤처럼 많은 남자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동독 내에서의 체제와 집권자에 대한 거부, 대규모 시위, 탈동독 이주민들의 폭주,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공감대, 통일에 대한 꿈, 치밀한 동방정책의 지속 등 서독 지도자들의 원리와 불도저 같은 추진력, 주변국 관리 및 설득, 서독의 강력한 국력 등 내부적 요인과 소련과 동구에 붙어 닦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미국의 조기 입장 결정과 압도적 영향력, NATO의 굳건한 지역안보시스템, 당시 EC의 통합 기운 등은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였고 이런 국내외적 조건은 결국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중심 양대 국가의 반대를 좌절시킬 수 있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위기의 국면에 있을 때 콜의 대응은 아주 노련했다. 한 때는 콜이 너무 감정적이고 서두른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절호의 통일 기회를 포착하는 지도자의 비전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불과 보름도 안 되어 그 동안 사실상 금기시했던 통일 논의가 전광석화처럼 분출되었고 통일은 시간의 문제가 되었다. 또한 유럽에는 독일의 묶어둘 두 개의 큰 지역조직 즉 NATO와 유럽공동체(EC)가 있었다. 독일 통일은 매우 정교한 건축이었다. 독일통일과 유럽발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설계를 거부하는 국가는 없었다. 유럽발전은 곧 NATO와 유럽공동체의 발전이며 이 두 조직에 통일 독일의 참가였다. 독일이 이 두 조직에 묶여 있는 한 독일은 역행하여 유럽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는 틀 속에 있는 것이다.

통일 방식과 관련하여 독일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흡수통일이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동독의 체제붕괴로 서독과 1:1의 통일이었지만 동독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대등한 통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상 동독은 붕괴하여 소멸하는 지위에서 백기투항한 것이었다. 기본법은 다행히 통일에 융통성을 갖기 위해 상호 합치되지 않는 조항을 설치했다. 제23조는 동독이 독일연

방에 가입하는 형식이고 제146조는 통일헌법 제정 방식이며 제116조는 1937년 독일제국 당시 독일국적자를 연방국적자로 인정을 하였다. 영토조항과 국적조항이 합치되지 않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동독은 서독의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면서 동독 주민은 서독 국민으로 간주되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 방식도 동독의 서독으로 흡수통일 방식과 새로운 헌법 제정을 통한 통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¹¹⁾

독일 통일 과정에서 그 당시 주요국가의 지도자들의 개성은 눈 여겨 볼만 했다. 부시와 베이커 국무장관,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 콜과 쟈셔 외무장관, 대처, 미테랑 등 그 당시 각국 지도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관철하려는데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모두 어려운 대화 상대이긴 해도, 인상적인 자극을 주는 인물들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대변하고 대화 상대의 있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고려치 않고 말하는 인물들이었다. 지식을 갖고서 매사에 아주 잘 준비하고 있었으며 정확하게 질문하고 대화 상대의 말을 귀를 기울여 확실하게 듣고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친구를 모른다. 적도 모른다.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안다”는 것이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의 덕목이라면 당시 독일 통일에 참여한 지도자들의 경륜에서 이 덕목을 볼 수 있었다.

통일과정을 서독이 시종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의 경제력이 지렛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서독은 소련이 1990년 1월 쇠고기 등 생필품 지원을 요청하자 우호가격으로 이를 즉시 제공하고 1990년 5월 요청한 차관도 즉시 보증해주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련에게는 미래의 경제관계가 통일 독일의 나토 소속문제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서독은 판단하여 나토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였다. 동독에 대하여도 역시 모든 동독의 경제적 어려움을 떠안을 각오로 경제통화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였다. 이런 형국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동독이 서독에 따라가는 이외의 대안은 있을 수 없었다. 서독의 눈부신 라인강의 기적의 결과가 흡수통일이라는 평화의 대서사시를 만들 수 있었다. 독일이 서방에 강력하게 통합되면 될수록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이 더 커지고 독일이 유럽의 중앙에서 소화되지 않는 방해물로 될 위험도 더 적어진다는 논리는 소련에게는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였다. 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바로 독일인들이 소련을 위해서 필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서독의 힘과 지도력은 충분하였다.

1990년 5월4일 베를린을 방문한 미국무장관 베이커는 서독정부에게 부시 대통령이 동독 수상 데 메지에르를 초청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통보했다. 동독의 데 메지에르와 그의 각료들에게 그들이 서독의 연방정부와 대등한 동반자로서 대접받

고 있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문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¹²⁾ 물론 콜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서독정부가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상황판단과 정세 분석, 이에 기초한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치는 훌륭한 것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 고르바초프가 겪고 있는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를 신속히 지원하는 결단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사안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만한 판단력과 결단력, 재빠른 기회포착,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는 행동이 서독이 주도하는 통일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나토의 문제와 관련하여 서독의 입장은 소련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 소련이 독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토의 작은 회원국들도 통일독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고자 하는 상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렇기에 그 문제의 해결은 독일이 나토를 탈퇴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토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었다.¹³⁾

독일은 전후에 상실한 오데르-나이세 동쪽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용적인 입장을 취했다. 폴란드 국민과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화해를 얻기 위해 무척 애썼다. 빼앗긴 영토의 회복 포기는 정치인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국가 간의 미묘한 문제의 협상에서는 선후의 문제가 항상 협상의 장애물이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노련한 협상가에게도 답이 없을 때가 많다.¹⁴⁾

통일 과정에서 소련의 입장은 경우에 따라 롤러코스트를 탔다. 그 배후에는 그로미코 외상 때부터 20년간 동서 군사문제를 다루어온 소련의 잘 알려진 독일 마피아 즉 독일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냉전시대에 서방세계를 옥죄는 정책을 입안한 전문가들이었다. 독일통일과정에서는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판단에 가끔 사보타지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도자들이 외교 군사 실무 전문가들을 다루기 어려운 것은 소련만이 유일한 것은 아닐 것이었다.

1990년 7월15일 모스크바의 독·소 정상회담으로 독·소 관계가 발전하고 있을 때 독일에 대한 불신이 워싱턴에서 일지 않았다는 사실이 독일 통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고 콜 수상은 술회했다. 탄탄한 미국·독일 관계가 소련·독일의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외교**

註

- 1) 1787년 러시아에서 예카테리나 여제가 새로 합병된 크림반도로 시찰을 갔는데, 그 지역의 지사인 그레고리 포템킨이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가짜 마을을 만들어 그 지역이 마치 훌륭하게 개발된 듯 눈가림을 하였다. 이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용어인 '포템킨 마을'은 따라서 실상을 속이고 결만 번지르르한 것을 가리키거나 임시방편적인 것을 가리킨다.
- 2) (1) 경제개혁 시행 후 통화통합 (2) 독일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 간의 고정환율 확정 (3) 동독에서 독일 마르크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 등이다. 동독의 화폐와 재정정책은 이 경우에 곧바로 서독 연방은행에 종속되어야 하며, 동독은 서독의 경제질서를 수용해야 한다.
- 3) 쥐트도이체 차이퉁 특파원 보도 내용이다.
- 4)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 제23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법은 우선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 지역 내에 유효하고 독일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독일연방에 편입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서 언급된 독일의 다른 지역이란 동독, 오데르-나이세 동쪽 지역(폴란드 영토로 편입된 지역)을 말한다. 1949년 기본법 제정 당시 동·서독은 4개 연합국 문할 신탁관리 체제 하에 있고 영토적 야심을 갖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하여 오데르-나이세 동쪽 지역의 영유권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5) 기본법 146조는 다음과 같다.
“이 기본법은 독일 통일과 자유가 달성된 후 전체 독일국민에게 적용하며, 독일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신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기본법 제116조는 국적 조항으로 요지는 “1937년 독일제국 당시 독일국적 소유자 및 배우자, 비속은 독일국적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동독 주민과 폴란드, 체코, 소련 등 동유럽에 흩어져있는 독일계 이주민 모두 서독 국민이라는 의미이다. 1990년 10월 통일 이전 동유럽과 소련에서 탈출한 모든 독일계 난민을 서독 국민으로 간주하여 영사보호를 하고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 6) 소련 외무부의 서유럽 담당 3과의 책임자인 알렉산더 본다렌코가 소련 대표단을 이끌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그는 독일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가 대머리인데도 교조주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는 <쇠대가리>로 통한다. 본다렌코·팔린·샤라닌·포르투갈로프 그리고 크비친스키 같은 독일 마피아(소련의 독일 전문가)들은 이미 그로미코 외무장관 시절부터 중요한 부서에서 활동해 왔는데, 이들이 지금은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를 자문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 외교관들은 현재 독일이 겪는 문제들 중 일부가 이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전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 7) 고르바초프가 유럽주둔 미군의 긍정적 역할 발언은 김대중·김일성 남북정상회담 시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하는 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반응과 흡사하다.
- 8) 이 부분의 발언 상황을 텔릭 외교보좌관은 그의 저서 「329일 - 베를린장벽 붕괴에서 독일통일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아주 조용하고 진지하게 고르바초프는 독일이 계속 나토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 놀라운 뜻밖의 언명에 대해 연방수상은 이렇다 할 미동도 없이 반응했다. 이에 반해 나의 불펜은 종이 위로 날듯이 쏘내려 갔다. 극도로 집중하면서 나는 통역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원본대로 붙잡으려고 했다. 추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낱말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고르바초프와 콜의 얼굴에서 반응과 감정을 읽어내려고 시도했다. 두 사람은 극도로 조용하고 정신 집중적인 모습이었다.”
- 9) 존 리드는 1917년 혁명 당시 한 잡지사 특파원으로 러시아에 근무할 때 혁명의 현장에 있었으며 그 때 목격한 내용을 쓴 책이다. 리드는 귀국하여 미국 공산당을 창설하였다.
- 10) 모스크바와 아르히즈 회담의 결과는 8개 조항으로 공표되었다.
 - (1) 독일의 통일은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그리고 베를린을 포함한다.
 - (2) 통일 성취 이후 4국의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소멸된다. 통일된 독일은 그 통일의 시점에 완전하고 무제한적인 주권을 얻는다.
 - (3) 무제한적인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통일된 독일은 동맹체 가입 여부와 가입동맹체의 선택을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콜 수상은 통일된 독일이 대서양동맹의 회원국이 되고 싶어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 (4) 통일된 독일은 3년 내지 4년 이내에 중요하게 될 동독으로부터의 소련 군부대 철수문제 해결을 위한 쌍무계약을 소련과 체결할 것이다.
 - (5) 나토는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동독 지역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나토에 통합되지 않은 독일 연방군의 부대는 독일 통일 후 즉시 동독 지역과 베를린에 배치될 수 있다.
 - (6) 동독 지역에 소련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안 세 서방국의 군대는 베를린에 주둔하여야 한다.
 - (7) 독일 연방정부는 진행중인 빈 협상에서 통일된 독일의 병력을 3년 내지 4년 내에 37만 명의 인원으로 감축하겠다는 이행임무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 (8) 통일된 독일은 화생방 무기의 제조, 보유 및 사용을 포기할 것이고, 핵확산금지 조약 가입국으로 남아있다.

- 11)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였고 국적문제는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통일의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리고 제5조 ①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화 통일을 규정할 뿐 통일의 구체적 방식을 예시하지는 않았다.
- 12)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과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한 소련과 동독에 대해 차별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배려를 함을 보았다.
- 13) 독일의 통일과 나토 잔류는 나토 성격의 전환에서 가능했다. 소련에 대항하는 군사적 동맹에서 정치적 동맹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통일 과정과 병행되었다. 독일이 소련을 설득한 기본조건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1) 당사자 모두의 안보 증진 (2) 독일통일을 유럽의 안정된 평화질서의 초석으로 삼는 미래 지향적 해결책 창출, 이 두 가지였다. 중립국가, 비무장화, 군사동맹, 탈동맹 등은 낡은 사고 방식이었다.
- 14) 1990년 6월22일 미테랑과 콜은 독일 빙겐-뷔테스하임에서 배를 타고 라인강을 따라 아스만스하우젠으로 갔다. 그곳의 유명한 호텔 크로네에서 식사 도중 미테랑은 자신이 독일군에 전쟁포로로 지내던 시절의 일화를 얘기했다. 포로들은 수용소 담을 사이에 두고 물물교환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금으로 된 핀을 담배와 맞바꾸는 것이다. 담장 때문에 직접 교환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누가 교환대상 물품을 먼저 담장 너머로 던지느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었다. 일종의 심판관이 나서서 셋까지 세면 두 사람이 동시에 던지기로 했다. 그러나 그 방법 역시 위험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미테랑은 당시의 동·서 사이의 대화와 비교했다.

예멘 통일의 시사점

유지호 (전 주 예멘 대사)



I. 서문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아라비아 반도 남서단에 위치한 남북예멘이 협상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많은 한국인들은 박수를 쳐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후 4년 만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보도에 접하자 재 분단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전의 원인을 묻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아마도 묻지 않는 주된 이유는 예멘의 분단 배경이 복잡하고 특이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본고는 1994년 내전을 겪고 18년 후 다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 관한 약간의 설명에 이어, 33년간 대통령을 역임한 압둘라 살레를 퇴출시킨 이른바 ‘아랍의 봄’의 파장과 혁명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출된 압드 라부 만수르 잠정 대통령이 국내외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전망을 짚어보려고 한다.

II. 통일 전의 남예멘 1986년 내전

1986년 남예멘의 내란은 1967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래 남예멘이 직면하였던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였다. 이 내란은 다행히 그 정변이 남예멘의 경제와 군사력을 지탱해오던 소련의 구·신정부가 교체되는 기간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련의 긴급대처로 남예멘 정권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내전의 와중에서 1986년 초 출범한 남예멘 사회당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었다. 당시 남예멘 온건파의 지도자 알리 나세르 무함마드(Ali Nasser Muhamad) 대통령세력과 예멘사회당(YSP)을 다시 장악하게 된 과격파의 지도자 알-파타 이스마일 당서기장 세력간의 권력투쟁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의 실권을 잃게 된 알리 나세르 무함마드 대통령이 이스마일을 비롯한 당 정치국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 선제공격은 반대파 당간부 4명을 제거하였지만, 일부 군부의 반격으로 일주일간 포격전이 계속되고 양측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결국 알리 나세르 무함마드 대통령이 북예멘으로 망명하는 사태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역경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과격파 계열의 사회당 정치국원 알-바이드(al-Baidh)는 도주하는 바람에 화를 면하였다.

내란 발발시 해외여행 중이던 알-아타스(Haydar Abu Bakr Al-Attas) 당시 수상은 소련을 거쳐 귀국한 다음, 국가원수 및 당서기장의 자격으로 북예멘을 비롯한 주변국을 방문하여 선린관계 수립에 주력하였다. 북예멘이 내란상태에 빠진 남예멘에 대해서 공격을 가해올 징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예멘 지도자들의 대북 자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련과 남예멘은 북예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당시 남예멘의 수뇌는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공식발표는 사망자의 수를 4,330명으로 잡았고 내전 중 남예멘은 무정부 상태로 빠졌었다. 내전 끝에 알리 무함마드 남예멘 대통령은 이디오피아를 경유, 북예멘으로 망명하였으며 약 2만 명의 남예멘인들이 월북하였다. 내전으로 인한 아덴 시내 건물 및 경제 시설의 손실은 수개월 후 새 대통령에 의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미화 1억2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외국 관측은 그 피해액을 독립 이래 받은 외국원조 총액에 비등하는 1억4천만 달러로 추산하였다.¹⁾ 남예멘이 붕괴될 뻔했던 사변이었다. 할리데이 교수는 1·13 사태 발발 원인으로서는 남예멘 지도부 내의 인간관계의 갈등, 권력 투쟁, 부족-지역주의, 정책 대립 등의 네 가지의 요인을 들었다.²⁾

1986년 10월 사회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서기장으로 선임된 알-바이드는 남예멘의 제1인자로 부상하였으며, 그의 개혁정책을 통해 예상보다 빨리 국가적 혼란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1989년 11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무렵 남예멘은 외교적 고립상태에서 탈피한 상황이었다. 이 내전은 20년간이나 통제경제와 공산주의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군부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협상에 의한 정치

적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통일협상을 주도 했던 북예멘의 대통령 알리 살레(Ali Abdulah Saleh)가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이 1차 걸프전쟁 발발 전야의 긴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예멘의 통일 움직임에 견제를 할 수 없는 틈새를 이용하여 약간 주저하고 있던 남예멘 사회당 총서기 알 바이드의 요구조건들을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통일의 합의를 조속히 타결시킬 수 있었다. 살레는 남측이 원하는 대로 야전군의 통합은 유보하고 내각 안배에 있어서도 국방장관 자리를 남측에 양보하였다.

Ⅲ. 1990년 통일 과정의 문제

1990년 5월 남북예멘의 통일을 성취하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한 살레 대통령은 정상적인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하였지만 병졸시대 인간관계가 탁월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을 내다 보는 전략적 사고 보다는 전술적 감각이 탁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멘문제 전문가 로버트 D. 버로우스 교수와 맨프레드 W. 웨너 박사는 33세의 살레 소령이 일계급 승진 한 후에 유고로 사망한 알-가시미 대통령을 계승하였던 민활한 수완을 기술하고 있다.³⁾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위협하고 있을 때 이라크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미군 주둔을 요청하게 되었다. 살레 대통령은 아랍협력위원회(ACC) 회원국임을 고려, 아랍국가간의 분쟁은 아랍국들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할 것을 주장, 강대국 군대 주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예멘의 통일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통일을 앞당긴 결정이 현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살레 대통령은 그 결정이 통일 후 30개월간의 과도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다. 남북예멘의 야전군 통합 문제에 있어서도 막연히 과도기 중에 한다고 하였지 구체적인 통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사우디의 보복 야기한 외교적 결정

통일 전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북예멘 노동자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예멘으로 연간 송금하는 총액은 평균 10억 불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범한 직후 약 70만 명의 예멘 노동자들이 추방되어 이들이 당시 사야나 시 변두리에 쳐놓은 천막에 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남예멘의 경우에도 공산권이 붕괴되고 경제원조가 거의 없어지게 되면서 경제 사정은 북예멘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남북예멘의 경제사정은 통일 과도기에서 더욱 어려워졌다. 30개월간의 통일과도기 중의 주민들의 생활은 통일 전에 비해서 더욱 궁색하게 되었다.

알리 살레 통일정부의 과도기의 통합과정에서 노정된 가장 큰 실패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국가연합 형식으로 운영되는 통일 과도기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최소 3년간 이상의 통일과도기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서는 예멘 통일 과도기(중간단계)의 정체(政體, polity)가 국가연합인지, 단일제인지 쉽게 판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⁴⁾

통일협상의 막판에 있어서, 북예멘 측은 통일에 주저하던 남예멘 측 수뇌부를 통일합의에 끌어드리기 위해 외교, 국방 및 치안만을 연방정부에서 다루는 느슨한 분권 형 연방제를 남측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이 제의를 수락하지 않은 남측이 단일제를 역 제의 하였다. 통일협상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던 북측은 내심 중앙집권 형 단일제를 선호했던 터이라 남측의 역 제의를 환영했다. 남측이 단일제를 선호했던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남예멘은 인구가 북예멘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경제는 파탄상태에 있었고 보수적인 아랍 권으로부터 고립되어있던 남예멘 수뇌부는 30개월간의 과도기를 잘 활용한다면 서방 자본과 기술의 도입으로 북예멘 석유매장량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나아가 아덴 항을 아·중동 지역의 중심 자유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남예멘 사회당에게는 과도기를 마감하게 될 총선거에서 인구 면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도기 중 북예멘 지역에 예멘사회당(YSP)의 지부를 설치하여 북예멘 내 사회당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측이 과도기의 정체로서 북측의 연방제를 받아들인다면 남측 지역정부와 북측 지역정부는 통일과도기 중 외교, 군사 및 치안을 제외한 부문에 있어서는 현행 대로 운영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북측이 연방제 하에서는 그들의 '지역정부' 관할 내에서 남측의 사회당 지부설치나 선전 조직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2. 보류된 남북 아전군 통합

또, 연방제를 수용할 경우, 국민회의당과 군부 통합 협상 후 적절한 시기에 감군을 단행 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간파하였던 남측 사회당은 연방제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예멘 사회당은 북예멘 국민회당 수뇌와의 통일협상에서 끝까지 야전군의 통합에 저항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군사원조로 배양해 놓은 남예멘의 군대는 남측 정부에게는 대북 협상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외교적 '자산'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북예멘의 군대는 남예멘과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 북예멘 내전(1962~1970)을 계기로, 북예멘에는 특이한 권력 분포가 형성되었다. 부족세력의 영향력은 수도에서 떨어진 변두리 지역에서 강하고 북예멘 중앙 군부는 수도와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부족세력의 사병(私兵)들은 통일 전의 2차에 걸친 남북전쟁에서는 북예멘 군부를 적극 지원하였다.⁶⁾ 북예멘 내전은 신정일체(神政一體)의 북예멘 왕정에 대한 군부의 쿠데타에서 비롯 되었다. 이 회교국가의 내전은 궁정을 탈출하여 부족사병을 규합한 젊은 이맘의 '왕정군'에 군사원조를 제공한 사우디 아라비아왕국과 왕정군과 싸우는 군부 '공화군'을 돕기 위해 원정군을 파병한 나세르의 이집트 공화국이 개입하는 국제적 성격을 띤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원정군을 예멘에 보내고 있는 동안 1967년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한 이집트는 사우디 아라비아와의 휴전 협상을 전격 제의하였다. 이들은 협상을 통하여 (1)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집트 측 제의를 받아들여 북예멘 이맘(Imam Yahya)과 친족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고 (2) 이집트는 원정군을 철수시키며 (3) 왕정군측과 공화군측은 권력을 안배하는 방향으로 새 공화국 정부를 구성하되 (4) 사우디 아라비아에 가까운 인물을 총리에 임명하고 (4) 사우디 아라비아는 경제원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북예멘 정부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왕정군의 주축이 되었던 부족세력 추장들에게도 경제원조를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북예멘 내 중앙정부와 부족세력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⁷⁾

군부의 통합문제는 한국의 통일문제 논의에서는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동독이 서독연방제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통합되었던 관계로 동독 군은 사실상 해체되는 바람에 군 통합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⁸⁾ 그러나 북아일랜드의 통합문제의 경우, 3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룩한 이른바 1997년 '성 금요일합의'에 의한 대 타협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무장해제가 말끔히 이행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렸다. 남북예멘의 통일협상에 있어서는, 아예 다루기 매우 힘든 군 통합문제를 유보한 채 통일에 합의하기로 한 양측수뇌들의 결정이 4년 후에 내전의 화근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예멘 군부 통합은 통일정부 국방부 장차관 국장급 간부와 참모본부에 한정되었지만 그렇다고 양측 야전군의 통합이 단순히 유보되었던 것은 아니다. 남예멘 측의 요구로 남예멘의 5개 여단은 수도 사나(전북예멘수도)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지점에 배치되었고 북예멘의 3개 여단은 아덴(전남예멘수도) 주변 전략적 지점에 주둔되었다. 이렇게 배치된 상대방의 군부대 근처에는 5개의 북예멘 여단과 3개의 남예멘이 각각 뒤 따라 배치되었다. 이 같은 대치 광경은 한마디로 통일된 다음에도 불신이 여전한 함을 응변하는 것이었다. 통일 후에 일어난 1994년 내전은 사나 북방 50KM밖의 남북예멘 두 대치된 여단 사이에서 발생한 포격전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외국통신들은 남예멘 사회당 정부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감지한 북예멘 국민회의당 정부가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북예멘 내에 배치되어있던 남예멘 여단병력을 순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썼다고 분석하였다. 이 북예멘 내의 남예멘 여단들 무력화 작전이 끝날 무렵인 5월22일, 남예멘 사회당 정부는 분리독립을 선포하였고 북예멘의 중앙군은 사회당의 분리독립 선포를 빌미로 아덴을 향한 일제 진격을 개시했다. 사회당 군은 2개월간을 버티다가 일부 지도부는 인접국으로 망명하였고 아덴에 남은 병력은 투항하거나 지리멸렬 사라져버렸다.

IV.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 퇴출 배경

남예멘 분리주의자들은 통합 정부에 대해서 부패부정, 선거사기행위, 1990년 양측이 합의한 권력분배 협정을 잘못 집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의 비난 내용은 대부분 전직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가 주도하는 여당 전체국민회의당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었다.

남부 예멘인들은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토지들이 북예멘의 지배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압수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아나 정부와 연관이 있는 개인들에게 분배되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조기에 퇴직한 수십만의 남예멘 군인과 민간 공무원들은 생계 수준에 미달하는 연금을 받게 되며, 남부 지방의 주민은 대부분 교체 대상이어서 중요한 직위에서 해직되면 그 자리는 새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부 사람들에 돌아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불만들이 쌓였다가 급기야 2007년 5월에 집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여러 해 동안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던 연금수급자들이 중심이 되어 거리로 나와 소규모의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남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달라”, “남부의 경제-정치 주변화를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아덴 시가를 행진하였다는 것이다. 항의 데모가 점차 호응을 얻게 되자 극단적인 사람들 중에는 ‘남예멘의 분리독립’까지를 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항의 데모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반응은 “국가에 대한 배신자들”이라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물리적

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위로 '남부운동'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 운동은 일명 '알 히락 운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남부의 분리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전부가 북부로부터 완전 분리독립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완전 분리독립을 후원하는 강경파는 전 남예멘 대통령 알리 살림 알 바이드의 지지를 받고 있고 2국가 연합제를 주창하는 집단은 전 남예멘 대통령 알리 나시르 무함마드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두 전 남예멘 대통령들은 1986년 1월13일에 일어났던 남예멘의 내전에서 정적으로 싸웠던 지도자들이다.

소규모 분리운동은 면적이 한국의 거의 2배가되는 하드라마우트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지역은 영국식민통치가 종료되었던 1967년 이전의 남아라비아 보호령은 콰이티, 카티리 그리고 마흐라의 3개 술탄 국으로 구성되었다.

1. 살레 대통령의 실책

살레가 범한 가장 큰 과오는 1994년 이후의 여러 출처로부터 얻은 정치적인 이익과 기부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것을 군, 부족-종교, 정부 등 3분야별로 분할할 분량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여 3분야의 최고 대표들에게 분배한 것이었는데, 이 비밀 관행이 몇몇 간행물을 통해 최근 폭로되었다.⁹⁾

이 관행은 2002년까지는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상업 베이스의 원유 추출과 평행적 경제 자유화는 살레의 정당 정치의 왜곡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술자들에게 권한을 주고 국가기관들에게는 권력과 재원을 갖추게 하여 효율적 운영할 수 있게 대비하는 대신, 그는 힘 드는 국가건설 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미봉적인 은혜제도(patronage)를 선택하였다. 이 온정 자본주의 구조는 보다 광범한 지역적 패권을 반영하였지만 그 구조는 부족 제도가 아직도 (특히 북예멘에서) 강하고, 새로 일어나는 공식적 권력 구조가 특별히 허약한 예멘에 있어서는 특유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는 고도로 개인화 되어 비공식 망을 통해 얻는 권력의 의미가 컸다.

강력한 국가 체제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살레의 엘리트 정치는 사실상 협력적 통치형태와 같은 것이었다. 이 통치형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부족적, 지역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은 이들이 만들어낸 결정권을 묵계약래 자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정상의 구심점에서 3인의 지도자들 간의 비공식적 조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이익과 불 합법적인 이익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살레는 '국가'를 통제하고, 알리 모신 장군은 군부의 가장 큰 몫을

통제하며, 그리고 셰이크 압둘라 알-아흐마르는 강력한 하시드 부족연합회 최고 셰이크이자 이슬라 정당 대표 겸 사우디 아라비아 은혜금 전달 중개자이다. 이 특이한 협력적 통치체제는 20년간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살레가 집권 3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의 장남 아흐메드 알리에게 유리하게 군사 및 경제적 혜택이 가도록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3방향 엘리트 권력안배 협정의 기본적 합의에 위배했을 때 그 기저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튀니지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의 파장은 33년간 장기 집권해 온 살레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불러일키는 전기가 되었다.

2002년, 예멘의 원유 생산량은 정점에 달하였고 그 시점부터 - 세계유가가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살레의 은혜수여 망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정권 내부에서의 경쟁은 가일층 격하게 되고 분파적 이해관계는 점차 국내 정치를 왜곡 시키기 시작하였다. 정권에 대해 반항하는 중요한 센터들처럼 그러한 북부 후티 반란세력과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엘리트 외곽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엘리트층의 분열상은 2006년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중, 살레가 야당연합 JMP(3개 야당연합)당이¹⁰⁾ 내세운 확실한 후보 빈 삼란를 상대로 입후보하였을 때, 점진적으로 명백해지고 있었다. (30대 초의 아흐메드 알리는 40세 미만은 입후보 자격이 헌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후보가 허용되지 않았다.) 셰이크 압둘라의 개인적인 보증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하미드 알-아흐마르 - 대통령을 꿈꾸는 부유한 30 몇 살의 거두-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였다. 하미드는 점점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이슬라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셰이크 압둘라가 2007년 암으로 사망한 이후 하미드는 압둘라 살레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국내 및 외국의 협력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다.¹¹⁾

2. 1994년 내전 발발

예멘의 통일경험은 북예멘이 내적 통일환경(남북전쟁 후유증과 통일에 소극적 국내 부족세력 장애 등 제 문제들)극복에 치중한 나머지 외적 통일환경(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및 사우디 걸프전)에 있어서 패전국으로 몰락하게 될 이라크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구미서방진영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사회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하였다. 그럼으로써 통일 과도정부는 30개월 중 계획하였던 사회 및 정치적 통합 일정을 전혀 달성할 수 없었다. 통일 전에 군 통합을 반대하는 남예멘 군부에 대해서 과도기 중 통합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살레 대통령의

양해를 얻어 남북군의 통합 없이 1990년 5월 22일에 통일정부 수립을 선포 할 수 있었다. 남북예멘의 야전군은 30개월의 통일과도기뿐만 아니라 1994년 내전 발발 시까지도 통합되지 않았다. 남예멘 출신 군인들은 그래서 통일 후에도 계속 남예멘 군복을 입고 휘장을 달고 다녔다. 이 밖에 살레 대통령은 통일 과도기중 5개 남예멘 여단들의 사이나 수도 변두리 주둔의 허가요청을 수락하였다. 이 5개 남예멘 여단들 중 사나아 시에서 북쪽으로 약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둔한 남예멘 제5여단은 공식적으로만 남예멘사회당 소속으로 분류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북예멘을 지지하는 부대였다.¹²⁾

1994년 4월27일 예멘 총선거 1주 기념일 정오, 요르단과 오만 군사대표단, 주예멘 미국과 프랑스 문관, 그리고 남북 양측 군대의 장교들로 구성된 공동군사위원단이 전국의 군영을 시찰하는 길에 제1 기갑여단 (북측) 사령관과 제3 기갑여단 (남측)사령관의 안내로 군영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는 순간, 세 발의 소총 소리에 이어 사방에서 중 기관총과 탱크 포의 포성이 들려 왔다는 것이다. 소총 발사로 비롯된 이날 전투는 북측 제1 여단과 남측 제3 기갑여단간의 단거리 탱크 포의 교전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었다. 1994년 예멘 내전의 발단이 국제군사위원단 앞에서 피로(披露)된 셈이었다.¹³⁾

V. 만수르 대통령의 국가개혁 전망

압드 라부 만수르 제2대 대통령은 앞으로 단 일년 밖에 남지 않지만 그의 임무는 막중하다. 향년 68세인 그는 당장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분열된 정치적 갈등과 상승하는 실업율을 안정시켜야 하며 북부 히디 부족반란, 알카이다 준동, 남부 분립독립 운동 등의 안보적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지고 있다.

만수르 대통령은 군인생애의 상당 부분을 통일 전 군인으로서 구 소련, 이집트,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 외국어와 군사전략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국제적인 감각과 외교력은 6개국 GCC회원국들을 비롯하여 미국 및 EU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2011년 전국적인 소요의 와중에서 살레 정권의 붕괴 직전의 위기를 차근차근히 수습하고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새 잠정 정부의 2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GCC 건의로 설립된 국가 대화회의(NDC)의 성과를 기초로 새 헌법의 원만한 제정과 당면한 안보 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의 수립으로 2015년 선거준비에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수르는 세 번이나 국가적 위기를 체험한 특이한 지도자이다. 첫 번은 1986년 1월13일 남예멘 내전이였다. 당시 남예멘군 군수-행정담당 참모차장이었던 그는 알리 나시르 무함마드 대통령의 온건파 진영 측에서 시가전에 참여하였다. 전세를 온건파에 불리하게 전환 시켰던 것은 탱크를 시가 안으로 끌고 들어와 무분별하게 발포한 하이담 카심 타헤르 대령의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탱크 부대장은 4년 후 남북통일 정부 내각의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영전되었다. 결국 만수르는 알리 무함마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제5여단을 비롯한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남예멘 군인 및 민간인들과 함께 북예멘으로 망명하였다.

그후 1980년대 말경 남북예멘간의 통일협상이 본궤도에 오르자, 북예멘 정부는 남북 통일 협상 분위기를 고려하여 나세르 무함마드 전 남예멘 대통령의 거처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옮겼다. 월북한 만수르 전 남예멘 장군은 나세르 무함마드 전 남예멘 대통령 휘하에서 제 5여단 외에 5 내지 6개의 월북자들로 구성된 여단들 추가로 편성하여 관리하였다. 7개 여단들은 '예멘통일여단'으로 불리었다.¹⁴⁾ 이 월북 남예멘 부대들의 존재가 1994년 내전이 발발했을 때 정부군이 남예멘의 분리독립군을 압도적으로 패배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수르에게는 현재의 위기 이전에 이미 1986년 남예멘 내전과 통일 후 1994년 내전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한편 현 예멘공화국 잠정 대통령 압드 라부만 만수르 해디는 일부가 주장하는 남예멘의 분리독립 제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만수르는 남예멘 사회당의 입장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단일국가제를 고집하는 살레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지난 2월10일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해디 대통령은 같은 날 그의 연방제 구상을 대통령 전문 위원회에게 검토케 한 다음 발표하였다. 그는 연방제를 적극 추진하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국가의 지도자가 여러 해 동안 벼랑 끝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는 국토를 현재의 23개 현들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6개 주의 연방국을 창립하여 중앙정부의 분권화와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여 정치적 경쟁 집단들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경작 가능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할수록 감소된 만큼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그러면, 예멘의 아동 영양실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여, 해디 정부의 계획은 적어도 국가 재건에 착수하기 위하여 행정적 구조를 창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주 예멘 영국대사 제인 매리오프는 로이터 통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연방제 방안은 결코 아무

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한다” 단정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예멘 수도 정계의 관심은 새 정부의 통치형태의 골격을 어떠한 형태로 개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모양이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1) 6개 주의 연방제, (2) 2개 주의 연방제 (3) 남북예멘 분리독립, (4) 중앙집권 단일제의 계속, 즉 현상 유지 등 4개의 안이 있다.

첫째, 6개 주 연방제는 현재의 23개 주(수도 사야나 포함 23개 governorate)를 6개 지역으로 재편하여 현 중앙집권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역 정부와 나누어가는 통치형태이다. 이 방안은 국가대화위원회(NDC)에서 상당한 논의 끝에 전 남예멘에게 2개 주를 그리고 전 북예멘에게는 4개 주로 통합시키기로 합의가 되어있다. 그런데 만수르 대통령이 2개주 연방제를 선호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둘째, 2개 주의 연방제는 1994년 내전의 교훈을 삼아 아직도 남북 간의 차이를 감안 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남북 양 주정부에 상당히 이양하여 운영하자는 제의이다. 1990년 통일 과도기 통치형태를 연상케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연합제이다. 현재로서 가장 어려운 쟁점은 22개 주들을 어떻게 양분하느냐에 있다. 또 남부 예멘의 반정부 시위의 구호는 분리독립 주장 보다는 1994년 내전 후 연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군인 및 공무원 가족들의 연금지불 요구의 강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류의 남예멘 지방 반정부 시위자들은 아마도 분리독립 보다는 2개 주 연방제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안은 사실상 1990년 통일 전으로 회기 하자는 분리통합 구상이다. 1994년 내전에서 역부족으로 패배한 후 해외로 망명했던 소수의 전 남예멘 사회당 정부 수뇌들은 2007년 살레 정권의 내부 분열 사태를 기회로 알리 살림 전 통일정부 부대통령을 중심으로 망명지 오만에서 한동안 국내 분리독립 운동을 격려했다. 이 사실이 누설되면서 오만에 더 이상 망명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 살림 전 부통령은 레바논 베이루트로 옮겼다. 살림 부통령은 ‘아랍의 봄’의 파장을 기회로 2009년 독일을 방문하여 현지 TV를 통하여 분리독립운동 개시를 선언하였다. 예멘 타임에 의하면, 압두 라부 만수르 정부는 민족적 화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던 알리 살림 전 부통령, 알 아라타스 총리 등 6명의 사회당 최고 간부들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단적으로 만수르가 현지 점에서 남부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멘의 혁명’이 2011년이 일어날 때까지 지난 20여 년간 남부 예멘과 북부 예멘의 현대정치질서의 발달 수준(강력하고 적응성이 있는 국가, 법의 지배에 종속하는 국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 등 현대정치적 질서의 3대 요소)¹⁵⁾ 있어서 격차가 현저하게 있었다. 통일 전 북예멘은 오랜 기간의 부족세력과 회교적인 전통이 상존하고 있으나 남예멘은 1세기 이상 영국 식민통치하에 있다가 1967년에 독립하여 20여 년간 사회주의 통치 체제 하에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1990년 통일 후의 30개월간의 과도기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94년 내전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예멘의 통일 사례는 남북한 간의 격차 문제를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교**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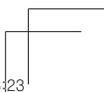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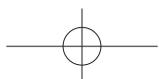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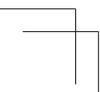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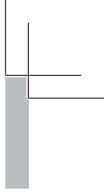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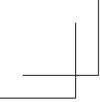
- 1) Fred Halliday, *Revolution and foreign policy: The Case of South Yemen 1967-19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42.
- 2) Pollack, David, *Moscow and Aden: Coping with a Coup*, *Problems of Communism*(May/June 1986) No. 35, pp.44-49.
- 3) Burrows, Robert D. *The Yemen Arab Republic -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62 -1986*. Boulder, COL: Westview Press, 1987, Pp. 90-91; Wenner, Manfred W. *The Yemen Republic Development and Change in an Ancient Land*, Boulder, COL.: Westview Press, 1991, pp.152-153;유지호, *남북통일 - 평화통일의 매력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1997, pp. 241-244.
- 4) 유지호, 『예멘의 남북통일 - 평화통일의 매력과 위험성』, 서울: 서문당, 1997, 205-213, 215-221. 남북양측은 과도기의 정치형태를 단일제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연합 식으로 운영됐음, 즉 양측 정부의 권력을 50대 50으로 안배하였고 정책결정은 다수결이 아니고 전원합의제 방식을 채택했으니 국가연합이었다고 할 수 있음.
- 5) 예멘 외무차관 abdo Ali Abdull Rahman과의 면담, 1996년 6월 7일 서울. 동 차관은 1989년 11월 28일-30일 남북예멘 아덴 정상회담에서 알리 살레는 알 비드에게 연방제를 제의했으나 알 바이드는 이를 거절하고 양 정부의 완전 통합을 제의했다고 언급함.
- 6)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방안-독일군사통합과정과 교훈』,서울: 팔복원, 1996. 저자는 군사적으로 중무장하고 이념적으로 적으로 규정해 온 동서독 집단간에 상호 사소한 충돌도 없이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7) 유지호, *op.cit.*, pp.42-44, pp.66-87. 신 북예멘 공화국 정부는 북예멘 내전(1962-1970) 중에 영국식민통치에서 독립한 남예멘이 친소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 기미를 보이자 북예멘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원 하에 1972년 남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했으나 이 전쟁은 아랍연맹의 중재로 2주일 만에 휴전으로 종료되었다. 이것이 1차 남북전쟁이었고 제 2차 남북전쟁은 7년 후 소련군에 의해 무장되고 훈련된 남예멘군에 의해 감행되었다.

- 8) 영국은 아일랜드를 16세기부터 400년간 통치하는 기간 중 영국인들을 북부 아일랜드에 입식시키고 카톨릭 신자가 절대다수인 원주민들에게 신교(영 성공회)로의 개종을 강요한 결과, 1921년 아일랜드(36개 주)가 독립했을 때 영국계가 많은 6개주가 영국통치 하에 남기를 위해 북아일랜드가 영 영토로서 분리되었던 것임. 그러나 그 후 카톨릭계통인 신 페인 정파의 전위기구인 IRA가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목표로 테러 활동을 개시한 이후 신교계통에서도 1969년 연합민주군(Unionist Democratic Army)를 결성, 이에 대응함으로써 1997년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 중재로 양측간의 대 타협이 성립될 때까지 IRA와 UDA간의 테러전이 무려 30년 계속되었던 것임.
- 9) A Chatham Report, "Yemen: Corruption, Capital Flight and Global Drivers of Conflict", 2013, London, pp.8-9, pp.18-19.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니 힐(Ginny Hill) 채텀 예멘 포럼 창립자는 살레 전대통령의 부정 행위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저술로는 『예멘: 혼란의 길』(Yemen: The Road to the Chaos, I.B. Tauris, 2013)이 있음.
- 10) Time, 2011년 7월 8일, 주간 Time 아덴 지국. 제목: "Is South Yemen Preparing to Declare Independence?" The JMPs most notable member partners are Islah and the Yemen Socialist Party. 1980년 대 말 아프간 무자히드에서 귀환한 타리크 알-파드히는 1994년 내전에서 정부군을 도와 남예멘 사회당 중심의 분리독립 기도를 좌절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으나 2009년 살레 대통령과의 동맹관계를 끊고 남부 분립운동에 가담함으로써 남부예멘시민들의 관심을 끌을 것으로 예상됨. 참조: Engdahi, F. William, "Yemen Behind Al Qaeda Scenarios unfolding stealth agenda," 28 March 2011, Voltaire Network, Frankfurt, Germany.
- 11) Wikileaks, "Cable 00SANAA1617, Yemen: Hamid al,Ahmar Soos Saleh as Work and Isolated, Plans Next Stops: <http://wikileaks.org/cable/2000/08/08/00SANAA1617.HTML>.
- 12) Warburton, David. The Conventional War in Yemen, Arab Studies Journal, Vol, 111, No. 1, P. 26
- 13) 카이로 MENA방송 아랍어 2000시 GMT 1994.4.27. 사나 방송 아랍어 2030시 GMT 1994.4.27. FBIS-NES-94-082, 28 April 1994, p.28.
- 14) Yemen Fox 방송뉴스, 2012.2.23. 하오 4시30분 방송
- 15) Francis Fukuyama, *The Origin of Political Order -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s*, Frarr, Straus & Giroux, pp, 585.



논문

- 헤이그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의 전망과 과제
-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추구하는 중국 개혁방안의 함의(含意)와 실천전망
-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와 성과



헤이그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의 전망과 과제

박 철 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겸 일본연구소장)



I.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

2014년 3월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헤이그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핵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개에 나서면서 이루어진 3자 회동이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은 2012년 5월 이후 22개월 만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 제3자인 미국의 중개에 의해 만났다는 사실이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양 정상은 양자 간의 결끄러운 관계를 인식해서 제3국에서의 회동을 희망하였고, 양자 간 과거사 및 영토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라 미국을 매개로 하여 양자 간 현안인 과거사는 피해가면서 동북아 안보 협력,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을 둘러싼 안보 분야 협력을 주로 이야기했다.

헤이그 정상회담은 몇 가지 의미에서 한·일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선, 한·일 정상이 제3국의 매개를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취임 이후 얼굴을 마주 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둘째, 양국 정상이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이 모임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관련 고위 관료가 6자 회담이 열리기 전에 '고위급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로 상의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협력 아젠다이다.

헤이그 정상회담은 아주 어렵게 성사된 회담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없

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3년 12월26일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미국은 상당한 불쾌감과 실망을 드러냈고,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줄곧 아베 총리에게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환경을 조성할 것을 종용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아베 내각이 고노 담화의 수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것을 감지한 미국은 아베 내각에게 과거사에 대한 복고적 움직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나오게 된 것이 3월14일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이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을 다행이라고 평가하였고, 미국 국무부도 이를 환영하면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헤이그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튼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반면 분명한 한계도 드러났다. 우선, 한·일 정상이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정상회담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하고도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외교부 대변인에게 이를 발표하게 한 반면,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는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한국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아베 총리가 '반갑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넬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무덤덤한 표정으로 응대하는 것이 회담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초미의 관심사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인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미국이 중재하는 회담인지라 세 나라의 공통 관심사인 안보협력문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자 간 현안에 대한 대화는 뒤로 미루어졌다.

또한, 한·미·일 삼국의 화동이 있었지만 다음 정상회담에 대한 어떠한 기약이나 예고도 없이 헤어졌다는 사실이 정상회담의 정상적 복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4월24일~26일간 동경과 서울을 순방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오바마의 체면을 세워주는 데는 공헌하였지만, 연쇄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번 회담의 한계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지고 나서도, 예정보다 다소 늦추어졌다고는 하지만, 4월4일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고, 거의 모든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된 것은 한·일 간에 드리운 암초를 보여준다.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국내 일정은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 한·일 관계의 현주소이다.

II. 한·일 관계 회복을 가로막는 국가전략 정체성(national strategic identity)의 충돌

한국과 일본이 경색되고 긴장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은 양국 정상들의 신념과 정치적 자세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아베 총리의 확신범적인 우익 성향과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한 원칙론적인 태도가 부딪히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지도자 개인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한·일 양국이 민주적인 국가로서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부분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어떤 이들은 한·일 양국 내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념적 시민사회 집단이 한·일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일본에 존재하는 우익집단들이 보여주는 헤이트 스피치와 주간지에서 보도되는 저속한 우파들의 주장들을 보면서 이들이 야말로 한·일 관계를 그르치는 장본인들이라고 본다. 하지만, 일본의 우파가 일본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본사회에서 우익들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사회 내에서는 소수파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이 아베 내각의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 한국 사회 내에서도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일 사회집단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내에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주장이 많은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민사회도 일정 정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일 관계의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한·일 양국의 국가전략이 가지는 정체성(national strategic identity)의 충돌 때문이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도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국가전략을 짠다. 그 전략적 구도 내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우선 순위, 상대 국가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또는 배제의 정도, 나아가 상대 국가들에 대한 선제적 접근 필요성 여부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일 관계의 회복을 우선하였던 관계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의 개선에 힘을 기울였고,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입지를 부여한 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서두르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에서 보자면, 미국과 일본의 우선 순위가 높고, 중국과 북한의 상대적 위상은 낮은 대외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현재 박근혜정부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 속에서 상대방이 차지하는 중요성, 외교적 우선 순위, 포용의 정도 등

을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아베 내각은 중국의 부상을 목도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맹주 자리를 내어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강한 일본의 부활'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만들어냈다. 아베는 일본을 이류 국가로 전략시킬 수 없다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활성화 전략은 다른 아닌 일본 경제를 다시 살려내서 중국의 부상에 맞설 수 있는 경제 강국으로 다시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아베 내각은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Balancing China)을 외교 전략의 우선 순위에 두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자주적인 방위력과 방위 태세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대중 방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 국가안전보장국(NSC)의 설치,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 노력 등은 모두 중국의 부상에 대항하여 일본의 방위 태세를 적극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아울러, 아베 내각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기제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 관계 재설정을 통해 중국을 에워싸려는 전략(Encircling China)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힘의 행사에 의한 해양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법 질서에 기반을 둔 국제해양안보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연합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수호의 전면에 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아베는 이를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으로 변호하고 있다. 이 모든 전략의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중국이다.

아베의 전략적 외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일본에게 있어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공유하며, 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관을 함께 하고 있는 국제적, 지역적 파트너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일원과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이 마치 중국 편에 다가서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작은 중국(Little China)'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쟁심과 강한 위협감을 간직한 일본에게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는 일본을 저버리고 강대국 중국에 다시 사대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한국은 일본에 대한 공동 견제와 반일 공동 전선을 펴는 중국의 아류로 여겨지는 것이다. 일본의 주간지들이 펼치고 있는 반한, 혐한 감정이 그려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한국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평가절하는 아베 외교의 또 다른 축인 '주장하는 외교'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아베에 의하면, 일본은 전후 체제 하에서 지난 날의 전쟁과 식민지에 대한 반성, 사죄 및 보상을 불가피하다고 믿는 자학사관에

빠져 있었다. 이에서 벗어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아베의 이데올로기이다. 자공사관을 통해 새로 태어난 아름다운 일본을 만들기 위해, 아베는 영토 주권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함양하고 역사문제에 대해 당당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군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정,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의 반복, 독도 및 센카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강화 등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중국과의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 한국과의 독도를 둘러싼 갈등의 고조, 나아가 종군위안부의 강제 연행 부정에서 유래하는 한·일 간의 불신은 단지 아베 개인의 신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베 내각이 설정한 국가전략의 한 부분에서 배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베 외교의 국가전략 정체성을 밝히고 보면, 아베 내각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과 우선 순위는 낮아진다. 중국에 대한 대항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심정적으로 한국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과 우호적인 한국이 미덥지가 않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나아가, 영토와 역사 인식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한국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전략한다. 한국은 적극적으로 포용해 나아가 할 중요한 인접국이라기보다는 깔끄러운 이웃 나라이다. 그러다보니, 아베 내각으로 보자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자칫 한국과의 갈등을 어정쩡하게 봉합하다가 아베 내각이 주장하는 다른 외교 노선과의 모순점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한국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misperception)이다. 한국은 중국이 큰 나라여서 더욱 의존해야 한다는 편승전략(bandwagoning strategy)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의 안보 이익과 충돌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젊은 지도자 아래에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끊이지 않는 북한을 견제하고 이를 관리 가능한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움직임이 수용할 수 없는 한국이 근대에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한 중국과 역사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일본의 우익적 주장이 싫어서 중국에 떠밀려가고 있는 것이지, 중국에 매력을 느껴 일본을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전략의 핵심어는 ‘신뢰’이다. 자신의 외교 전략을 ‘신뢰 외교(trustpolitik)’라고 부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존과 인적 교류가 심화되는 동아시아에서 영토와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아시

안 패러독스(Asian Paradox)' 라고 부른다. 국가들 간 신뢰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가 없는 국가 간 관계가 남북한 관계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라는 정책 주도를 통해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남북 교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국제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원리의 수용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어나 행동은 오히려 남북한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차분하게 협력의 습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실현 가능한 협력 아젠다들로부터 하나씩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도 주장하고, 인도적인 지원의 지속도 외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뢰외교의 복원을 동아시아 지역에도 적용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협력하기 쉬운 기능주의적 협력 분야로부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협력을 가져오자고 하는 이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 구상의 숨겨진 이면에는 현재 동북아 국가들의 신뢰를 해치고 있는 것이 일본 지도자들의 우파적인 주장과 행동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거나 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미화하는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인식은 박 대통령의 강연이나 연설 등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로 보자면,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도 '비정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 인식에 나타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에 기반한 외교를 구축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본지도자들을 향해 올바른 역사인식의 회복과 성의있는 행동을 반복해서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전략 정체성을 알고 보면,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은 한, 일본은 신뢰하기 어려운 국가로 남을 것이고 일본을 있는 그대로 포용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일본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이 바뀌고 책임있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일본을 끌어안을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정부의 외교 전략에 있어 일본은 상대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이고, 적극적 포용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국가전략 정체성은 다분히 과거사 중심적이다.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세력 전이에 대한 전략적 균형의식을 전제로 한 대응전략이라기보다는 역사적 행동의 정당성에서 신뢰의 근원을 찾는 원칙론적인 측면이 아

주 강하다. 일본이라는 상대방의 언행이 먼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의 선제적 협력 자세는 나오기 어렵다. 역사인식의 수정이 협력의 전제조건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인식 수정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타협적이다. 쌍방향적, 상호주의적 타협을 본질로 하는 외교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극히 원론적이다.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언행을 정상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에 가까운 외교 행태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회복의 추동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지도자 개인의 신념이나 자질에서 연유하기 보다는, 한·일 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 특히 대외전략 정체성의 충돌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한·일 양국이 이러한 전략적 한계를 수정하고 관계를 회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Ⅲ. 미국이 중재하는 한·일 관계의 역설

한·일 양국의 지속되는 갈등을 보면서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양국의 동맹국인 미국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 전략 (Rebalancing Strategy)’이라는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한 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실효성있는 전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국 간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이슈를 중심으로 서로 갈등하는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이면에는 한·미·일 삼국 공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급부상하면서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펴고 있는 중국을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질서에 원만하게 편입하기 위해서 공통의 체제와 가치관을 가진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를 떨치지 못했다. 2011년 12월 교토 정상회담의 사실상 결렬 이후,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는 양국에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 유산’을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문제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중국 및 한국과의 영토 갈등 속에 등장한 아베의 재등판은 일본 사회 내에서의 우파적 성향의 강화와 동시 진행되었다. 2012년 9월 아베의 자민당 총재 당선 이

후 그해 12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내놓은 공약에는 우익적 생각이 상당히 담겨 있었다. 헌법을 개정하겠다. 자학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주변국에 할 말을 하는 주장하는 외교를 펼치겠다, 야스쿠니에 반드시 참배하겠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겠다, 차세대들에게 자랑스런 일본의 모습을 가르치겠다 등등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지도자들의 인식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아베 내각의 심각한 역사 인식은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온 아소 부총리의 발언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취임식 당일의 경사스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남부에 사는 미국인과 북부에 사는 미국인들의 역사 인식이 다르다. 하물며 나라가 다른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이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아소 본인은 남북전쟁이 노예제의 해방을 가져온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다. 이 만남은 한·일 관계의 쉽지 않은 앞날을 예고하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후 아소를 비롯한 아베 내각의 멤버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하였고, 아소 본인은 ‘나치식으로 일본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더욱 주변국의 의심을 강화시켰다. 아베 총리가 731이라고 쓴 자위대 항공기에 올라 손가락을 치켜 올린 것도 2013년 4월 경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베의 위험한 역사 인식과 행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베와 아베 내각 멤버들의 위험한 도박이 결국 일본과 주변국,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은 아베 내각에 드러나지 않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베의 돌출적 행동과 발언을 억제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개선은 요원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13년 5월 이후 상당히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논란이 일어난 발언 등에 대해서는 스가 관방장관을 통해 이를 수정하는 자세를 보였다.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는 공물을 보내고 직접 참배는 자제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은 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발신하였다.

2013년 9~10월에는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담 등 다자정상회의의 무대가 한·일을 벗어난 제3국에서 수차례 열렸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내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정

상회담은 준비되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는 반복해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정성있는 사과, 그리고 불행한 과거사에서 유래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눈으로 보면, 한국 측이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과거사문제를 통해 전제조건을 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베의 비틀어진 역사인식 만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와 원칙론적인 접근 때문이라는 생각이 워싱턴 조야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쐈기를 쫓은 것이 한국 내에서 일어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이었다. 아베 내각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의 접근에 의한 센카쿠 및 인근 해역에서의 군사적 접촉을 염두에 두고, 미·일 동맹의 쌍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의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이 국제안보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싶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대외전략의 깃발로 내세웠다. 방위비 삭감으로 고민하던 미국으로 보자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움직임은 고마운 제스처였다. 미군이 제3국에 의해 공격을 당할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이에 대해 함께 방어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어서,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찬성이었다.

하지만,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일본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집단적 자위권 도입 움직임을 여론을 동원해 가면서 강한 반대로 나서자 미국은 당혹해 하였다. 과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가, 한국은 일본이 말하는 대로 중국편에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 일본을 보는 한국과 미국의 눈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방향타를 수정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일본을 포용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하기 시작하였다. 문제의 근원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의미였다. 미국과 일본이 2+2 대화를 정식으로 복원하는 한편,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가 한·일을 오가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중용하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일본을 들르는 형태를 취하였지만 줄곧 한국에게 대화에 나서라는 형국이었다.

아베 수상은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중심으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후텐마 기지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정하면서 미·일 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는 듯 했다. 문제는 아베 내각이 미국의 다른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점이었다. 미국은 일본과 2+2 대화를 복원하면서 척 헤이글(Chuck Hagle) 국방장관을 한국에 들르게 하였으며, 방일 기간 중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Chuck Hagle) 국방장관은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역’을 참배했다. 아

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아달라는 간접적이지만 강한 의사 표명이었다.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이 아베를 만난 후 한국에 올 때도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였다. 미국이 놀라고 실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례적으로 동경 주재 케네디(Kennedy) 미국대사가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 이를 계기로 다시 불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한국이 늘 주장하던 대로 한·일 관계의 걸림돌은 역사문제에 매달리는 한국이 아니라 아베 총리의 불안한 역사인식과 민족주의적 행동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 스스로 입증한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미국은 다시 일본에 대한 압력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월 말 다보스포럼에서도 한·일 정상이 냉랭하게 지나치자, 미국은 일본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3월14일 아베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발언이었다. 한국은 이를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였고,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적극적인 대화 중재에 나섰다, 그 결실이 헤이그 핵정상회의를 활용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었다.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일본은 여유를 다시 찾은 모습이다. 아베 수상은 한국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인 모양새가 되었다. 아베 내각의 일원들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의 발언에 토를 달기는 했지만, 4월1일 중의원 의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도 새로운 정치적 담화를 만들지도 않겠다’고 각의 결정함으로써 온건한 입장을 관철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평가하기라도 하듯, 4월5일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4월24~25일 오바마가 일본을 국빈 방문하면서 미·일 관계 복원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이 일본에 대해 우호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함으로써, 공은 다시 한국에 넘어오는 양상이다. 비록, 오바마 대통령이 4월25~26일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하여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위안부 문제가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언급하였지만, 한국에게도 일본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아울러 보냈다. 결국,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일 간 관계 개선의 속제를 양쪽 모두에게 안겨주었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을 고수하는 한국에게 속제를 던져주는 양상이다.

IV.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어려운 여정과 과제

한·미·일 정상회담은 삼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행보에 불과했다. 지금부터의 과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도움이나 중재가 없이 독자적으로 양자 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 앞날은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안보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주요한 테마로 하려는 일본과 우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을 매개로 한 회담이었고, 핵정상회의라는 회의의 성격상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3국 간 협력이 테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과거사 이슈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따라서, 안보 협력 및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 회복의 조치로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은 두 개의 국장급 회담을 동시 진행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하나는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의체’의 재가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의 시작이다. 바꿔 말하자면, 양국의 관심사인 안보문제와 과거사 문제 협의를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두 트랙 외교는 일단 전향적이다.

하지만,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국가전략 정체성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은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인식론적으로도, 실재론적으로도 구별해 내는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주간지들과 같이 ‘한·중은...’이라는 수사를 배제하고, 중국과 한국의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과 이해 관계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고,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을 차별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를 한 차원 승화시킬 여지가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외교 역량을 갖추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2013년과 같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듭하고, 중국과 과거사를 통한 연계를 지속해 나간다면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해도 반론할 여지가 적다. 북한 문제의 관리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협력을 위한 중국과의 연계를 계속해 나가되,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국 국가전략의 지평 속에서 서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외교적 대응의 우선 순위를 높이지 않는 한 현안의 표면적인 통합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정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을 포함한 방위수정주의(defense revisionism)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다른 하나의 아젠다인 역사수정주의(history revisionism)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역사 수정주의가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와 여성문제에 직접 저촉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점령 당시 짜놓은 평화헌법 체제, 극동재판 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제에 정면 도전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전략적 지형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을 파악한 바탕위에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은 역사 수정주의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부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문제의 적극적 제기 등이 한국의 이해에 배치됨은 물론, 미국이 지지하기 어려운 아젠다임을 직시하고, 한·미·일 공조 체제의 회복을 위해 한국을 자극하는 행동과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아베 내각 일원들에게서도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적어도 대외 발신 측면에서의 지속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고노 담화의 검증을 지속하고 심지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새로운 담화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측근의 발언 등은 한국 및 주변국에 혼동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또한, 종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입장에서 변호만 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보편칙에 따라 과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미화하는 언동을 피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성의있는 사죄와 반성을 책임있게 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자제와 관용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마치 일본이 ‘악의 축’인 양 부정적으로 몰아가서 제3국에서까지 일본을 비난하는 양상은 비외교적이다. 한국이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사상하고 오로지 과거사에만 매달려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사와 더불어 다른 협력적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일본이 전향적인 과거사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이를 일축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안을 경청하고 한국의 이해가 반

영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인내심있는 협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 즈음에는 일본 측에게 ‘더 이상 동일한 과거사 문제로 일본을 계속 괴롭히지는 않겠다’는 종결성(finality)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외교**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추구하는 중국 개혁방안의 함의(含意)와 실천전망



황용식(전 주 타이베이 대표)

1.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개혁의 역사적 의의

중국의 시진핑 당 총서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체제가 2012년 출범한 이래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라고 약칭한다)가 2013년 11월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3중전회에서의 첫날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기조연설을 한 후¹⁾ 중앙정치국이 제출한 “전면 심화 개혁에 관한 중국공산당 위원회의 약간 중대한 문제의 결정(이하 ‘3중전회 결정’이라고 약칭한다)” 내용을 심의하여 마지막 날인 11월12일 이를 통과시킨 후,²⁾ 11월15일 중앙정치국이 중국 관영 언론매체인 신화사(新華社)를 통하여 전체회의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홍보자료(公報)를 발표하였으며³⁾ 동 일자로 시진핑 총서기가 3중전회 결정을 설명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⁴⁾

또한 2014년 3월3일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가, 3월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2차 회의가 각각 베이징에서 개막되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정책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주요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데 12일 개최된 폐막식에서 위정썩(俞正声)회장은 중국인민들이 시진핑의 영도력 하에 뭉쳐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고 소강사회를 실현시키고 중국식 사회주의의 건설과 ‘중국의 꿈’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⁵⁾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동 대회는 3월5일 개막식에

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보고서와 함께 계획보고, 예산보고, 인민대회 상임위보고서 등이 제출되어 인민대회에서 심의를 한 후 13일 폐막시 이들 보고서와 함께 460여 건의 의안을 채택하는 결의를 하였다.⁶⁾

국무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예산의 범위와 집행방법 등 행정실무에 관한내용으로서 중국공산당이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방안의 실천을 위한 행정부 차원의 계획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총서기 체제 하의 1978년 11월에 개최되었던 제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장쩌민 체제 하의 1993년 11월 제14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수립'을 채택하는 문서를 채택한 바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작년 11월 개최된 3중전회 결정은 2020년까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당, 군대 등 각 부문에 걸쳐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제도를 완비하고 국가관리체제를 정비하며 관리능력을 현대화함으로써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부강한 민주문명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 문화국가를 이룩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⁷⁾ 새로운 차원의 정책 천명이다.⁸⁾

3중전회 결정은 각 분야에 걸쳐 매우 상세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과거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이 주로 경제 분야의 개혁인데 비하여 시진핑 체제 하의 개혁은 각 분야에 걸친 보다 포괄적인 개혁으로서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 중 실천할 국정의 청사진이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개혁 방안의 배경과 지도이념, 구체적 내용, 기존 국제질서와의 관계, 그 실천 전망 등을 분석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이 국제질서에서 점하게 될 위상을 파악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긴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I. 새로운 개혁방안 제시 명분과 이념적 기초

상기 '공보(公報)'는 제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방안의 명분과 개혁방안의 이념적 기초에 관하여 아래의 요지를 언급하고 있다.

- 제11기 3중전회 이래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여 위대한 성공을 이룩하였으나 오

늘날 새로운 시대적 조건에 부응한 새로운 개혁·개방을 이룩하는 것이 중국전체 민족의 위대한 혁명이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가장 분명한 길이고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대한 선택이다.

- 3중전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의 깃발아래 덩샤오핑(鄧小平)이론, 3개대표 사상(江澤民이 주장한 중국공산당이 농민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자본가, 지식인, 인민모두의 근본이익을 대표하여야 한다는 내용-필자 주), 과학발전관(胡錦濤가 주장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내용-필자 주)을 지도이념으로 하였다고 하면서 3중전회에서 이들 사상 이외에도 마르크스·레닌 사상, 모택동 사상도 강조되었다.
- 3중전회에서 공산당의 영도력을 견지하고 공산당의 기본노선을 관철하면서 폐쇄적인 낡은 노선을 버리고(不走封閉僵化的老路), 특정사상에 구애받지 않고(解放思想), 실제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노선을 택한다(實事求是)는 점이 강조되었다.

- 개혁의 기본 노선

- 경제를 현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서 정부는 거시적 조정만을 하도록 하며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개방형 경제체제와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새로운 국가건설을 촉진한다.
- 당의 영도 하에 인민을 주인으로 삼고, 법에 의한 정치, 부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제도화하고 규범화하여 사회주의 민주국가를 건설한다.
-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를 건설하고 문화관리 체계와 문화생산 경영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 문화 대 발전과 번영을 이룩한다.
- 생태문명체제를 개혁하여 영토공간을 개발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보호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하도록 한다.
- 당의 지도체제와 통치체제를 개혁하고 군대가 당의 지휘 하에 더욱 강한 인민군대로 한다.

상기 시진핑 총서기의 3중전회 결정설명 담화에서는 1992년 덩샤오핑이 남방순회에서 “사회주의를 유지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단행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않으며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에게는 죽음의 길 밖에 없다”고 한 말을 상기시키고 3중전회의 개혁방안이 1992년의 개방 개혁을 심화하는 것임을 나타내었다.

Ⅲ. 개혁 방안의 주요내용

3중전회에서 채택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의 개혁 심화에 관한 수개의 중요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若干重大問題的決定)'은 개혁방안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60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본 경제제도 완비

- 경제제도 개혁의 핵심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소유의 국유자본과 농촌지역 농민공동소유인 집체자본(集體資本), 개인자본 간의 상호 교류 증대를 통하여 경쟁력과 투명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전체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 법률로 모든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유자본, 집체자본, 개인자본 간에 상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혼합소유경제체제를 지향한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자산관리 체제를 개혁하여 종래 국가자산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부터 국가자본을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국유자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자본 운영공사와 국유자본 투자공사를 설치한다.
- 국유자본이 투자하는 영역을 국가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 국가안전에 관련된 분야, 국민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 첨단산업분야, 생태보호 분야 등으로 한정하고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정비하고 2020년까지 국유자본 운영 수익의 30%를 사회보장제도 기금으로 활용한다.
-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여 국유기업의 운영을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고 정치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며 국유기업의 재무 예산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한다.
- 시장(市場)이 자원 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주경영, 공평경쟁, 소비자 자유선택, 상품과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 평등교환이 가능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시장에 진입하는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통일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내국민 대우를 받는 조건도 네거티브 리스트로 통일한다.
- 상공업의 등기제도는 현재의 출자액과 납입액을 등기 시에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實繳登記制度)를 등기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자본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認定登記制度)로 변경한다.
- 시장에 대한 감독체제도 개혁하여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일하여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법제화하고 위법과 특정시장에 대한 특혜 부여를 엄격히 금

지한다.

- 가격결정 기능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기, 교통, 전신 등 분야에서의 가격결정을 개혁하고 정부가 관여하는 범위를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에 한정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 도시와 농촌의 토지에 대한 임대, 양도, 저당을 할 경우 모두 국가의 토지와 동등한 권리와 가격을 인정하며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수용할 경우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보장 제도를 마련한다.
- 금융제도의 개방범위를 확대하여 민간자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에 의하여 중소형 은행 등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 금융기구를 개혁하여 건전하고 다층적 자본시장체제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중국화폐의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제도를 완비하여 이율의 시장화 시기가 빨리 도래하도록 하고 중국화폐의 자본시장에서 태환이 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한다.
- 금융 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금융 감독 책임과 위험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저축성 보험제도를 설립하며 금융시장의 안전과 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과학기술과 산업이 상호 협동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제도를 만들고 기업에게 기술을 창조하여 나가는 지위를 부여한다.
-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재산권에 관한 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예산의 공개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예산은 균형예산으로 편성하되 적자규모에서 지출예산과 정책예산을 확장하고 지출 청산은 재정수지 증가폭 또는 생산총액과 연계하나 일반적인 연계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 예산의 집행이 다음 연도까지 걸칠 경우 균형예산 시스템을 수립하고, 권한과 책임이 발생하는 정부종합재무보고 제도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채무관리 및 위험예고 시스템을 수립한다.
- 투자체제를 개혁하여 기업을 투자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국가안전, 생태안전, 전국의 중대한 생산력과 관련이 되거나 전략자원개발이나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이 되는 분야 이외에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정부가 심사, 감독하지 않도록 한다.
- 발전성과평가 제도를 개혁하여 단순한 경제성장 속도를 평가하지 않고 자원의 소모, 환경훼손, 생태효능, 에너지 효능, 과학기술 개발, 채무의 증가 등을 지

표로 삼는다.

- 전국과 지방의 자산, 부채표를 만들고 전 사회의 부동산, 신용 등 기초수치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여 각 부문의 정보를 공유한다.
- 조세제도는 점차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며 세율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소비세의 징수범위, 소득 간 구분, 세율,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이 심한 소비상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높인다. 점차적으로 종합과 개별 소득세를 결합한 개인 소득세제를 수립한다. 부동산세와 자원세, 환경보호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업무 수행 권리와 예산지출을 결합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국방, 외교, 국가안전, 전국 통일시장 규칙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지역 사회보장과 수개지역에 걸쳐있는 중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 업무로 하며 지역성 공공 서비스 업무는 지방업무로 한다. 또한 중앙이 일부 업무를 지방에 이양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예산 지출 책임도 지방에 위탁한다.
-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을 규율하는 법률을 통일시키고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을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예견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금융, 교육, 문화,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을 차례로 개방하고 육아, 양로, 건축 설계, 회계심사, 상품물류, 전자상업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자 진출 제한을 더욱 개방한다. 일반 제조업도 더욱 개방하고 세관특수감독 구역을 선별 통합한다.
-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지역 설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건이 구비될 경우 지방발전을 위한 수개의 자유무역항(지역)을 선정한다.
- 세계무역기구의 틀 안에서 양자, 다자, 지역별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하여 개방 협조하고 각국과 지역 간에 이익의 합치점을 확대하며 주변을 기초로 자유무역지대 실시 전략을 가속화하고 시장진입, 세관감독, 검역 관리체계, 환경보호,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신 의제에 관한 회담에서 글로벌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이룩한다. 홍콩 특별행정구역, 마카오 특별행정구역, 대만지역과 협조를 확대한다.
- 내륙지방의 무역, 투자, 기술개발 협조를 증진하고 가공무역 방식으로 내륙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내륙과 도시간의 여객, 화물 운송항공을 증편하여 동부, 중부, 서부를 관통하고 남부와 북부의 대외 경제 회랑(走廊)을 연결한다.
- 국경지대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국경지대 항구와 국경도시 개발을 허가하며 국경지대에서의 경제 합작지구에서의 인적 왕래와 물류, 관광 등을 특수방식으로 실행하며 개방형 금융기구를 설치하여 주변국 및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결을 도

모한다. 실크로드를 경제통로로 추진하고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여 전 방위 개방의 신국면을 이룩한다.

2. 정치제도 개혁

-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기 위하여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각 분야의 협조를 영도의 핵심으로 삼고 배우며, 봉사하며 창조적인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을 건설하며 당의 영도 수준과 집권능력을 제고한다. 전 당원들의 행동과 사상을 통일하고 전면적 개혁을 심화하는데 앞장서서 이익구조를 정확히 조정하고 당내민주를 발양(發揚)하고 중앙의 권위를 옹호하며 중앙의 명령을 통용시키며 중앙의 개혁결정을 이행시킨다.
- 중앙에 전면개혁심화 지도부(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두어 개혁의 전체적인 설계와 협조를 총괄하고 총체적인 추진과 내실을 기하도록 독촉한다. 각급 당위원회가 개혁에 대한 지도적 책임을 지고 과학적이며 민주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혁 방향을 선도한다. 영도 그룹과 영도 간부들은 부단히 개혁 능력을 제고하고 당의 하층 조직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체제를 갖추어 개혁 업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 당의 조직력을 보충하고 인재에 의하여 당이 지탱될 수 있도록 당 간부 인사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여 각 분야의 우수한 간부가 당 조직을 영도하고 점검하도록 당위원회를 강화하고 간부의 선발과 평가제도를 개혁하여 경쟁을 통한 선발과 우수한 청년 간부를 양성하며 스펙이나 출신성분만을 고려한 선발을 지양한다. 간부가 특수집단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의 시야와 채널을 확대하고 간부의 계통과 영역 간의 교류를 확대한다.
- 공무원 분류제도를 개혁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이 병행하도록 하고 직급에 따른 대우를 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전문기술직과 행정공무원을 구별하고 특채 인원 관리 제도를 두며 하위공무원 채용제도를 정비하고 벽지 출신자에게 공무원 문호를 확대한다. 각 방면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체제나 신분상의 장벽을 제거하며 재능이 있는 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회 각 방면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재 평가제도를 개혁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새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 정부의 직능을 과학적인 거시조정 역할만 하도록 하고 미시적인 사항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며 정부의 직능을 변화시키고 행정체제를 개혁하

- 여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법치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이룩한다.
- 정부는 발전 전략, 기획, 정책, 표준 등을 제정, 실시하고 시장 활동을 감독하며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시장감독, 사회관리,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정부구매는 경쟁에 의하도록 하며 합동과 위탁방식을 택한다.
 - 행정구역 설정을 최적화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성(省)이 직접 현(縣)이 나 시(市)를 관리하는 제도를 모색한다.
 - 인민대표대회를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 인민대표제도의 이론과 실천을 새롭게 하고 입법의 기초와 논리, 협조, 심의제도를 건전화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고 지방이나 부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든다.
- 각급정부는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인민대표의 예산 결산 감독권, 국유재산 감독권을 강화하며 세수(稅收)의 건실한 법제화를 기한다.
- 민주협상을 당의 영도 하에 경제사회 발전의 중대한 문제와 민중들의 절실한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정책결정 이전 단계에서 협의하며 국가 정치기관, 정협조직, 당파 단체, 서민조직, 사회조직의 협상 채널이 되도록 하고 입법, 사법, 참정, 사회 협상을 통하여 중국의 새로운 싱크탱크를 건설하며 건전한 자문기구가 되도록 한다.
 -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보호하여 헌법을 치안의 근본법으로 하여 최고권위를 인정하며 법률 앞에 모든 개인이 평등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에게도 헌법,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책임 추궁 당하도록 한다.
 - 행정법 집행주체를 조정하여 집행자의 권리와 책임이 통일되도록 하고 집행자의 중복을 줄이며 식품과 약품, 안전생산, 환경보호, 노동보장, 해역(海域) 및 섬과 관련된 법집행은 하위 관리들의 역량을 중시하고 법의 집행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법의 집행절차와 자유재량을 규범화한다.
 - 재판권과 검찰권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하게 하고 사법관리 체제를 개혁한다. 성(省)하위의 지방법원을 추진하고 검찰원의 인적 물적 관리를 통일하며 행정구획과 합당하게 분리된 사법관할 제도를 수립할 것을 추진하며 직업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사법인원을 관리하고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을 통일하여 채용하며 법관, 검찰관, 인민경찰의 직업을 보장하는 제도를 둔다.
 - 심판위원회 제도를 개혁하여 주심법관이 합의심사건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각급법원의 직능을 명확히 하며 상·하급 법원 간의 감독관계를 규범화한다. 심판과 검찰업무를 공개하고 심판 자료를 기록 보관한다.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재판문서를 공개하고 감형, 가석방, 외부 진료 등을 엄격히 법제화한다. 인민배심원제도, 인민감독원제도를 두어 인민대중이 사법에 참여하는 통로로 한다.

- 인권의 사법(司法)상 보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재산관련 소송에서 압류, 압수, 동결에 관한 규범을 강화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 학대행위를 금하며 법률에 위반한 증거배제 원칙을 엄격히 실시하고 사형죄를 점차로 축소한다.
- 노동교화제도(勞動敎養制度)를 폐지하고 위법 범죄 행위적 처벌과 교정 법률을 정비하며 지역사회의 교정제도를 개선한다.
- 사법구제제도를 개선하고 변호사의 업무 집행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징계한다.
- 권력과 업무와 사람을 관리하는 제도를 견지하여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사용이 명백히 드러나게 하고 제도의 틀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한다. 권력을 제한하고 권력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권력의 사용에 대한 감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어 깨끗한 정부를 건설하고 맑고 공정한 간부, 청렴한 정부, 청명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국가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민주 집중제를 견지하여 당이 핵심적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당의 중요 간부의 직책과 권한을 규범화하며 당과 정부에 과학적인 인사 배치를 하고 임무를 명확히 하며 당 간부의 권력행사를 제약하고 감독하며 행정감찰과 회계감사를 강화한다.
-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당의 기율위원회의 검사체제를 개혁하며 반부패 지도체제와 각급 반부패 협조부서의 직능을 개혁 정비하여 기율위원회가 당내의 감독 전문기관이 되도록 하고 기율위원회 업무를 구체화, 절차화, 제도화하고 상급 기율위원회가 하급 기율위원회를 지도한다. 각급 기율위의 서기나 부서기가 거명되거나 조사를 할 경우에는 상급 기율위와 동 조직에서 주관한다. 중앙기율위가 1급 당과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검사하는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여 명칭과 관리, 책임을 통일하여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며 중앙과 지방의 순시제도를 개선하여 지방, 그룹,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 부패를 처벌하고 예방하며 청렴정치에 대한 장애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지도급 간부의 개인관련사항을 보고하며 직책의 회피제도를 택하며 지도급 간부의 관련사항을 공개제도를 추진하여 법률과 여론의 감독을 받게 한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배격하고 지도급 간부들이 분위기 쇄신에 앞장서며 불필요한 회의와 문서작성을 줄이고 업무예산을 줄여 공용자동차, 공용출장, 공용접대의 '3공(三公)'으로 인한 경비와 사치스러운 공공건물 건설로 인한 경비를 줄인다. 인사 관여자에 대한 감사와 책임추궁

을 강화하여 관직청탁의 폐단을 없애며 조사제도와 고과제도의 부정과 무사안일, 무능문제를 해결한다. 지도급 간부가 생활용과 업무용 사무실을 다수 점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법에 규정한 규모 이상의 비서와 경호를 두는 것을 엄격히 규제한다. 지도급 간부들의 친인척이 경제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여 자신의 공권력이나 영향력이 친인척이나 특정관계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사회제도 개혁

- 사회통치체제를 새롭게 하여 인민의 근본이익을 최대한 확대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요소를 강화시켜 사회 안정과 국가 안전을 이룩한다. 당의 주도 하에 사회 각 방면의 참여를 고취하고 법치를 통하여 사회의 모순이 해결되도록 한다.
- 사회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치와 사회를 분리시키고 직업단체, 상인단체와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의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고 인터넷으로 위법 행정행위의 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식품, 의약 안전을 위한 통일된 감독기구를 정비하고 식품의 원산지 표기와 품질 표준화제도를 갖춘다.
- 재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제를 만들어 대형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의 치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안전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으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안전체계와 국가안전 전략을 정비하고 국가안전을 확보한다.
-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의 성과가 공평하고 전체인민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강조하고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체육교육과 미술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소양의 수준을 높이고 정보 기술을 통하여 우수한 교육자원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며 빈곤한 학생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자원 배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학생 선발과 시험을 분리시켜 학생이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한다. 의무교육은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인근학교에 취학하도록 하는 학구제를 시행하고 중등 직업학교는 9년제로 하며 초·중·고의 학력 평가

시험과 소질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직업 전문대학은 시험을 통하여 입학하는 것과 등록으로 입학하는 것을 조속히 분리한다. 대학교는 입학학력고사와 고등학교학력고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시키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과목 수를 줄이고 문과와 이과를 분리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한다. 성(省)정부가 교육을 통괄하는 범위와 학교교육 행정의 자주권을 확대한다.

- 취업분야에서 경제발전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인원을 채용하는 제도를 규범화하여 도시와 지방, 직업, 신분, 성별의 차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창조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고 대학 졸업생들에게 스스로 창업하는 정신을 고취시킨다.
- 노동 분야에서 노동의 보수와 생산율이 비례하도록 노력하며 초임보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사업장별로 봉급과 보조금제도를 규범화하고 자본과 지식과 기술, 관리 등이 요소시장에서 결정되는 보수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여 사회를 통괄하는 것과 개인별로 계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상호 연관시켜 보험금을 많이 낸 자가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하고 기초양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며 기관, 사업단위별로 양로 보험제도를 개선한다. 도시와 지방의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괄적으로 발전시키고 퇴직연령을 점차로 늦추는 방안을 강구한다. 전국적으로 현실에 맞는 주택보장과 주택 공급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적금제도를 수립한다.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여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킨다.
-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 공공위생, 약품공급에 관한 감독체계를 개혁한다. 서민들에 대한 의료위생제도를 개혁하고 도시와 지방의 서민들에 대한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망을 구축한다. 의료보험금 지불 방식을 개선하고 전 국민을 의료보험 체제를 만들고 중대질병에 대한 의료보험과 구조제도를 조속히 실시한다.
- 부부 중 일방이 독생자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며 자녀정책을 점차조정하고 인구의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4. 문화 분야 개혁

-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문화 소프트파워를 증강시키고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며 의식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고히 하고 당 전체와 전국 각 민족이 단결하는 공동사상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 정부는 문화영역에서 해결하려는 자세에서 관리하는 자세로 전환하며 당정은 소속 문화 분야와 합리적 관계를 유지하고 정확한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체제를 갖추어 인터넷상의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인터넷 여론을 관리한다.
- 현대 문화시장 체계를 수립하여 각종 문화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져 우수한 문화가 발전하고 열악한 문화가 도태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국가에서 경영하는 문화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公司)제나 주주제로 하고 문화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집약화 전문화한다. 사유문화기업의 발전을 고취하고 사회자본의 문화기업으로의 유입을 장려하며 문화상품의 평가제도를 개혁한다.
- 현대 공공 문화서비스 체계를 수립하여 서비스 체계를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일반대중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 공공도서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관, 과기관 등의 이사에 유관기관의 인사,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리하도록 한다.
- 문화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며 시장의 지배를 받고 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대외문화교류를 확대하여 문화의 대외 전파 능력을 높여 중국문화가 세계로 향하게 하고 문화기업이 해외로 발전하도록 한다.
- 해외의 우수한 문화인재를 영입하여 중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5. 생태문명 제도 개혁

- 자연자원 자산의 자산권을 인정하고 수류, 삼림, 초원, 황무지 등 자연생태공간을 통일하여 등기함으로써 귀속과 관리를 분명하게 한다.
- 국가 공원체제를 수립하여 자원 환경의 감시와 파괴의 정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 자연자원의 자산 부채표를 만들어 그 지역의 지도간부가 이임 시 자연자원 손해책임을 추궁한다.
- 자연자원과 그 산품에 대한 가격을 개혁하여 이를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한 자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워 오염 시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삼는다.
- 생태보호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독립적인 감독관청과 행정법규를 만들고 육지와 바다를 통괄하여 생태환경보호 감독관청이 생태환경을 보호 수리하는 동시 모든 오염물질 방류를 감독하도록 한다.

6. 국방과 군대의 개혁

- 중국군대는 당의 지휘 하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인정신이 투철한 강력한 인민 군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군사 이론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군사 전략지도를 강화하여 새로운 시대의 군사전략 방침을 개혁한다.
- 군대체제와 편제를 조정하고 지도관리 체제를 개혁하여 군사위 총부가 지휘하는 기관의 직능 배치 및 기구설치를 최적화 하고 각군 병종 영도관리 체제를 정비하며 전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 기구와 전쟁구역 연합작전지휘체제를 정비한다. 군병종의 비율, 장교와 병사의 비율, 부대와 기관의 비율을 조정하며 새로운 형태의 작전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군대의 단과대학을 개혁하여 군대교육을 강화하며 군대 대학교육, 부대 훈련, 군사직업교육의 3위1체식 새로운 군대 인력을 배출한다.
- 군대 직능임무의 수요와 국가정책제도가 상호 부합하는 군사인력자원 정책을 수립한다. 문관인제도, 병역제도, 사관제도, 퇴역군인 재배치제도 등을 개혁한다. 군사비와 경비, 물자관리 표준제도를 개혁한다.
- 군대와 인민이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통일적 지도체제와 군, 민의 군대주둔지역에서의 협조, 자원의 공동사용, 국방공업,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참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생산품의 관리와 무기장비 구입, 생산과 수리 업무에 민영기업이 참여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IV. 중국의 개혁 방안과 기존 국제질서와의 관계

3중전회에서 심의 통과된 각 분야의 개혁방안의 요지는 시진핑 당 총서기의 집권기간인 2020년까지 중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로 등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방안의 기본방향은 중국의 독창적인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각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수용하여 선진각국과 유사한 제도로써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방안이 선진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마르크스 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빠뜨리지 않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근거는 개혁방안의 이념적 기초를 서구에서 시행되어온 제도인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⁹⁾와 시민혁명을 거쳐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

에 두지 않고 중국의 전통적 가치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있다.

중국의 개혁방안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발달한 제도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개혁방안이 서구에서 발달하였고 오늘날 국제사회의 질서로 정착된 제도와 이념적 기초를 달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이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지휘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경제개혁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요기업을 국유기업으로 존치시키고 국가가 직접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서구제도를 수용하는 것과 중국의 전통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19세기 말 청나라가 중국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일부 선각자가 중심이 되어 변법자강운동(變法自強運動)을 할 때도 논의 되었다.

그 당시 서구의 제도를 수용하는 이론이 소위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기본으로 삼고 필요한 부분은 서구의 제도를 수용한다는 이론 즉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인데¹⁰⁾ 3중전회의의 개혁의 이념적 기초와 실제의 개혁방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개혁의 이념적 기초로 주장하는 내용은 실제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아직도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는 부분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사상은 정권의 핵심세력이 노동자 계급이거나 농민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나 중국은 이미 2000년에 장쩌민(江澤民)이 연설을 통하여 중국의 공산당이 선진적인 사회생산력과 선진적인 문화와 광범위한 인민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론을 주장하여 중국공산당이 계급정당이 아니며 자본가와 지식층을 함께 당에 영입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마르크스주의나 모택동 사상은 이미 공산당의 중심사상이 아닌 것으로 안정하였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중국의 개혁방안이 기존의 국제질서와 다른 점은 국가주도형제도이나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제도이냐의 차이 밖에 없는 결과가 되며 중국이 개혁에 성공하여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에 기반을 자본주의보다 국가주도형 자본주의가 더 능률적인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개혁방안의 실천전망

시진핑 당 총서기가 중심이 되어 내 놓은 개혁방안은 중국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앞으로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천되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중국은 1978년 덩 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주창하여 당초 예상한 이상의 발전을 이룩하여 중국 사람들은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개혁 방안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가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여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므로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대륙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개혁방안 그 자체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의 개혁 방안이 반드시 실천되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대륙은 19세기 중엽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이후 서구열강이 반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으며 그중에서도 1898년 무술변법(戊戌變法)은 일부 지식인과 청나라의 공친왕(恭親王)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서태후(西太后)의 반대로 100일 만에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 개혁방안이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아님은 이념적으로 마르크스 주의, 모택동 사상을 포함하고 공산당의 독재체제와 국가 기간산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국유기업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경영만을 개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협적인 개혁방안은 앞으로 중국인민들이 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공산주의 체제를 동경하는 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의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인(CEO)들은 대부분 중국공산당 간부들이다. 개혁방안은 국유기업의 경영을 정치와 차단하도록 하였으나 공산당간부들이 경영의 책임자들인데 이러한 개혁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¹¹⁾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여론화하는 역할을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부 언론과 홍콩, 대만 등의 언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개혁방안에 위반하여 부정부패가 나타나더라도 사법부도 공산당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하여 처리되기보다 공산당 내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개혁방안은 앞으로 중국이 대내외적인 문제로 순조로운 실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대내적으로 위구르와 티베트에서 중국 한족(漢族)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집단적인 반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불균형의 차이가 너무 커서 농민들과 농민공(農民工)들이 분출하는 불만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1919년 지식인이 중심이 된 5·4 개혁운동, 1986년 민주화 요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등과 유사한 민중으로부터 근본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단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경제개발에 따르는 공해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여 경제발전계획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의 부채가 너무 커서 지방재정 적자를 중앙정부가 해결하느라 개혁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남중국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 분쟁이나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한 일본,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중국정부가 개혁방안을 실현하는데 차질에 봉착할 수도 있다. 중국의 개혁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시진핑 총서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Ⅶ. 결론: 중국개혁으로 인한 국제정세변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

시진핑 체제는 2022년까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진핑 총서기가 제시하는 ‘중국의 꿈’, 즉 중국의 위상을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고 중국이 국제질서에 형성에 새로운 주역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개혁방안의 실천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난제가 많음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

시진핑 체제가 추구하는 개혁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존 국제질서를 수용하나 정치이념상 서구에서 발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당 주도하의 중국식 사회주의체제의 가치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기존 국제질서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중국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19세기에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한 개혁을 하지 못하다가 중국이 서구열강의 침입을 받을 시기에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으며 해방이후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오늘날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과 갈등을 야기할 경우 이러한 갈

등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 입장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추구하되 잃어서는 안 될 독자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

註

- 1) 2013년 12월12일자 베이징 발 新華社 전문 (<http://123.sogou.com/> 三中全會, 2013. 11.20 검색)
- 2) 人民網, www.people.cn 2013. 11.20 검색
- 3) 上掲, 2013. 11.20 검색
- 4) Google Economist, Nov 16, 2013 *Reform in China, The Party's new blue print*, by J.M. 2013. 11.20 검색
- 5) 人民網, www.people.cn 2014. 3. 13 검색
- 6) 上掲, 2014. 3. 14 검색
- 7) 中國共產黨第十八屆中央委員會第三次全體會議公報, 上掲, 2013. 11.20 검색
- 8) 유럽문제에 관한 연구단체인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2012년 11월 발간한 “China 3.0”이라는 책자에서 동 책자의 편집인인 Leonard Mark는 서문인 “What does the new China think?”라는 글에서 중국의 마오쩌둥체제를 China 1.0의 시대, 1978년부터 2008년 까지를 China 2.0의 시대, 시진핑이 등장한 이후를 China 3.0의 시대라고 명명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후진타오 체제는 경제발전은 이룩하였으나 필요한 개혁은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http://www.ecfr.eu/content/entry/china_3.0 참조)
- 9)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2010 Wilder Publications Translated by Talcott Parsons Cambridge, MA USA, 1958 참조
- 10) 李澤厚, 中國現代思想史論, (三民書局, 臺北, 2002) pp337-350 참조
- 11) Arther R. Kroeber, *Xi Jinping's Ambitious Agenda for Economic Reform in China* (Brookings Opinion November 17, 2013) 참조. 2013. 11.30 검색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의미와 성과

- 한국의 기여와 향후 발전 방향

신 동 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I. 헤이그 제4차 정상회의 결과

1. 워싱턴에서 서울, 그리고 헤이그

2014년 3월24일~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금번 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의로서, 국제사회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최고위급의 정치적 모멘텀을 이끌어냄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국제 핵안보 레짐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핵테러 위협 방지와 핵물질 및 관련시설의 방호를 위한 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워싱턴에서 최고위급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였다면,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프로세스를 정치적 선언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실천의 단계로 진전시켰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발표한 ‘4개년 핵물질 방호 이니셔티브(4-Year Lockdown)¹⁾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12개 국가²⁾들로부터 약 3,000톤의 고농축우라늄의 완전한 제거(cleanout)를 달성하는 등 핵안보정상회의의 프로세스는 위험 핵물질의 최소화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는 지난 4년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함께, 2016년 미국 정상회의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의 미래, 즉 제도화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로서 ‘헤이그 커뮤니케’가 채택되었으며, 16개의 공

동성과물(Gift Basket)³⁾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이태리, 벨기에, 폴란드 등이 향후 자국 보유 핵물질을 제거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서울 정상회의 이후 2년간 핵안보 양대 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⁴⁾ 비준국이 각각 13개국 및 18개국 늘어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우리나라, 호주 등이 IAEA 핵안보 기금에 대한 추가적 쟁점 기여를 약속하는 등 IAEA 활동에 대한 지원을 공약하였다. 또한, 금번 헤이그 회의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Scenario Based Policy Discussion)'를 정상회의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가상의 테러 위협을 담은 비디오통상영하고, 각국 정상들이 각자 정책 대안을 선택, 심도있는 토의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한편,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tomic 2014'라는 국제 핵안보 모의훈련이 개최되어 핵안보 유관 정부기관과 IAEA 및 인터폴 등 국제기구 등이 참석해 위기 상황에서의 국제 협력 및 공조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핵안보 분야 학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2014 원자력 지식 서밋' 및 원자력 산업계 CEO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2014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도 개최되어 핵안보에 대한 산업계 및 민간 분야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더스트리 서밋에서는 '산업계 공동선언문'을 채택, 이를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 헤이그 커뮤니케 주요 내용 》

※ 워싱턴 및 서울 정상회의 목표와 조치를 기반으로, 핵심 핵안보 과제와 분야별 실천조치 제시 (전문+35개항)

- 핵안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 강조
-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및 '핵테러억제협약' 비준 촉구
-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 강화 및 지원
- 유엔 및 기타 국제 이니셔티브의 역할 지지
- 위험 핵물질 최소화 장려
 - 고농축우라늄(HEU) 및 플루토늄(Pu) 최소화 권고
 - 핵연료의 HEU → LEU 전환 장려 및 관련 기술협력 환영
- 핵안보와 핵안전의 상호 보완 및 강화
- 국제 협력 강화
 - 역량 제고, 모범관행 공유, 핵안보 훈련센터를 통한 협력 등
- 정상회의 프로세스의 미래 (2016년 제4차 정상회의 미국 개최)
 - 핵안보체제 강화 노력 지속 및 IAEA 역할 강화

2. 헤이그 정상회의의 특별한 의미

금번 정상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다는 점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헤이그는 ‘정의와 평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이준 열사가 순국한 도시로 더욱 익숙하다. 일본 침략의 상징인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를 찾았던 이준 열사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다. 그 헤이그에서 3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에 관한 개막 특별연설을 하였다. 이 개회식에서는 박 대통령과 함께 주최국 네덜란드 총리와 한국 출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3명만이 연설을 하였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100년 전의 아시아 변방 약소국이 아닌, 글로벌 이슈를 선도해 나가는 당당한 주역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헤이그는 국제재판소들이 집결되어 있는 장소로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는 우리나라의 송상현 재판소장이 그리고 유고전범재판소(ICTY)에는 권오곤 재판관이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헤이그 정상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를 철저히 계승하였다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금번 정상회의의 결과문서는 구성 및 내용에 있어 서울 코뮈니케를 발전시켜 작성되었으며, 헤이그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공동성과물 중 다수도 서울 정상회의시 발표된 성과물을 기반으로 하였다. 필자도 지난 1년간 한국 교섭대표(Sherpa)로서 ‘헤이그 코뮈니케’ 성안 및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참가국들이 서울 정상회의 코뮈니케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II. 우리나라의 기여 및 역할

1. 우리 대통령의 활동

박근혜 대통령은 전임 정상회의 의장국 대통령으로서 개회식 특별연설, 본회의 토의,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등 핵안보정상회의 세션별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3월24일 개회식 특별연설을 통해 핵테러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하에서 국제 핵안보 체

제가 추구해야 할 아래 4개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핵안보·핵군축·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⁶⁾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였다. 둘째, 원전 밀집도가 높은 동북아를 예로 들며, 개별 국가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핵안보 조치를 역내 국가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지역협력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핵안보 분야 국가 간 핵안보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 국제원자력기구(IAEA) 3자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베트남 내 ‘방사성물질 위치 추적시스템(RADLOT)’ 구축사업⁵⁾과 같은 국가 간 원-원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넷째, 국제사회가 핵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한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방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와 같은 장을 통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진전을 촉구하였다.

같은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핵안보(nuclear security)를 위협하는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을 증대한 도전으로 지적하고, 핵비확산조약(NPT)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불법적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비확산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핵안보와 핵안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 대상이므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조속히 폐기되어야 함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강조하였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천명하면서,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시나리오 기반 정책 토의에서, 실제 테러 상황 발생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정부의 대응을 강조하였다. 시나리오 기반 정책회의는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가상의 국제 테러단체가 글로벌 금융체제의 상징적 기관 및 시설에 대한 핵·방사능·사이버 테러 위협을 실시한다는 가정 하에, 각국의 정상들이 각자 정책 대안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핵물질 탈취 소식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고, SNS를 통해 근거없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차분한 기초 하에 확인된 사실 위주로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비상대책반 구성 등 정부 조치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의장인 네덜란드 총리 등 많은 정상들이 공감함을 표명하였다.

2. 실질적 성과 및 향후 실천계획

박근혜 대통령은 3월25일 기초발언을 통해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그간의 기여내용과 앞으로의 실천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가 그간 핵안보 강화를 위해 기여해 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2월, 대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내에 ‘국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INSA)’를 개소하였고,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핵안보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3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⁷⁾를 수검하여, 우리나라의 원전 시설에 대한 방호 시스템의 우수성을 IAEA로부터 입증 받았다. 셋째,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원전 기술을 통해 연구용 원자로의 새로운 고밀도 핵연료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을 미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과 진행중이다.⁸⁾ 넷째, 베트남, IAEA와의 3자간 협력을 통해 베트남 내 ‘방사성 물질 위치 추적시스템(RADLOT)’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6년 미국 정상회의시까지 실천할 새로운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안보 분야 2대 협약인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을 우리나라의 이행법안인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즉시 비준할 것이다. 양 협약은 사실 2012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공약한 사안으로 금번 헤이그 정상회의까지 비준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5월 초 ‘원자력 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 이제 두 협약의 비준서 기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둘째, 안보리 결의 1540호 채택 1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1540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금년 5월 결의 1540호의 이행 강화를 위한 안보리 고위급 토의를 개최할 것이다. 셋째,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핵안보 분야 새로운 위협인 원전시설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2012년 서울 정상회의시 도입된 공동성과물(Gift Basket)의 확대·발전에 우리나라가 적극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상회의 개최 3개국(한국, 미국, 네덜란드) 주도의 ‘핵안보 이행 강화’와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 강화’⁹⁾ 등의 공동성과물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핵안보는 외교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 간 협력, 그리고 민·관·산·학의 역량이 집결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우리 정부는 상기 공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핵안보 실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Ⅲ. 핵안보, 핵비확산, 핵안전의 연계(nexus)

1. 핵문제의 통합적 해결 노력

핵문제는 핵안보, 핵비확산, 핵군축에 더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안전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단지 핵안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개회식 특별 연설에서 제시한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4개항 제안(4-point proposal) 중 첫 번째로 핵안보와 핵군축, 핵비확산이 서로 시너지를 갖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

특히, 핵안보와 핵비확산은 선순환을 이루며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다. 핵안보는 국가 중심의 비확산 체제의 범주를 비국가 행위자까지 확대시켜 전통적 비확산 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핵비확산 노력을 통해 추가 핵개발을 억제하고, 무기급 핵물질이 생산되거나 이전되지 않는다면 핵안보에 대한 위협도 그만큼 원천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핵안보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핵안보와 핵비확산 간 시너지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금번 정상회의시 개최된 외교장관 특별 오찬 연설을 통해 향후 핵안보와 핵비확산 체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분야로서, 3S(Safeguards, Security, Safety)에 병행한 개념으로 3C(Controls)를 제시하였다. 즉, 핵보유국 확산 억제(Proliferation Control), 핵분열물질 통제(Fissile Material Control), 핵물질 및 민감기술의 불법이전 통제(Export Control)가 그것이다.

첫째, 핵보유국 확산 억제(Proliferation Control) 측면에서 핵비확산조약 체제(NPT system)를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북한·이란 등 확산 우려국에 대해 핵개발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확산 우려국이 핵보유에 대한 계산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무기급 핵물질 통제(Fissile Material Control)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을 조기에 체결하는 것이다. FMCT는 핵의 수평적 확산 및 수직적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불법탈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핵안보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핵물질 및 민감기술의 불법이전에 철저히 대응(Export Control)해야 한다. 특히,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WMD 확산 행위를 규율하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핵비확산 및 핵안보 간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대표

적 활동 중 하나이다. 한국은 안보리 결의 1540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1540호에 관한 고위급 안보리 공개토의 개최 등을 통해 동 결의의 보편적 이행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2. 북핵 문제 – 핵안보, 핵안전과의 연계성

핵비확산과 핵안보, 핵안전의 도전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계 평화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핵비확산 문제가 핵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이다. 아울러 북한내 영변 등 핵시설 밀집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긴급한 과제이며, 핵비확산, 핵안보 및 핵안전 간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에 만난 각국 지도자들에게 비확산 측면 뿐만 아니라, 핵안보 및 핵안전 측면에서도 북핵이 조속히 폐기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3. 핵안보에 대한 여론·문화 형성

핵안보와 핵안전 간 시너지를 위해서는 핵안보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안보 문화란 국가, 규제 기관, 연구 기관, 원자력 산업계 및 여타 관련자들이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핵안보를 증진하는 일종의 모범 관행 및 교훈들을 의미한다. 핵안보 문화가 견고히 뿌리내린다면, 핵테러 또는 여타 범죄 위협들에 대해 각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특히, 원자력 산업계, 연구 기관 및 각종 방사선원 이용 민간 시설들은 핵안보의 제1방어선으로서 핵안보 문화 강화의 주역이며,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 제고 등은 핵안보 뿐만 아니라 핵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핵안보 문화는 국제 협력, 특히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제고될 수 있으며, 국제 핵안보교육훈련센터(Center of Excellence)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INSA라는 국제 핵안보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동 센터가 앞으로 역내 핵안보 문화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V. 향후 발전 방향

1. 2016년 미국 정상회의 전망

2016년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다시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3차례의 정상회의 결과를 기초로 국제 핵안보체제의 제도화 방안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정상회의시 각국 정상들은 핵안보정상회의의 미래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소규모 핵심그룹(core group)을 통해, 궁극적인 핵안보체제(ultimate architecture) 구축을 위한 옵션들을 검토하여 2016년 정상회의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향후 2년간은 동 핵심그룹을 중심으로 프로세스의 미래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 정상회의에서 핵심그룹의 옵션들이 본격 논의될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원자력 산업계 및 민간 분야, 군사용 핵물질 방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원자력 산업계 및 병원 등 민간 분야를 핵안보 강화 프로세스에 충분히 관여시키는 문제와 향후 핵무기 보유국 간 군사용 핵물질 방호에 관한 최적 관행 강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핵안보정상회의가 군사용 핵물질도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2016년 정상회의 및 그 이후의 핵안보 체제 수립에 있어 동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전임 의장국이자 핵안보 핵심 주도국으로서 핵심그룹 및 실질 내용 논의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2. 핵안보정상회의의 제도화 문제

2016년 미국 정상회의 이후의 국제 핵안보 체제를 제도화(institutionalize)시키는 문제에 대해, 많은 정상들은 미래의 국제 핵안보 체제를 IAEA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 핵안보 규범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및 ‘핵테러억제협약’의 보편적 가입 및 이행의 중요성과, 각국의 핵안보 이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제도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IAEA 주최 핵안보 회의를 각료급으로 격상하여 3년 단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UN에서도 관련 고위급 회의 개최를 통해 정치적 모멘텀을 지속해나가며, 인터폴(Interpol)을 통해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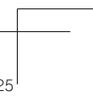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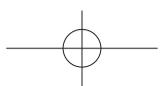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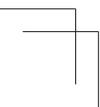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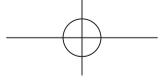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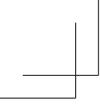
테러 행위 탐지, 추적, 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망을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2016년 정상회의 이후 정상회의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말고, 핵심그룹을 통해 2016년까지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결국 핵안보정상회의의 제도화 문제는 항구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면서도 현재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정치적 모멘텀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차례의 정상회의 결과문서가 확인하고 있듯이 이 과정에서 IAEA가 중심적이고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핵안보 논의를 지탱해 나갈 공고한 국제 핵안보체제의 구축은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에 남겨줄 수 있는 중요한 항구적인 유산(permanent legacy)이 될 것이다. 우리는 2012년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핵안보 논의의 핵심국가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를 주최하여 사이버안보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또한 핵 비확산분야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핵안보 및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

註

- 1) 4-Year Lockdown :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해 '전 세계 모든 취약 핵물질의 4년내 방호 달성'을 천명
- 4년간(2009.4~2013.12) 3,000kg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 및 플루토늄(Pu) 제거 및 처분 달성 : 핵무기 12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
- 2) Cleanout 12개국 :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터키, 리비아, 칠레, 멕시코, 대만, 베트남
- 3) 공동성과물(gift basket) : 다수의 유사입장 국가들이 공동 참여하여 특정 핵안보 분야 성과사업을 공동발표문 형태로 함께 공약하는 방식
- 4) 핵테러억제협약(ICSANT: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2005년 4월 채택) : 핵·방사능 테러행위 규율을 목적으로 핵·방사성테러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2005년 7월 채택) :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강화를 목적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
- 5)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핵무기 및 기타 핵폭발장치용 핵분열물질의 생산을 금지하는 다자조약으로서 1990년대 말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나, 국가 간 의견대립으로 협상 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6) RADLOT(Radiation Source Location Tracking) 사업 : 우리나라가 운영중인 GPS 기술을 이용한 방사성 물질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베트남에 구축해 주는 사업
- 우리나라가 IAEA에 재정기여한 '핵안보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중
- 7) 물리적방호자문서비스(IPPAS: International Physical Protection Advisory Service) : 각국의 물리적 방호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주는 IAEA 서비스
- 8) 고밀도(high-density) LEU 핵연료 개발 사업
- 연구용원자로 연료를 현행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에서 저농축우라늄(LEU)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
- 서울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벨기에가 4개국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한 협력사업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독자 개발한 원심분무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며, 동 기술이 실증되면 세계 연구로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 9) 안보리 결의 1540호 (2004년 채택) :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 방지 조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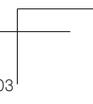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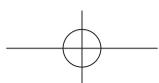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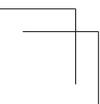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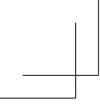


회원칼럼

- 상하이 한·미 정상회담에 얽힌 뒷이야기
- 세계질서의 변화와 대응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 보면서
- 일본 규슈지역 역사 탐방 기행
- 카이로 회담의 역사적 현장에 한국의 이정표를 세우다

수상

- 一寸光陰
- 쇼팽과 안익태 - 마요르카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실보물전을 보고



상하이 한·미 정상회담에 얽힌 뒷이야기

정 태 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전 청와대 외교수석)



필자는 2001년 10월7일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되어 청와대로 출근하는 첫날 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사전 통보를 받고 이를 알리기 위해 주무시던 대통령을 깨우는 ‘호된 신고식’을 치루며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어서 10월15일에 예정된 고이즈미 일본 총리 방한 준비에 몰두해야만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의 정상회담 배석 임무가 외교안보수석으로서의 ‘공식 데뷔전’이 되었다.

청와대를 방문한 일본 총리는 말하였다.

“고백하건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됐던 해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일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흠모해 왔던 김 대통령과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인사말로 한·일 정상회담은 시작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환영사를 하였다.

“한·일 두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의 불행한 역사가 그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우호관계를 일거에 덮어버리고

상호 불신과 악감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불행한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부의 유산을 하루 속히 청산하는 것이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적으로 교과서 문제는 두 나라 학자 간의 공동연구로,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전범의 유해를 분리시켜 참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긍정적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김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탁견에 입각한 귀중한 제안에 공감하고 언급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다음 주 상하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시 갖게 될 개별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답변했다. 이로써 필자는 정상회담 배석이라는 ‘공식 임무’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전략 “북한 문제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0월20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의 상하이에서 제9차 APEC 정상회의가 열렸다. APEC 정상본회의는 물론이고 부수되는 개별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필자는 다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야 했다. 상하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일정 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칠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8개국 정상들과의 개별 회담을 과도하게 소화해야만 했다.

아시아와 태평양 공동체의 달성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있는 APEC은 아·태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제9차 상하이 APEC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발생한 9·11사태 이후 열린 첫 번째 국제회의였다. 여기에 미·일·중·러 4대국 수반을 위시하여 20개국의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APEC 정상회의 본래의 사명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9·11사태로 정치적 성격을 띤 테러 문제가 처음으로 중요한 정치 의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 특히 신경을 썼다. 2001년 3월8일 김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해 1월21일 취임한 부시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었다. 하지만 부시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미처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

고, 국내 언론은 참담한 외교 실패로 평가 보도한 바 있었다.

필자는 당시 치열한 선거전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본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사일방어망(MD)을 구축하려는 세계전략 구상을 수립하고 있었고, 일본과 나아가 한국을 MD망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부시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때에는 이와 같은 실패한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 점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침 상하이로 출발하기 직전 통상적인 정상회의 준비사항 보고회가 있었는데, 필자가 면담자료를 브리핑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나는 상하이에서 부시 대통령을 면담할 때 9·11테러만 이야기하고 북한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필자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문했다.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반응이 의아했으나 더 이상 캐지 않았다. 테러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필자는 다만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텍사스 출신 부시 짧게 끊어서 대화 좋아하는 스타일 ...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지요”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대화는 짧게 말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실 때 길게 오래 말하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서 말하는 대화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 상하이행 대통령 전용비행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하였다. 상하이에 도착하니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푸둥지역은 구역 전체가 완전 통제되어 자동차가 거의 없는 마천루의 도시로 바뀌어 있었다. 자본주의 자유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외견상 미국의 뉴욕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는 상하이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을 상징하고 있었다.

특히 10월19일 정상회담 전야제는 상하이 밤하늘을 화려하고 굉장한 불꽃놀이로 장시간 수를 놓았다. 필자가 워싱턴에서 정무참사관으로 재직할 때 매년 7월4일 독립기념일에 펼쳐졌던 불꽃놀이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상해의 하늘은 환상적인 불꽃 천지로 장관을 이루었다. 강택민 주석의 위용을 과시하려는 거대한 개막행사는 모든 참석자들을 놀라게 만들며 깊은 인상을 각인시켰다.

다음날부터 열린 상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합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9·11사태 이후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둘째, 보고르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상하이 합의'와 디지털사회 구축을 위한 'e-APEC전략'을 채택한다. 셋째, 세계화와 신경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베이징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끝으로 반테러 특별성명도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은 IT강국으로서 APEC 사이버교육 협력컨소시엄 출범에 앞장을 서는 등 독보적 기여를 하였다. 모든 회의는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는데, 오찬과 만찬 행사에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행사 모습은 중공군 인쇄전술을 연상케하였다.

부시의 질문 “김정일 위원장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APEC 정상회의 전야제 행사가 시작되기전 10월1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우리 측에서는 한승수 외무부장관과 외교안보수석인 필자가 배석하였고, 미국 측에서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부시 대통령께서 상하이로 출발하기 전 워싱턴 소재 회교도 모스크를 방문하여 미국의 반테러 운동이 결코 이슬람 종교를 부정하거나 공격하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응징하려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는 매우 용기 있고 현명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감사를 표시하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

“테러를 근절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테러를 근절하지 못하면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테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무기로 공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험하며, 이것이 방치되면 세계의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안심하고 비행기로 여행도 할 수 없고, 고층빌딩에 올라가는 것도 불안해질 것이고, 편지 같은 우편물도 마음 놓고 열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질서와 개인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테러를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테러응징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시 대통령이 화답했다.

“한국과 김대중 대통령이 테러를 반대하고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로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탄저균 공격은 당초 예상과 달리 치료가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다.”

이렇게 말한 부시 대통령이 이내 화제를 바꾸었다.

“지금부터 북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이 대북정책을 검토한 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조건없는 대북 대화를 제의하였지만 북한이 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어떻게 다루면 좋겠습니까?”

순간 배석하고 있던 필자는 깜짝 놀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 준비 점검 당시 예견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오로지 부시가 반길 주제인 반테러 이야기만 하였고, 이에 만족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먼저 거론하며 오히려 조언을 구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만 차분한 어조로 답했다.

“미국 일각에서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가

무용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정일 위원장을 100% 믿고 대화하자는 순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인과 같이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믿지 않았지만 소련과 대화했고, 교역도 했고, 헬싱키조약도 맺었습니다. 또 중국을 믿지 않았지만 닉슨 대통령이 세계적 전략차원에서 중국까지 찾아가서 마오쩌둥을 만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소련 해체와 중국의 개방과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부시 대통령이 답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린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대통령이 다시 말문을 이어갔다.

“저는 이러한 전략적인 외교 행위들이 미국의 국익과 일치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김정일 위원장을 믿지는 않지만, 만나서 대화를 해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단순한 평화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대륙과 연결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광대한 유라시아 지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 이익 증진에 공헌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 길을 열게되면 미국과 함께 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통역되는 순간 부시 대통령의 얼굴을 주의해서 보았다. 부시 대통령은 ‘실용’, ‘국익’, ‘미국과 함께’ 등의 표현이 나올 때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 표정은 공감과 만족으로 가득찼다. 다음과 같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시 대통령의 진심이 그대로 읽혀졌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통찰력 있는 대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세계만방에 보여주었던 상하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눈부신 결과면에서 7개월 전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참담한 결과와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 배경은 워싱턴 정상회담 당시의 부시 대통령은 첫째,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며, 둘째, 막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이 순진할 뿐만 아니라 대북 지원정책도 일방적 퍼주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셋째, 북한의 위협을 MD 구축의 구실로 삼아 남한을 MD 체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외중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의 ABM조약 파동까지 불거지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필자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귀국하고 난 후부터 절치부심하고 지난 7개월 동안 차기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대북관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일에 주력했고, ABM조약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외교부장관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등 미국에 대한 성의를 사전에 보였다. 특히 상하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김대중 대통령의 부시 대통령의 심리에 대한 연구와 대화 방식의 수정이 주효했다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정상회담 ‘주연’은 정상, 참모는 영원한 ‘조연’

정상회담은 정상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참모는 자료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조연’이나 ‘스텝’에 불과하고 주도적 연출력과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야 하는 ‘주연’이나 ‘감독’은 정상 자신이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판단력이 예리한 주연이자 감독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김 대통령은 면담 자료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재구성하여 시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마도 오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온몸으로 체득한 지혜라고 생각된다. 한 번 자신의 논리가 구성되면 쉽게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참모는 물론이고 누구나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부시 대통령과의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던 테러에 대한 발언도 9·11사태가 발생하자 김대중 대통령이 테러에 대한 생각을 평소 정리해두고 반복해서 주장하였던 발언과 동일하였다. 알기 쉽고 설득력이 있는 발언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예컨대 “테러를 근절하지 않으면 (탄저균 공격 때문에) 편지도 보낼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평이한 언급에 대해 부시 대통

령은 “그것(탄저균 공격)은 치료가 가능하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김 대통령의 대화 방식이 부시 대통령의 취향에 맞게 진행되자 이에 만족한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질문을 하는 것으로 호응했던 것이다.

정상회담은 최고의 외교정책 결정권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대의 외교정책과 수단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소한 태도와 습관에 대한 철저한 파악도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 출신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짧게 끊어서 하는 대화법을 좋아하는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대화 습관 정보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당시 미국에 대해 잘 아는 김경원 전 주미 대사가 대통령 자문관 자격으로 대통령을 수행하였지만 가까이서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필자가 적기에 상황에 맞는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제9차 상하이 APEC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제기된 정치 문제인 테러방지책에 관해서 강대국 간에 이견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은 중앙아시아 접경인 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으로부터의 테러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체첸 등 카프카스 지역으로부터의 테러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으로 테러방지책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동변상련의 인식 공유로 이견을 달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러규탄 결의문이 아무런 반대없이 채택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만남인 상하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대통령 외교안보 참모였던 필자에게도 보람이자 자랑으로 남아 있다. 승리의 축배는 변화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소한 것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자에게 예비된 선물이라고 믿는다. **외교**

세계질서의 변화와 대응

권병현 (전 주중 대사)



지구시스템의 위기

지구상의 인류가 서로간에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동시에 지구와 인간이 공평하고 균형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구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지구 시스템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는 당연한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제2차대전 후의 경제 시스템들은 21세기에 들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의 중심을 자처해 왔던 뉴욕의 월가(Wall St.)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급속히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세계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IMF 등 워싱턴 중심의 ‘브레튼 우드(Breton Wood)’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동시에 흔들리면서 세계경제 금융위기는 아직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금융위기 해결을 둘러싸고 세계 금융 질서와 경제 판도는 재편되고 있다. 새로 도입된 G20 정상회의에는 중국과 한국 등이 가담하고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급부상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지위의 현저한 부상과 함께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는 지구의 환경이다. 빠르게 악화되는 지구환경은 자연의 마감시간을 육박하고 있다. 지구 자체와 지구에 사는 70억 인류전체와 100여 만가지 생물 종 모두를 포함한 지구시스템 전체가 현재 위기를 향해 달려가

고 있다.

이 위기는 지구의 현재 시스템의 붕괴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후군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증후군은 지구의 기후 변화, 지구토지의 사막화와 황폐화, 줄어드는 물과 사라지는 생물의 종 등등이다. 지구와 인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20세기에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를 주도하여 온 지도국들이 지구환경의 위기를 대처하는데 충분한 통찰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와 지구의 환경위기, 이 두 가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지구와 인류를 지구적 차원에서 위협하고 있는 증후군이 이미 눈 앞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인류는 이 위기 증후군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진정한 위기의 본질이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형의 전환(Paradigm Shift), 즉, 새로운 사상, 인식 및 가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온 모형의 획기적인 전환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일수도 있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모색

이러한 배경에서 2012년~2013년 초에 걸쳐 미국, 중국과 한국에서 새 지도체제가 출범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제2기 오바마 체제가 출범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서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다.

2013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가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세계질서는 소위 'G2'라고 불리는 미·중 양대 강국 관계와 동아시아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는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지역은 인류문명사에서 매우 오랫동안 그 중심무대를 지켜왔고, 지난 1~2세기 동안 격동기를 겪은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지금은 회복의 새로운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필두로 곧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과 이어 6월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의 가속

화가 감지되고 있다. 소위 G2, 즉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국도 전략적 중견강국(Middle Power)으로 성장하여 세계무대에서 다방면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의미있는 기운이 태동하는 새로운 흐름이 주목할 만하다.

2013년 6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한·중 양국 관계도 특히 주목할만하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경제와 무역, 인적교류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양국 관계는 정치와 안보면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하면서 글로벌협력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신뢰의 새로운 20년 여행'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새로운 흐름을 지켜보면서 나는 두 가지를 특히 주목한다.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다

교착상태에 봉착한 당면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중국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찰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을 시작하면서 한국과도 실질적인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중 양국의 현 지도자들이 새로운 20년의 청사진이자 로드맵으로 제시한 '미래 비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대만을 포함한 '하나의 중국' 상호지지도향을 명기한 것은 의미 있는 함의(implication)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중 관계의 전반적인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나 협력은 사실상 새로운 발전이 없이 수교 당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인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지 한·중 양측에서 비단 정부나 관변뿐만 아니라 민간과 공공외교분야에서도 모두 진지하게 연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들여다보면, 2차대전이 끝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두 개의 두드러진 분쟁가능 지역이 바로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나는 1992년 한·중 간 국교정상화 교섭을 담당하면서 중국과 이 두 지역문제를 다룬 경험이 있다. 교섭이 개시된 직후 나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대만문제, 즉 소위 '하나의 중국'임을 쉽게 알게 되었다. 우리 한국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정책'에 대한 보상으로 한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절대적이고

명백한 지지가 가장 중심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1992년 8월24일 북경에서 한·중 양국 외상 간에 서명된 국교정상화 최종 문서에는 ‘하나의 중국정책’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조기 실현’에 대한 상호지지가 분명하게 기술되어있다.

당대 석학으로 존경 받는 지신린(季羨林) 북경대학 교수는 북경대학 창건 100주년인 1998년 바로 이 대학에서 개최된 한·중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동양이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 왔고 그 중심무대에 중국이, 그 가장 가까운 곳에 한국이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함께 서 있어왔다고 말했다.

역사는 회복되고 있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 그 가까운 곳에 한국이 자리잡고 있다. 이 회복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는 한반도의 회복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갈등의 궁극적 원인이 남북분단에 있으며, 한반도 안보문제의 궁극적 해결책 또한 한반도 통일에 있음을 알게 된다. 매우 동질적인 한민족을 인위적으로 분담시킴으로써 발생한 비극적인 분쟁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분단은 크고 작은 모든 당사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못 주고 직간접적으로 끊임없는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 돌이켜보면 분단자체가 잘못된 사건이었다. 잘못 저질러진 일은 이제 고칠 때가 왔다.

평화적인 회복의 절차가 펼쳐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역사적 역동성 속에서 한반도는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평화도 회복될 것이다.

둘째는 지구환경문제다

미래 비전 공동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의제는 기후변화·대응과 지구환경 보호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분야에서도 한·중 양국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중국이 세계 양대 강국의 하나로서 지구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국제적 책임이다. 한국도 이제는 전략적인 중견강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자국의 국익을 초월하여 지구환경문제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강해지는 중국을 세계시민들과 세계각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되는 한국을 세계시민들과 세계각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중 양국의 회복된 지위에 수반하는 글로벌 책무다.

고로, 이번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지구환경에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고 잘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화대학 연설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 등 글로벌 상생을 위한

한·중 협력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 한 예로 ‘한중미래숲’을 들었다.

“우리 한·중 양국의 젊은이들이 네이멍구 사막에 600만 그루를 식수했으며, 중국내륙의 사막화를 막아 황사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양국의 좋은 협력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협력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신린(季羨林) 교수는 1999년 8월24일 베이징 한국대사관에서 열렸던 한·중 수교 7주년 기념 ‘21세기 한·중협력 동반자관계 발전방향’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천인합일’ 사상을 주제로 다음 요지로 발표하였다.

“기계문명으로 파괴한 대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천인합일 사상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바로 동방(동양)사상의 기초이다.”

“동방의 문화는 천인합일, 즉 인간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통적인 문화가 흐른다. 이는 자연정복을 위주로 한 서양문화와 대칭되는 동양 특유의 문화다. 한·중 양국간 교류는 바로 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천인합일의 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기를 나는 바란다. 환경파괴를 막고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동양의 천인합일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는 요지였다.

이 천인합일사상은 UN이 2011년에 채택한 ‘자연과의 화합(Harmony with Nature)’ 결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의 회복과정이 동양문화의 기본 사상인 ‘천인합일’로 돌아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느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모형을 전환할 수 있다면 새로운 문명이 태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공청단)와 한국의 미래숲이 내몽고 현지 인민정부와 2006년 10월에 시작한 ‘한중우호녹색장성’ 건설사업 제1기 공정은, 5년 동안 사막을 남북의 끝을 이어 가로막는 16.5km의 녹색장성을 만들었다. 2007년에는 ‘한중우호녹색생태원’조성사업에 착공했다.

작년 4월20일 ‘어머니 지구의 날’은 뜻 깊은 날이었다. 한중녹색장성의 3당사자들은 이 사업을 한·중 양국의 차원을 넘어 ‘지구살리기’ 글로벌 사막화방지 생태원 시범마을 복원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구살리기 협정서를 체결했

다. 그날 쿠부치사막 현장에는 한·중 양국의 청년 녹색봉사단과 현지주민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지구를 살리는 이 글로벌 운동에 동참하고 나무를 심었다. 지난 여름에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 및 내몽고 대학생들이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가서 나무를 가꾸고 '지구살리기 내나무(Billion Trees in Desert)'에 명찰을 달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오바마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김대중 전 대통령과 300여 명의 세계각지의 지구 구원자들의 나무가 기증되어 사막에 심어졌다.

금년 3월 마지막 주에는 13년째를 맞는 제13기 녹색봉사단이 다시 쿠부치 사막을 찾아 중국의 청년들과 현지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현장에서 '그린코어(녹색봉사단) 지구살리기 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오늘 우리 지구살리기 ‘그린 코어’는 이 거대한 유라시안 사막대의 동쪽 끝, 쿠부치 사막에 다시 모였습니다. …… 우리는 전세계 젊은이들이 손잡고 지구를 살리는 ‘그린 코어’를 만들고 …… 우리의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가 이 사막에서 시작한 녹색장성, 녹색 생태 마을, 그린코어는 이제 지구의 모든 사막, 황무지와 건조지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 지구와 인간이 상생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을 건설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쿠부치 사막의 최동단 전선을 막는 녹색장성은 성공했다. 이동사막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나무를 심어 이동사막의 전진을 막을 수 있고, 사막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성공을 토대로 ‘사막은 막을 수 있다’는 한·중 청년들의 협력모델이 아시아와 다른 대륙에도 확산되어 지구살리기 녹색장성 생태원 ‘그린 코어’가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유엔환경계획(UNDP)에 따르면 북한의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는 매우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중이라 한다. 북한의 황폐화 된 땅에 나무를 심어 녹지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문명의 뒤에는 사막이 있고 문명의 앞에는 숲이 있다고 한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고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는 새로운 문명이 동트기를 바란다.

새로운 문명이 동트며 한반도가 평화롭게 원상회복 되기를 바란다. **외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 보면서

강근택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EU 간 FTA 협상 중단을 발표하자 수도 키예프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가 발생하였다. 진압 경찰과 반 정부 시위대간 격렬한 공방 속에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고 결국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곧이어 러시아에 의한 크림반도 합병 조치가 뒤따랐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태가 일단락 된 것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주요 도시에서 분리 독립과 러시아와의 합병을 요구하는 친러시아계 주민들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들 시위대는 점차 과격해져 지방정부 건물과 주요 군사시설 일부를 점거한 채 정부군과 무장투쟁을 벌이면서 러시아에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호응하여 자국적인 보호라는 명분아래 군사개입을 검토 중에 있고 미국을 비롯한 NATO 동맹국들은 크림사태 당시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러 양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외교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것 같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연방제를 도입하여 동부지역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대외정책으로 비동맹 정책을 추구 할 것을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비동맹 정책을 요구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이는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입장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연방제 도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양분시켜 궁극적으로 동

부지역을 러시아에 합병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외정책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다.

오는 5월25일 우크라이나 대선이 가까워 질수록 사태가 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불안스럽다. 최근 동부지역 14개 도시가 친러세력들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하고 남부 오데사에서도 정부군과 시위대의 충돌로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동부지역 친러계는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월11일 도네츠크 및 루간스크 2개주에서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감행하였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동부지역 분리·독립 투표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으나 주민 투표는 감행되고 말았다. 과연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떠한 결말을 보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하겠다.

나는 지난 1998년 4월부터 2년 반 동안 주 우크라이나 대사로 근무하였다. 대사로 재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 내 여러 곳을 다녀보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크라이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하는데 내가 얻은 지식과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 4,500만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면적은 한반도 전체의 3배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의 동·서를 드니프로강이 양분하고 있고, 강 서쪽을 서부 지역 또는 서안이라 부르며 강 동쪽은 동부지역 또는 동안이라 부른다. 동남부에는 흑해를 끼고 반도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크림 지역이다.

서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인의 인구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산업은 농업이 중심이다. 동부지역은 군수산업과 석탄산업을 기반으로 하며 우크라이나인이 다수지만 러시아계도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크림지역은 인구의 약 70%가 러시아계이며 우크라이나인의 인구 비율이 다른 2개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 산업으로는 농업(주로 포도 재배)과 관광업이 중심이다.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상이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먼저 서부지역은 과거 여러 차례 폴란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리투아니아의 영토로 편입되어 온 지역이다. 그로 인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종교적으로도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연합 동방교 신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슬라브 문화의 원류라 일컫는 ‘키예프 루시’를 모체로 발전되어 이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체성이 높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외세의 지배를 받아 오면서도 우

크라이나어를 보존하여 왔으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자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어를 공용어로 채택한 지역이기도 하다.

동부지역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지배를 대부분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 문화권에 속하며 주민 대부분이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다. 서부와는 달리 러시아어도 공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우크라이나어는 잘 통용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우크라이나인이라 하더라도 러시아계와 결혼하거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과거 구 소련 당시 군수품 생산과 우주 항공 분야 거점지역으로 육성되어왔기 때문에 다수의 러시아계가 이곳으로 이주하여온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러시아와의 연대 관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이번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시위로 잘 알려진 도네츠크는 탄광지역으로서 우크라이나 석탄 생산의 중심지이다. 과거에도 광부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여러 번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곳이며 러시아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크림지역은 이들 두 지역과는 달리 1954년까지 러시아 연방 영토의 일부였다. 구 소련연방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대부분 성장하여 온 인물이다. 과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폴란드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제국에 합병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후르시초프는 합병서약 300주년을 기념하여 크림지역을 러시아연방에서 우크라이나로 할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시에 있어서 크림지역을 우크라이나에 할양하는 것은 소련연방국가내에서 관할지역을 변경하는 정도의 조치로서 소련연방 전체의 영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크림지역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가 됨으로써 러시아는 크림지역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유럽진출 기지로 삼아왔던 해상 요충지인 ‘세바스토폴’항도 동시에 잃어 버리게 된 것이다. 러시아내에서는 크림지역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크림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의 시위와 반발이 계속되어 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는 세바스토폴에 주둔해 있던 흑해 함대를 50:50으로 분할하고 러시아가 기지 사용권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크림지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많은 자치권을 주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져 최근까지 이 관계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정도 즉, 우크라이나인의 대 러시아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우크라이나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슬라브 문화를 일으킨 원류라고 믿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문화적으로는 러시아에 뒤지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이야기를 키예프 발레단 단장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그를 만나게 된 것은 키예프 발레단의 아시아 순회 공연과 관련해서 한국 공연이 가능한지를 협의하는 자리에서였다. 그는 불쑥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이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발레단도 실력이 그에 못지 않다는 말을 꺼내고 나에게 스크랩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여 주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소련연방 시절 모스크바 연방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해외공연에 볼쇼이 발레단 등 러시아 발레단들이 주로 나가게 되고 키예프 발레단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독립과 더불어 키예프 발레단이 해외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자 그 실력을 해외에 마음껏 알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뉴욕타임즈의 키예프 발레단에 대한 비평 기사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키예프 발레단에 대한 찬사와 예술성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 내용이였다. 발레단 단장은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일본 왕실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에게 보여 주었다.

또 한 가지 내가 알게 된 것은 구 소련의 중요 인사들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이었다.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레즈네프 전 서기장과 KGB 의장이었던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브레즈네프는 도네츠크 출신이고 프리마코프는 키예프 출신이다. 후르시초프도 어린 시절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성장해왔고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을 역임한 관계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를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구 소련 지도자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의 다 브레즈네프라고 답한다. 그들은 브레즈네프가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동·서 냉전 해소를 주도하고 경제도 안정시킨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나는 여러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우크라이나인에게는 러시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보였다. 첫째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인에 자행한 대기근 아사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1932년부터 1년간 발생하였으며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에서 연유되었다.

스탈린이 전국적으로 집단 농장 정책을 실시하자 농촌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농장 개인 경영의 전통이 깊었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심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당국의 의도대로 농업 생산량이 기대에 못 미치게 되자 이들은 그 책임을 부농들에 덮어 씌우고, 농장에 강제로 들어가 식량

을 빼앗고 종자용 곡물까지 수탈해 갔다고 한다. 이에 농민들은 농사 일에 필요한 가축들도 빼길 것을 우려하여 도살 처분하고 농기구도 없애 버리면서 대항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농지 면적이 급격히 축소되고 대기근이 시작 되었다고 한다.

모스크바 당국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이를 방치한 결과 800만 또는 1,000만의 우크라이나인이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것으로 사태를 끝내지 않고 집단 농장 정책에 반대했거나 농민들의 저항에 동조한 우크라인들을 색출하여 연해주나 시베리아 등지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과거 4천1백여 만 명에 달했던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1945년 통계에 의하면 2천7백여 만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아로 죽고 강제 이주 당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호주, 헝가리, 리투아니아, 바티칸 등이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대량 학살 사건(Genocide)으로 인정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매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을 기념일로 정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둘째로는 1986년 4월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들 수 있다. 체르노빌은 수도 키예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북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때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국의 하나로 명성을 떨쳤던 우크라이나가 그 지위를 잃게 된 것은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폭 결과였다. EU 등 주요 나라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 판로가 막혔기 때문이었다.

내가 대사로 재직할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피해 복구와 관련 국제적 원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외무성은 각국 대사들과 국제기구 인사들을 대상으로 체르노빌 원전 시찰 행사를 주선하였다. 나도 이 초청에 응하여 사고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원전 사고 지점을 반경으로 하여 30km 지점부터는 출입 제한 구역(Exclusive Zone)으로서 소독과 방사능 오염 방지 장비 등을 갖춘 후 들어 갈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은 원자로가 4기나 되는 구 소련 내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큰 원자력 발전소의 하나였다. 따라서 원전 기술자와 관리인력, 그리고 가족 등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아 주변 마을도 이들의 소비로 활기를 띠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폭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강제로 마을을 떠나게 되어 전 마을이 유령화되고 말았다. 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소련 당국자들은 원전 사고가 나자 혼란을 우려하여 이를 즉각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초기에 희생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피해가 확산되었다고 한다. 키예프에 있는 체르노빌 추념관에 가면 희생된 꽃다운 어린 아이들의 사진과 기형으로 변한 가축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3백만 정도의 우크라이나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갑상선 암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기형아를 낳을 불안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며 원전 사고 이후 출산율도 3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한다. 2013년 4월에는 KGB 문서가 공개되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였다고 한다. 구 소련 당국은 1986년 사고 이전부터 원자로의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반목과 대립의 관계에 서 있기도 하지만,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공존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여건 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견해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이러한 여건을 마련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는 에너지의 약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천연가스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높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외교 정책에 압박을 가해오곤 하였다. 러시아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30% 이상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공급 중단을 통보 하는 등 천연가스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온 것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작정 버릴 때까지 내몰 수는 없다고 본다.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 파이프 라인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셰일 가스 공급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중요성도 무시 할 수 없는 요인이라 생각한다. 과거 동유럽 나라들 대부분이 EU나 NA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현재 러시아에 대한 중요한 완충지역 역할을 해주고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한 편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러시아의 안보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증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용인할 수 있으나 NATO 가입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우크라이나를 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추억들을 회상해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해 본다. **외교**

일본 규슈지역 역사 탐방 기행

유 종 현 (한국외교협회 학술동호회장, 전 주 세네갈 대사)



2014년 4월9일 학술동호회 주관 한국외교협회의 일본 규슈(九州)지역 역사유적 탐방단(28명, 이중 부부 동반 8쌍)은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약 1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일본 땅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곧 바로 사가현(佐賀縣)으로 직행했다.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규슈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역사 유적이 가장 많은 곳이다. 첫날은 임진왜란의 흔적인 나고야성(名護屋城)과 나고야성박물관, 다음날은 백제 25대 무령왕의 탄생지 가카라지마(加唐島)와 임진왜란 때 연행된 도예공 이삼평(李參平)을 기리는 신사와 기념비를 답사하고, 마지막 날에는 고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의 우토성(宇土城),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의 구마모토성(熊本城), 그리고 마지막 답사로서 에다후나야마고분군(江田船山古墳群)을 찾았다.

이번 역사탐방은 크게 2가지의 테마로 구분된다. (1)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고대사의 유적, (2) 임진왜란의 일본 측 유적의 답사라고 할 수 있다.

I. 고대사: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

1. 가카라지마(加唐島)의 백제 25대 무령왕 탄생지

가카라지마(加唐島)는 대한해협에 있고, 행정구역상 일본 사가현 가라츠 시에 속

하는 섬이다. 이 섬에서 백제 25대 무령왕(武寧王, 462~523)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가카라지마에 가려면 요부코(呼子)라는 항구에서 하루에 4번씩 가카라지마를 왕래하는 선편을 이용해야 한다. 일행은 11시 출발하는 선편에 탑승하였다.

가카라지마는 면적 약 2.83km², 인구 약 208명의 작은 섬이다. 선착장에서 하선하여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전설의 동굴로 가는 비탈길에는 백제무령왕생탄지(百濟武寧王生誕地)라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 비는 2006년 6월25일 한국측 공주무령왕 국제네트워크협의회와 공주향토문화연구소, 일본 측은 무령왕교류 가라츠시 실행위원회와 가카라지마시마오카이(加唐島斯麻王會)가 시민의 모금으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기념비로부터 산허리를 돌아 약 100미터의 오솔길을 따라가면 작은 계곡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서 출산직후 허리띠를 빨았다고 하며, 그 지점에서 다시 해변으로 내려가면 무령왕을 분만했다는 동굴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 섬에서 태어난 무령왕(武寧王, 462년~ 523년 6월5일(음력 5월7일), 재위: 501~523)은 백제의 제25대 왕으로 성은 부여(扶餘)다. 1971년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릉이 발굴되고 거기서 발견된 지석(誌石)의 기록에 따르면 462년에 태어났다. 출생년도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과 거의 같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기록에는 이름이 사마(斯麻) 또는 용(隆)이라고 하는데, 사마(斯麻)는 일본 발음으로 시마=도군(島君=백제사마왕), 즉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백제신찬(百濟新撰)>에 따르면 무령왕의 아버지는 개로왕(=가수리군, 加須利君)인데 가수리군은 동생 군군(軍君=곤지왕)과 부인을 공유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서기>의 21대 유랴크 덴노기5년조(雄略天皇紀5年条)에 의하면 무령왕은 개로왕(가수리군)의 동생인 곤지왕자(軍君)의 아들이고, 동성왕은 이복형(異母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서기> 25대 부레츠덴노기 4년조(武烈天皇紀 4年条)에도 <백제신찬>을 인용하여 동성왕의 이복형이며 곤지왕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무령왕은 501년 동성왕이 위사좌평 백가의 계략으로 시해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외모가 수려했으며, 성격이 인자하고 관대하였다고 하며, 재위 23년간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하며, 특히 고구려에게 빼앗긴 한성(현 서울)을 탈환하는 등 혼란했던 백제를 안정시켰다고 한다. 그는 나이 62세에 죽고 그의 아들 성왕이 즉위하였다.

그런데 의문은 무령왕이 왜 일본 땅인 가카라지마에서 탄생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일본 역사학계는 무령왕의 어머니가 왜국에 인질로 파견되어 오던 중도에서

태기가 있어 급히 가카라지마에 내려 동굴에서 왕자를 출산했다는 설이 있는가하면, 일본서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개로왕이 군군(軍君=곤지)에게 고하여 “너는 일본으로 가서 천황(天皇)을 섬겨라”라고 하니 군군(軍君=곤지)이 대답하기를 “상군(上君)의 명에 어긋날 수 없습니다. 원컨대 상군(上君)의 부인을 (내 아내로 삼게 해) 주시고 그런 후에 나를 보내주시오”라고 하였다. 가수리군(개로왕)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軍君=곤지)과 동행토록 하고 “내 임신한 부인은 이미 산월이 되었다. 만일 도중에서 출산하면 부디 같은 배를 태워서 어디에 있던지 속히 나라로 돌려 보내도록 하여라”하였다. 드디어 헤어져 (대왜국) 조정에 보냈다. 6월1일 임신한 부인은 과연 가수리군(=개로왕)의 말대로 가카라 지마에서 출산하였다. 그래서 군군(軍君=곤지)은 배 한척을 마련하여 도군(島君)을 그 어머니와 함께 백제에 돌려보냈다.

이러한 일본서기의 기록에 대하여 이번 역사탐방단의 일행인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소진철 전 대사는 “일본 고대국가 대왜(大倭)의 기원은 한(韓)”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고대 규슈지방에 있었던 대왜는 백제에게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었으며, 그 시대에는 ‘일본’이나 ‘천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무령왕의 어머니를 군군(軍君=곤지왕)이 동반하여 대군(大君=개로왕)의 명을 받들어 대왜를 다니러 가던 도중 가카라지마에서 도군(島君=무령왕)을 출산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에다후나야마고분(江田船山古墳)

우리 일행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방문지로 택한 곳은 에다후나야마고분(江田船山古墳)이었다. 이곳 고분군은 1873년 1월4일 발굴된 전방 후원분(前方後円墳)으로 일본 구마모토현 다마나시(玉名市)에 위치하고 있다. 미리 고분관리사무소와 연락이 되어 해마다 봄, 가을에만 관람자들에게 고분내부를 공개하는 관례에 따라 우리 일행은 2군데의 고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곳 고분군은 일본에서 발굴된 고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큰 규모의 고분으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5세기 말~6세기 초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굴이래 수많은 부장품이 출토되어 이들 대부분은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부장품은 1965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고분 주변에 단갑(短甲=무사들의 철제 갑옷)을 입은 무사의 석인(石人)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형식이 6세기 전반의 이와도야마고분(岩戸山古墳)과 같다고 하며, 피장자가 527~528년의 야마도(大和) 왕권과의 투쟁에서 패배한 추쿠시노키미이와이

(筑紫君磐井, 6세기 북규슈 지방의 호족 ‘이와이’)로 밝혀진 점으로 유추해보면 에다후 나아마고분도 추쿠시노키미(筑紫君) 일족이 지배하던 지역의 수장(首長)들의 묘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피장자는 세 사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곳 고분에서 출토된 중요한 부장품으로서는 14개의 큰 칼, 말의 모습과 은상 감(銀象嵌) 문자의 명문이 새겨진 철제 칼, 금동제관모(金銅製冠帽)와 금동제관 그리고 청동거울이 있다. 또한 출토된 금귀고리는 우리나라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것들과 모양이 같고, 금동신발은 무령왕릉이나 익산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과 매우 유사하다.

출토품은 도쿄국립박물관으로 이전되고 현장의 기념관에는 레프리카를 전시하고 있다. 출토품 중 긴사쿠메이타치(銀鍔銘大刀)라는 직도(直刀)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칼에는 75글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으며 맨 마지막에 ‘書者張安也’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이 칼의 명문을 쓴 사람은 백제계의 장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백제왕이 이 지방 통치자에게 하사한 칼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설자 다카키씨는 출토품의 대부분이 가야, 백제 유물과 유사한 것은 고대 왜국이 백제와의 무역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의 일부학자는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 관모와 금동 신발이 익산 입점리 1호분의 금동관모와 매우 유사하며 특히 반구상금구(半球狀金具)라고 부르는 금동관모 뒷편에 있는 움푹이 있는 뿔모양의 침금(沈金=옻칠을 한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칠을 한 다음 금박을 하여 금빛 무늬를 나타나게 하는 칠공예 기법)은 두 관모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후나야마 고분의 주인은 백제의 봉국인 담로(擔魯=백제의 지방 행정구역)의 지배자였다고 추정한다. 북한의 학자 김석형은 대도의 명문에 있는 서치대왕의 ‘치’자를 개로왕의 ‘로’자라고 볼 수 있어 백제 개로대왕이 북규슈의 한 후왕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백제와 왜국의 관계에 관한 인식의 차이

현재 일본학계는 고대역사에서 특히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느 수준인가를 알아보자. “2001년 12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직전에 일본천황이 일본 황실은 한국과의 인연을 느낀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황실의 역사 교사인 우에다 마사야키(上田正昭) 교토 대학교 명예교수는 “제50대 천황 간무(桓武, 737~806)의 어머니가 백제 25대 무령왕의 10대손 다카노 니이가사(高野新笠)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본 황실과 한국과의 인연이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여행에 동참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소진철 전 대사는 “고대 규슈지방에 있었던 대와는 백제에게 조공을 바쳤던 속국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의 국어대학 일본학과 홍윤기 교수는 “일본 역대 왕(천황)은 백제계와 많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예로서 간무천황(桓武天皇)이 나라(奈良)로부터 교토(京都)로 천도할 무렵 조정에 재정지원을 한 사람이 백제왕족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에다 마사아키 명예교수도 “고대에 교토 조정을 지원한 사람들은 도래인이며, 이 사람들이 일본에 정착하여 쿠다라 오우조쿠(百濟王族)로서 야마도(和), (또는 쿠다라오(百濟王))라는 성(姓)을 얻었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러한 한·일 간의 고대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양국 간의 고대사에 관한 인식차이는 현재 한·일 간의 관계 악화의 원인이기도 한 영토문제, 군위안부문제 등 역사인식의 차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진정한 한·일 간의 우호친선 관계를 위해서는 고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양국민의 동일한 역사인식이 필수 조건이라 생각된다.

II. 임진왜란이 남긴 흔적

1. 나고야성터와 나고야성 박물관

사가현 가라츠시(唐津市)의 친제이초(鎭世町)에는 임진왜란의 본거지인 나고야성터가 남아 있다. 폐허가 된 성터 입구에는 사가현립나고야성박물관(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이 있다. 이 박물관은 “나고야성박물관은 분로크·케이초노에키(文祿·慶長役=임진·정유전란)를 침략전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성하는 취지에서 일본열도와 한반도간의 장구한 교류역사를 더듬어 향후 쌍방의 교류와 우호 증진의 거점으로 삼고자 1993년 10월30일 개관”했다고 한다.

박물관 입구에는 상설전〈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교류〉라는 안내판이 붙어있었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거의 한국의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 고려경(鏡), 고려수저, 고려시대의 청동병, 조선조 시대의 동으로 제작한 아미타여래상, 금동제 미륵반가사유상, 거북선 모형, 임진왜란 당시의 무기류 등을 포함 임진·정유전란 때의 유물들이 많은 편이다.

일행은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이어 나고야성터로 안내되었다. 나고야성은 임진왜란의 원흉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반도를 침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1591년 가을부터 그 이듬해인 1592년까지 전국의 다이묘(大名)들을 총동원하여 6

개월 만에 축성하였다. 가토 기요마사, 데라자와 히로타카(寺澤廣高) 등이 주동이 되고 구로타 요시타카(黒田孝高) 등이 공사를 담당하였다.

성의 규모는 동서 길이 약 330m, 둘레 약 1,500m, 총면적 17만 평방m 에 달하는 광대한 평성(平城)이었다. 언덕 정상에는 총 지휘소 제1성(本丸)인 5층7계의 천수각(天守閣)이 세워졌고, 제2성(二の丸), 제3성(三の丸)이 양 날개처럼 소 지휘소를 구성하고 있었다. 히데요시는 규슈에 있는 다이묘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다이묘가 축성에 나서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는 이 성을 본거지로 조선침략을 위해 군사 16만을 출병시키고 자신은 1년 동안이나 천수각에 앉아 주변의 166개소에 달하는 각 다이묘 진영을 지휘 통솔하였다.

나고야성의 규모, 내부구조 등을 자세히 알게 된 것은 1968년 가노 미츠노부(狩野光信)가 당시의 성을 그린 히젠나고야성도병풍(肥前名護屋城圖屏風)이 발견됨으로써 성의 옛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성은 히데요시가 죽고 7년간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에도시대(江戸)가 열리자 히데요시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성 전체를 허물었다고 한다.

일행은 제1성인 혼마루(本丸)의 5층짜리 천수각이 있었던 곳으로 안내되었다. 그 옛적 기세등등하게 호령치던 히데요시의 지휘소였던 이 자리에는 높이 10m의 석비가 세워져 있다. 한자로 ‘나고야성지(名護屋城址)’라고 새겨진 이 석비는 당시의 위세를 나타내는 듯 우람하게 방문객을 압도한다. 이 지점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로 앞에 이키섬과 멀리에는 대마도가 한눈에 들어온다. 물론 대마도 너머에는 부산이다. 그러므로 히데요시가 이곳에 성을 쌓고 조선 침략의 본거지로 삼은 뜻을 쉽사리 헤아릴 수 있다.

2. 아리타(有田)의 도야마신사(陶山神社)

규슈의 사가현에는 도자기의 고장인 아리타(有田) 마을이 있다. 이마리(伊万里)를 지나면 아리타에 들어선다.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지만 도로변에는 도자기와 관련 되는 간판들이 군데군데 나붙어 있다.

이 마을에는 도야마신사가 있다. 이 신사의 도리이는 백자(白磁)로 만들어졌다. 경내에도 도야마(陶山)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자기로 빚은 대형 고마이누(狛犬)와 물독(大水瓶) 등 백자 조형물로 가득하다. 이 신사의 주신(主神)은 오진텐노(應神天皇)이며, 상전신(相殿神)은 임진왜란 때 출전한 사가의 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와 이삼평이다.

이삼평은 충남 공주 출신 도공이었다. 일본으로 연행된 후, 그는 처음 가라츠의

해안 다구(多久)에서 질그릇을 굽다가 1616년 이곳 아리타 이즈미야마(泉山)에서 질 좋은 백자 원료의 광맥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원료를 사용하여 조선식 등요 노보리가마(登窯)를 설치하고 조선자기를 구어 성공함으로써 일약 일본전국에서 아리타야키(有田燒)라는 브랜드가 급부상하게 되었다. 아리타의 영광을 이룩한 이삼평은 이 지방에서 숭앙받는 도자기의 원조로 신격화되어 도조신(陶祖神)으로 이 신사에 뒤희게 된 것이다. 오늘 날까지 아리타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아리타 마츠리(有田祭り)’를 지낸다.

당시 일본사회에서 도자기 수요를 선도한 다도(茶道)와 예능다도였다. 다이묘, 호상들뿐 아니라 초닌(町人)들 사이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차완을 허리에 매달고 다닐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다. 이런 시점에서 임진왜란 때 출병한 왜장들은 제각기 조선도공을 잡아오기에 혈안이 된 것이다. 때문에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

이삼평이 주도하는 도자기생산은 당시 히젠 나베시마번(肥前鍋島藩)의 중요산업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급기야 늘어나는 일본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생산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는데, 마침 운 좋게도 1659년부터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대량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발전하여 이삼평의 작품은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유럽 등 외국에서까지 대호평을 받게 되었다.

한편 아리타 인근에서도 1640년 경 일본인으로 귀화한 도공 사카이카키에몬(酒井栞右衛門)이 적색무늬자기(赤繪磁器)를 개발함으로써 이 두 제품이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이마리야키(伊万里燒)라는 상표가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아리타야키와 사가현 서부로부터 나가사키현(長崎縣) 주변의 가라츠야키 등을 모아서 외국으로 수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항구가 이마리였기 때문에 이마리야키 라는 브랜드가 생겨 특히 유럽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의 도자기 수요는 주로 각국왕실과 귀족계층에서 중국 도자기를 경쟁적으로 소장하는 풍조때문에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유럽 전역의 여러 왕실이나 상류층에서 중국도자기를 구입하려는 열풍이 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동서양의 해상무역을 주도하던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등이 본격적으로 중국도자기의 대량구입에 나섰다. 한동안 도자기 무역이 호황을 누린 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중국의 전통도자기산업은 쇠퇴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 상인들이 눈을 돌려 찾은 도자기 생산지가 곧 일본이었다. 이런 연유로 이삼평은 도조신으로 숭앙 받게 되었고, 만년에 가서는 주변의 중용으로 가나가에 산페이에(金ヶ江三兵衛)라는 일본 이름을 얻어 귀화하게 되었다.

도야마신사의 뒤편에 있는 아리타산은 도야마공원(陶山公園)으로 조성되어 있다.

산 정상에는 ‘도조 이삼평비(陶祖李參平碑)’라고 써진 큰 비석이 서 있다. 이 비석은 1917년 도조송덕회(陶祖頌德會)가 건립하였다. 이삼평이 일본으로 끌려와서 당한 고초는 눈물겨운 사실이지만, 한편 일본인들이 도조신으로 섬기게 된 것을 볼 때 오히려 고국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못할 광영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구마모토성(熊本城)과 가토기요마사(加藤清正)

구마모토성은 오사카성(大坂城), 히메지성(姫路城)과 더불어 일본 3대 명성(三大名城)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이 성은 임진왜란 때 제2군으로 함경도까지 침입했던 왜장 가토 기요마사가 다이묘로 상주했던 아성이다. 기요마사가 임진·정유전란이 끝나고 귀국한 연후 1601년부터 착공하여 7년간의 공사로 완성한 성이다.

1587년 히데요시가 규슈를 정복함에 따라 새 영주로 그의 충복인 기요마사를 1588년 이곳으로 보내어 히고반코쿠(肥後半國) 25만 석을 봉하고 구마모토성에 입주케 하였다. 기요마사는 임진왜란 때 제2군을 이끌고 조선에 출정하여 괴력의 장군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모두가 두려워했다. 그는 1592년 7월 조선왕자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을 회령에서 인질로 잡았으며, 러시아영토인 오란카까지 진격했다. 조선 침략 때 편검창(片鎌槍)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일화가 일본사회에서 전해지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과의 정상회담 도중, 여담으로 이런 대화가 오갔다는 일화가 있다. “아직도 당신 나라에는 호랑이가 있느냐?” “없다” “왜 없느냐?”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가 다 잡아갔기 때문이다”.

히데요시 사망 이후 기요마사는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에서 이에야스 편인 동군에 속하여 서군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高橋元就)의 영토를 합쳐 히고잇코쿠(肥後一國) 52만 석의 다이묘가 된다. 그러나 기요마사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타다히로(忠廣) 때 개역(改易)으로 대가 끊어지고 대신 호소가와 타다토시(細川忠利)가 이 성에 들어서서 12대 240년간 상속되어 왔으나 명치유신 때 폐번되어 성주는 없고 성만 남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7년 구마모토시는 축성 400주년을 맞아하여 붕괴 소멸된 내부 건물의 일부분을 복원, 정비 공사를 4년간 진행하여 2008년 4월20일 완공했다. 복원 공사는 혼마루고덴(本丸御殿)의 오히로마(大廣間)이다. 혼마루고덴은 성주의 거실, 대웅집실, 주방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토 기요마사가 혼마루고덴에 호화로운 별실 ‘쇼쿤노마(招君の間)’를 마련하였는데, 이방은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秀頼)가 이에야스의 박해를 피하도록 그를 빼돌려 구마모토성으로 숨기려고 마련했다는 설

이 있다.

조선에 출병했던 왜군이 정유재란 이후 서생포왜성(西生浦倭城)에서 철수할 때, 가토 기요마사는 축성에 동원했던 조선백성들을 일본으로 강제 연행하였으며 이들은 구마모토성(城)을 짓는데 부역하였다. 축성 총감독에는 임진왜란 때 인질이 된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의 시종이었던 김환(金宦)이 맡았다고 한다. 김환은 기요마사 사망 때 순사(殉死)하였으나, 축성에 부역한 피로인들의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구마모토 시내 울산마치(蔚山町)라는 지구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이 서생(西生=일본어발음: 니시오)이라고 한다. 이들 서생성씨들은 2000년에 뿌리를 찾아 울산을 방문한 적이 있다.

4. 우토성(宇土城)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고니시 유키나가는 158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주(紀州)정벌 때 부하로서 활약하여 얼마 안 되어 쇼즈시마(小豆島), 시와쿠제도(鹽飽諸島), 무로츠(室津)의 다이묘가 되었다. 1587년 규슈정벌 때 참전하여, 이른바 바테렌 추방령에도 다른 기리시탄처럼 처벌을 면했으나, 좌천되어 히고남번(肥後南藩)으로 이봉(移封)되어 우토성(宇土城)의 영주가 되었다.

그러나 유키나가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에 출병하여 우토성을 장기간 비웠고, 히데요시의 가신 노릇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전란이 끝난 뒤, 고니시 유키나가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반대하는 서군에 가담함으로써 전투에서 패한 서군 장수들과 함께 교토에서 처형당했다. 이 전투기간 중 히고(肥後)에 남아 동군 편에 섰던 기요마사(清正)는 고니시령을 침공하여 우토성을 포위하고 약 1개월간의 농성 전투로 우토성을 점령하였다. 따라서 1600년 이후 고니시의 영토는 기요마사의 소유가 되었다. 또한 성을 지키던 유키나가의 부하장수들은 처형되고, 가신들의 대부분은 기요마사의 가신으로 끌려갔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는 임진왜란 때의 왜장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의 제1군 선봉장으로 대마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함께 부산포에 상륙하여 동래성을 함락하고 20여 일 만에 서울을 점령, 그 기세를 몰아 평양성까지 침공한 장수다. 그는 일찍 가톨릭 세례를 받은 이른바 기리시탄의 한사람으로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아우구스티누스)였다.

유키나가는 아마쿠사(天草)의 5인슈(五人衆)가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여 히데요시의 신임을 받아 임진·정유전란의 주역으로서 히데요시의 사망까지 충성을 바쳤다. 한편 유키나가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참패한 서군의 장수로서 참수당

했다. 이와 더불어 기구한 운명의 피로인 ‘오다이 줄리아’ 이야기도 일행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임진왜란의 승리는 어느 쪽인가?

이번 역사탐방 코스 중에 임진왜란의 유적을 둘러본 것은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차원에서 임진왜란 때 왜군은 과연 어떻게 침략했을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오늘날 한·일 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임진왜란을 두고 “일본 측의 승리다”라고 하는 주장과, “조선 측의 승리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두고 일본 측은 ‘희대의 영웅’이라 하고, 한국 측은 ‘침략자’라고 한다. 일본학계에서도 히데요시는 중국대륙을 넘어 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과대망상으로 조선을 침공하였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 왜군은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에 의해 패퇴했다고 하는 설도 만만치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측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를 그 유적 탐방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임진왜란을 한반도에 앉아서 바라보지 말고 일본측 시각에서, 더 나아가 세계사적 시각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일행의 임진왜란 유적 탐방이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교**

카이로 회담의 역사적 현장에 한국의 이정표를 세우다

김영소 (주 이집트 대사)



근자에 전 세계를 뒤흔든 현상 중 하나인 ‘아랍의 봄’ 혁명이 발발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014년 봄, 이 곳 이집트는 추운 겨울과도 같았던 역사의 한 챕터를 지나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관통하며 어딘지 모르게 자꾸 엄습해오는 불안한 느낌을 쉽사리 지울 수가 없다. 혹 이렇다 수많은 민초들이 보다 나은 미래라는 미명하에 쓰러져 간, 고통과 혼란의 지난 3년에 대한 결과가 과거 회귀의 도로아미타불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혁명을 포함한 몇 번의 정변들로 인해 누구든지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려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SNS와 인터넷 보급 등 정보망들도 무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지금은 비록 이집트가 매우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정변 등으로 지난 30년 동안 독재자로 집권했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축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우리 대한민국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무바라크는 공군 사령관 재직중이던 지난 1973년 이스라엘과의 전쟁 당시, 북한이 소규모의 공군력을 지원해주었던 사실을 잊지 못해 김일성이 사망하던 1994년까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 직후인 1995년 4월13일에야 국교를 맺어 내년 2015년에 겨우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이한다.

이집트는 당시 아프리카의 51개국 중 우리와 마지막으로 수교한 51번째 국가로서, 세계를 양분하던 냉전시대가 종식된 후 서둘러 수교를 맺은 동구권의 국가들보다 늦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11년의 이집트 시민 혁명이 가져온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은, 한반도의 정세와도 많은 연관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다(2014년 현재 한국외교협회 정태익 회장이 1995년 당시 주 카이로 총영사로 수교 교섭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1995년 5월 초대 주 이집트 대사가 됨).

물론 이러한 사실에 앞서 대한민국과 이집트와의 관계에 있어 보다 항구적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1943년에 이루어진 카이로 회담과 그 결과물이었던 카이로 선언이 그것이다. 피라미드와 나일 강이 영겁의 세월 속에서 역사를 지켜봐 온 이집트에서 카이로 회담이 열리고 카이로 선언이 채택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카이로 선언은 한국과 이집트를 이어 주는 이정표인 것이다.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은 지난 2013년 11월27일, 이 중요한 선언의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집트의 상징인 피라미드 인근에 자리한 역사적 현장인 Mena House Hotel에서 기념행사 및 학술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행사에는 이집트 외교부 아·태 차관보, 카이로 주지사, 피라미드 인근인 파옴 주지사, 이집트외교협회회장, 한·이집트 우호친선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대한민국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평통자문회의, 한·아랍소사이 어티 등 우리나라 관계 기관 인사들과 많은 언론, 이집트 한인동포들이 참석하였고, 이집트 Nabil Fahmy 외교부 장관,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사무총장 등은 카이로 선언 70주년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Fahmy extends congratulations to Korean people

It is my pleasure to extend to the friendly people of Korea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the issuance of the Cairo Declaration on 27, November, 1943, which paved the way for the Korean people to gain independence and freedom. It was also supportive for that great people in their struggle for liberation, which they achieved in 1945.

This anniversary shall remain a landmark in the history of extended rela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I seiz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to the friendly people of Korea sincere appreciation and best wishes for a future full of prosperity and progress.

▲ 이집트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집트 외교장관 축하메시지

한편, 2014년 1월7일 뒤늦게 중국 측도 이집트·중국 정책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이집트를 방문한 Zhang Ming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Mena House Hotel의 역

사적 현장에서 카이로 선언 7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카이로 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에게 있어 카이로 선언이 주는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양국 모두에게 카이로 선언 자체는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2013년 11월27일 기념식수에 이어 2014년 초 한·이집트 관계의 상징적인 이정표로, 카이로 회담 당시 연합국의 정상들이 산책을 했던 Mena Houes Hotel의 정원 피라미드가 보이는 위치에 '카이로 선언 기념비'를 설치하였다. 양국은 이 기념비를 통해 이집트인들을 포함,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이 결의된 역사적 선언이 바로 이곳 카이로에서 이루어졌음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가 단순히 고대의 역사를 통한 가치뿐 아니라 현대사의 중요한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집트는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며 친북일변도 정책을 고수하였고 지난 1995년 4월13일에서야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의 결과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일성 사후,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경제 분야는 물론 문화와 학술, 정치, 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 카이로 선언 기념비
(김영소 대사, 한인회장, 평통지회장 등)

카이로 선언 기념비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불행히도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은 통일만이 카이로 선언이 의미했던 한반도의 자유와 독립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각성 하에 굳건한 의지로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많은 혁명과 정변을 겪으며,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있는 지금 이집트에, 우리 역사에서 긴 겨울과도 같았던 일본의 식민통치를 벗어나 봄을 가져다 준 카이로 선언과 그 70주년 행사가 같은 의미로 다가가, 밝은 미래의 새싹이 움트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 **외교**

一寸光陰

박창남 (전 주가나 대사)



갑오년 새해, 말의 해가 왔다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정월, 2월이 다가고 3월도 중순이니 새삼 光陰如流,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

세월이나 시간을 말하다 보면 문득 주자(朱子)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一寸光陰 不可輕” 구절이 떠오른다. “짧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나 세월을 왜一寸光陰이라 했을까?

一寸이라 함은 一尺의 10분의 1, 환언하면 한자의 10分之1인 한 치라는 짧은 길이이며, 光陰은 빛과 그림자라는 뜻인데, 왜一寸光陰이 짧은 시간이 된 것인지 생각해본다. 짧은 시간 또는 매우 짧은 시간은 순간 또는 찰나와 같은 말도 있는데 왜一寸光陰이라 했는지 궁금해진다.

빛과 그림자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一秒에 약 30만km(정확하게는 299,792 km) 속도의 빛이一寸을 스치는 시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야말로 아주 짧은 시간이 된다. 이것은 현대의 이야기이고 옛날에는 시간을 헤아리는 방법이 햇빛과 그 그림자를 이용한 해시계가 있었으니, 그 그림자의 이동길이가一寸이었던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다.

하기사 극히 짧은 시간은 지난번 동계올림픽의 빙속 경기를 보면 100分之1秒까지 측정하여 금메달이니, 은메달이니를 판정하고 있으니 시간과 거리관계가 딱이나 세밀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러나一寸의 실제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러 사전이나 책자를 들

처보아도 다만 척(尺)의 10分之1인 치 라고 했지 실제 미터법으로 얼마나 되는 길 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길이나 무게나 부피를 측정하는 도량형기는 시대에 따라, 지방에 따라, 나라에 따라 또한 대상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一寸의 길이도 몇 cm 몇 mm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척(尺)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1尺을 30cm라고 가정하면 一寸은 3cm 정도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척관법에 익숙한 세대는 아마 아직도 99.99㎡ 보다는 33坪이라는 것이 더 실감 날지 모른다. 또 무게 같은 것도 현재는 미터법으로 몇 kg니, 몇 Ton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Ton의 경우는 여러 가지 Ton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화물의 중량은 Metric Ton(블란서톤)인 1000kg로 통일되어 Long Ton(영국톤)이나 Short Ton(미국톤)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물의 용적 단위인 Measurement Ton은 화물의 종류(예컨대 곡물, 목재, 석재, 석탄, 포도주 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게 적용되며, 선박의 크기나 적재능력 단위의 Ton은 총톤(Gross Ton), 순톤(Net Ton), 용적톤(Volume Ton), 중량톤(Deadweight Ton), 군함의 경우는 배수톤(Displaced Ton)이라 하여 여러 가지 Ton이 있으며, 또 화물의 적재톤(Shipping Ton)도 있으니 Ton의 종류는 그야말로 꽤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설하고 필자는 아주 짧은 시간, 말하자면 순간의 실수로 넘어져서 무릎 뼈를 다쳐 수술을 받고 거의 50일간 병원 신세를 지면서 ‘시간이 약’이라는 뼈의 융합을 기다리면서 누워 지내게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만큼 훌륭하고 잘 되어 있다고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체험해보니 새로 알게 되고 또 느낀 점도 많았다.

A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종합병원에서는 수술환자가 많기 때문에 B급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B급 병원에서 2주일 정도 있으니 자기들은 이제 할 일이 없으니, C급 요양병원으로 가라고 한다. 부득이 C급 요양 병원으로 가서 3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게 되었다. 다시 A급 병원으로 가서 수술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병원이 분업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으니,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는 속담과 같이 실제 입원해보니 의료제도나 의료보험제도가 어떠한지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

또 근 3개월 동안이나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보니, 서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이 직립인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地球歷史나 人類學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가 점점 먼 과거로 소급

하면서 약 500만 년 전의 人類化石, 300만 년 전의 原人化石, 약 100만 년 전의 原人化石 등이 발견되고는 있으나 이들 모두가 직립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직립해서 두 다리로 걸었다는 최초의 인류는 1924년 Africa의 타운구스(Taungs)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Australopithecus)류라 하며 지금부터 100만 년 내지 200만 년 전에 산 것으로 추정되며, 猿人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들의 뇌의 용적(약 450 내지 600 CC정도)으로 봐서 두 다리로 완전하게 걷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리할 것이며, 그것을 보충하는 도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약 50만 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피테칸드로푸스 이레크투스(Pithecanthropus Erectus) 즉 直立猿人의 化石이 1891년 자바섬의 트리닐(Trinil)에서 네덜란드의 해부학자 유진 드보아(Eugene Dubois)에 의해 발견되고, 또 같은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화석이 1923년 북경 근교의 周口店에서 시난트로푸스 페किन엔시스(Sinanthropus Pekinensis), 이른바 北京原人의 化石이 스타프스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인류가 이때부터 완전히 직립하여 활동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렇게 보면 일류가 직립하여 활동한 역사는 비록 현대인류인 크로마뇽인(Cro-Magnon Man)과는 다르지만 상상외로 오래된 셈이다.

여하간 조금씩 보행연습을 하면서 직립해서 걸을 수 있고 움직이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산행을 좋아하는 필자로서는 잘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낸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으나 3~4개월 편히 휴식하라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이것 저것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삶을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흔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첫째, 넘어지지 말아라, 둘째, 감기들지 말아라, 셋째, 정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건강조심을 다짐한다. 그러나 넘어진다는 것은 10分之1秒도 안 되는 순간의 실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흔히들 일어난다.

순간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일어나는 사고가 몇 달, 몇 년, 때로는 한 평생의 삶을 망칠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심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그야말로 一寸光陰도 헛되게 보내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외교**

쇼팽과 안익태 - 마요르카

이 원 영 (전 주 스페인 대사)



2002년 5월 하순, 나는 ‘안익태 추모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마요르카(Mallorca)에 갔다.

마요르카는 스페인령(領) 발레아레스 제도(Baleares Islands) 중 가장 큰 섬으로서 면적은 약 3,600km²(제주도의 약 2배), 인구는 100만쯤 된다. 마요르카는 빛나는 태양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연간 1,000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중해의 진주와 같은 섬이다.

발레아레스 제도는 스페인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많은 굴곡을 겪어왔다. 제2차 포에니전쟁(The Second Punic War, 218-201 BC)에서 로마(Cornelius Scipio)가 카르타고(Hannibal)에 승리하고 지중해를 제패하자 이 섬들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 후 8C 초부터 700년 이상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아랍인의 통치를 받기도 했다. 그래서 마요르카는 로마와 아랍의 흔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요르카는 모든 역사의 질곡(桎梏)을 잊은 채 은빛으로 빛나는 지중해의 물결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모습으로 있었다.

섬에 도착한 그날 오후 나는 안익태 선생의 미망인 딸라베라(Maria Dolores Talavera) 여사를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온화한 인상을 지닌 그녀는 80대 후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안익태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40여 년을 안익태 선생과 함께 살았던 바닷가 언덕위의 그 집에서 그를 가슴에 안고 홀로 살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안익태 선생이 작곡하기 수년 전, 런던 로얄필하모닉 오케스트라(London Royal

Philharmonic Orchestra)의 초청으로 런던에 갔던 일, 마요르카에서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에스트로 안은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이자 또 아버지였다고 회고하였다. 안익태 선생과 팔라베라 여사는 슬하에 딸만 셋을 두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아버지 쪽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팔라베라 여사와 멀리 서울에서 날아 온 안익태 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안익태 추모음악회’에 참석하였다. 음악회는 옛날 선생이 다녔던 교회당에서 열렸는데, 안익태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낡은 악기를 들고 나와, 안익태 선생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한국환상곡(Korea Fantasy)’ 중 애국가 합창이 나오는 제3부를 연주하였다.

이역만리 지중해의 한 섬, 조그마한 성당에서 백발이 희끗희끗한 노(老)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한국환상곡은 음악적인 관점을 떠나 연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웠다. 그 음악회는 비록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안익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바친, 더 없이 훌륭한 선물이었다.

안익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였다. 안익태 선생은 1906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승실중학에 입학한 소년 안익태는 음악을 가르쳤던 미국인 선교사 마우리(E.M. Mowry)로부터 첼로를 배웠으며, 그의 음악적 소질을 인정한 마우리의 도움으로 일본 동경음악학교에 유학할 수 있었고, 1930년 미국으로 건너가 신시네티 음악학원(Cincinnati Conservatory of Music), 커티스 음악원(Curtis Institute of Music)을 거쳐 템플대학교(Temple University) 음악대학원에서 공부하였다. 1936년 유럽에 연주여행을 간 안익태는 비엔나에서 바인가르트너(Felix Weingartner)로부터 지휘법을 배우기도 했다. 미국에 돌아와 템플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안익태는 1937년 유럽으로 이주,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유럽 음악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1939년 그는 슈트라우스를 대신해 헝가리 부다페스트국립교향악단을 지휘하였고, 1942년에는 베를린필하모닉(Berlin Philharmonic)을 지휘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베를린필 같은 세계 최고수준의 교향악단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슈트라우스의 후원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의 음악적 실력 역시 그만큼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오늘 날, 많은 한국인 음악가들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베를린필을 지휘한 사람은 아마 정명훈씨 정도뿐이 아닐까? 지금부터 70여 년 전 안익태 선생이 베를린필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안익태 선생이 스페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44년 바르셀로나교향악단 지휘

가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팔라베라 여사와 만나 서로 사귀게 되었고, 1946년 이들은 결혼하기에 이르렀다. 결혼 후 안익태 선생은 마요르카교향악단을 창단하여 상임지휘자가 되면서 그 섬에 정착하게 된다. 물론 그 후에도 안익태는 미국, 유럽, 중남미, 아시아(일본,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초청으로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였는데, 1965년 7월 작곡하기 불과 2달 전까지도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몸을 이끌고 런던 뉴필하모닉을 지휘했을 정도로 음악에 열정을 쏟아 부었던 사람이었다.

안익태 선생은 1955년 이승만 대통령 당시 귀국, 애국가 작곡자로서 국민적 환대를 받기도 했고, 1960년대 초에는 서울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광화문의 옛 시민회관에서 한국환상곡을 지휘하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러나 수년전, 1940년대 초 그가 유럽에서 친일활동을 한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생애에 오점이 남게 되었다. 나로서는 그러한 주장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 날 나는 안익태 보다 100여 년 전 그 섬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던 쇼팽(Frederic Chopin)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피아노의 시인’ 쇼팽은 1838년 그의 연인이었던 상드(Sand)와 마요르카에 와서 겨울을 보냈는데, 그때의 일화는 그곳에서 작곡한 그의 작품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음악 애호가들에 의해 이야기되고 있다. 쇼팽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랑을 받고 있어 새삼스레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가 마요르카에 오기까지의 경위를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쇼팽은 181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프랑스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바르샤바음악원을 졸업한 후 20세에 예술의 도시 파리(Paris)로 갔다. 그곳에서 곧 명성을 얻기 시작한 쇼팽은 베를리오즈, 리스트, 멘델스존, 하이네 등 당대의 저명한 예술가들과 친분관계를 맺게 되어 파리의 음악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되었다. 파리에 온 몇 년 뒤(1836년 경) 그는 당시 수많은 문인(文人), 예술가들과 염문을 뿌리며 사교계를 들끓게 했던 여류 소설가 조르쥬 상드(George Sand, 본명 Aurore Lucille Dupin)와 사랑에 빠졌다.

1838년, 두 연인은 폐결핵을 앓고 있던 쇼팽의 건강 회복을 위해 마요르카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상드의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그해 11월8일에 도착, 그 이듬해 2월11일까지 이 섬에서 지냈다.

그들은 이곳에 도착한지 며칠도 되지 않아 운 좋게 바닷가의 조용한 곳에 있는 별

장을 얻어 여장을 풀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2~3주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마요르카에 온지 일주일쯤 뒤 쇼팽은 피아니스트이며 작곡가였던 그의 친구 폰 타나(Julian Fontana)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요르카에 온 소감을 다음과 같이 썼다.

“마요르카의 하늘은 터키석처럼 곱고, 바다는 푸르고 멀리 보이는 산들은 에메랄드 같이 아름답다. 이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쇼팽과 상드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쇼팽이 결핵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요르카 사람들은 그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쇼팽은 집을 비워 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들은 마땅한 집을 구할 수 가 없어 팔마(Palma de Mallorca) 주재 프랑스 영사 플레리(Fleury)의 주선으로 발데모사(Valldemossa)의 산속에 있는 옛 수도원(Carthusian Monastery)으로 거처를 옮겨 그곳에서 겨울을 지냈다. ‘발데모사’는 마요르카 섬의 서쪽 바다 가까이 남북으로 흘러내리는 트라문타나(Tramuntana) 산맥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트라문타나 산맥은 험준하여, 이 산맥의 최고봉은 1,450m나 된다.

마요르카의 기후는 물론 지중해성 기후로써 겨울(11~12월)의 평균 최고 기온은 16~19℃ 정도로 온난하다. 그러나 트라문타나 산악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고 강우량도 많은 편이다. 특히, 1838년 겨울은 비가 많고 유난히 추웠다고 한다. 파리의 추위를 피해 지중해를 찾아온 쇼팽에게는 가혹한 겨울이었다.

쇼팽은 넓고 쓸쓸하고 음습한 옛 수도원(15세기에 이미 폐쇄되었음)에 두 달간 유폐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작곡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마요르카에 체재하는 동안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었다. 발라드(Ballad) 제2번(o.p 38), 폴로네이즈(Polonaise) 제3번, 마주르카(Mazurka) 27번(o.p 41~42), 스케르쑈(Scherzo) 제3번(o.p 39), 전주곡(Prelude) 24곡 중 대부분이 그곳에서 수정되거나 완성된 작품들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발라드 제2번은 슈만(Robert Schumann)에게 헌정된 것으로 유명하며, 전주곡 6번은 어느 비오는 날 상드가 팔마시(市)에 출타했다가 늦은 밤에 돌아왔을 때 쇼팽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 곡이 바로 ‘빗방울 전주곡(Raindrop Prelude)’이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작품이다.

지금부터 180여 년 전 쇼팽과 상드가 기거했던 수도원에는 그가 사용했던 피아노와 악보 등 유품들이 잘 전시되어 있었다. 수도원의 긴 복도 한 켠, 그가 머물렀

던 방 앞에는 “1838년 12월15일부터 1839년 2월11일까지 프레데릭 쇼팽과 조르주 상드가 이곳에 머물렀다”라는 동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가 있었던 방 앞, 조그만 뜰에 나가, 쇼팽이 바라다보았을 발데모사 계곡을 내다보았다. 그날은 5월 하순의 청명한 날이어서 계곡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기념품 매점에 들러 쇼팽이 마요르카에서 작곡한 작품들을 수록한 CD 음반을 한 장 샀다.

마요르카에 다녀온 지도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팔라베라 여사도 이미 수년 전 이 세상을 떠나 남편 곁으로 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중해의 그 섬에서 울려 퍼지던 ‘한국환상곡’이 귀에 들리는 듯하다. 또한 ‘빗방울 전주곡’을 들을 때마다 나는 마요르카의 쓸쓸했던 쇼팽을 생각한다. 이 전주곡은 연주시간이 2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곡인데, 곡의 분위기는 수도원의 무거운 정적(靜寂)처럼 음울함이 바탕에 깔려 있으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가운데 묘한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Vita brevis, ars longa, Hippocrates). **외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실 보물전을 보고

유 주 열 (전 주 나고야 총영사)



헝가리와의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금년 초 서울의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1830~1916)가 사용하던 왕관 갑옷 의상 등이 전시되고 있었다.

마침 그 무렵 스위스 다보스 회의에 참석 중이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금년이 일차 세계대전의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의 중·일(中日)관계가 일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영·독(英獨)관계에 비교하였다. 영토와 역사 문제의 갈등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00년 전의 잘못된 역사가 아시아에서 되풀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예감에 세계는 크게 술렁거렸다.

100년 전 첫 세계대전을 일으킨 합스부르크 황제의 체취가 묻어나는 유물의 전시회는 역사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본과 군사 대국화 하는 중국 사이에 끼여 있는 우리에게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프란츠 요제프 1세는 프리시아와의 전쟁(普墮戰爭)에서 잃은 땅을 벌충이라도 하듯이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물러난 발칸 반도에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특히 보스니아 병합은 범 게르만 민족의 남하로 이어져 그 지역의 범 슬라브계 민족주의자들을 자극하였다.

황위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부인 조피는 군사훈련 참관을 위해 불안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 중 세르비아 출신의 청년에 의해 암살된다. 1914년 6월이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배후 세력이라고 생각한 세르비아 왕국에 선전포고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세르비아 왕국의 동맹국인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세계대전의 막이 올랐다.

당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84세의 고령으로 66년간 재위한 장수(長壽) 군주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18세(1848년) 때 정신적 장애자인 백부 페르디난트 1세가 퇴위함으로써 아버지를 대신하여 황위를 이어 받았다. 유럽 왕실의 최고의 신부감이었던 엘리자베트의 미모에 반해 결혼하여 아들 루돌프를 얻었으나 멕시코 황제였던 동생 막시밀리안은 혁명군에 처형되어 가족의 슬픔이 컸다.

외아들 루돌프 황태자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결국 17세의 여백작(baroness) 칭호를 가진 어린 소녀와 사랑에 빠져 정사(情死)해 버린 사건이 발생한다. 1889년 1월 비엔나에서 멀지 않은 왕가의 사냥터 마이어링(Mayerling)에서였다. 루돌프 황태자 나이는 30세였다.

학자들은 세계대전의 원인(遠因)으로 루돌프 황태자의 정사를 지적하기도 한다. 황태자가 죽음으로써 황위 계승권은 황제의 동생 카르 루드비히 대공에게 돌아가나 건강이 좋지 않은 루드비히는 자신의 아들 페르디난트를 위해 계승권을 포기한다. 페르디난트는 추정 상속자(heir presumptive to throne)로 지명된다. 추정상속자는 장래 자기보다 상위 계승권을 가지는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황태자(crown prince)와 격이 다르다.

아들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엘리자베트는 상복인 검은 드레스만 입었다. 수년 후인 1898년 9월 엘리자베트는 제네바에서 무정부주의자가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는다. 사랑하는 부인을 잃은 황제의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가는 허리와 빼어난 미모에 ‘시씨’라는 애칭으로 오스트리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온 비운(悲運)의 엘리자베트 황후에 대한 이야기는 오페라 뮤지컬 등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2년 2월 뮤지컬 ‘엘리자베트’로 황후의 일대기가 공연되어 뮤지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페르디난트는 1893년 식견을 넓히기 위해 1년에 걸쳐 세계 일주를 하면서 홍콩, 일본 등 아시아도 방문하였다. 엘리자베트 황후가 죽은 후 2년 뒤 1900년 페르디난트는 황실의 시녀 조피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다. 오래 전에 페르디난트는 이사벨라 대공비의 시녀인 조피와 사랑에 빠진다. 조피는 페르디난트와 결혼할 수 없는 신분인 보헤미안 백작의 딸로서 친절하고 다감한 성격이었다. 페르디난트가 병으로 요양 중에도 편지를 계속 보내는 등 두 사람은 비밀리 사랑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페르디난트가 이사벨라 대공비 집에서 손목시계를 흘리고 돌아 왔다. 당

시에 귀족들은 사랑하는 여자의 초상화를 손목시계 뚜껑 안쪽에 새겨 두는 게 유행이었다. 이사벨라는 페르디난트가 장녀 마리아를 뺨질나게 찾아 왔기에 페르디난트의 시계 뚜껑에 자신의 딸 사진이 새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몰래 열어 본 뚜껑에는 뜻밖에 자신의 시녀 조피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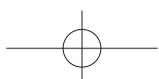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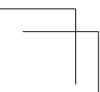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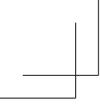
황제는 페르디난트가 조피와 결혼하는 것은 낮은 신분과 결혼하는 귀천상혼(貴賤相婚, morganatic)이 되므로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황제라도 페르디난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황제는 조피가 황실의 특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결혼은 인정하나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황위계승과 황실의 귀천 결혼으로 합스부르크 왕가는 권위를 잃고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우울증은 심해졌다. 이러한 황실의 불안정이 암살의 틈을 주고 요제프 황제의 세르비아 선전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실에 걸려 있는 네이비블루의 대원수복에 붉은 망투를 걸친 근엄한 표정의 프란츠 요제프의 대형 초상화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100년 전 황제의 선택이 달랐더라면 세계대전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날 배타적 민족주의에 매몰된 중·일(中日)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100년 세월의 무게로 가슴이 답답하다. **외교**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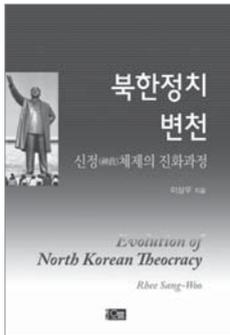
- 북한정치 변천 -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 (이상우 저)
- 신(新)조선책략 (최영진 저)



북한정치 변천

-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 -

(이상우 저, 도서출판 오름, 459쪽)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통 국제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림대 총장 등을 역임한 이상우 전 서강대 교수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분석한 역저를 펴냈다. 이 교수는 과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외교부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그의 분석과 논리는 우리나라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수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북한정치 변천: 신정(神政)체제의 진화과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교수의 새로운 저서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 교수의 분석대상인 북한체제는 최근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제시된 것과 맞물려 올바른 통일을 위해 우리가 아무리 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적 적절성과 관련하여 이 책의 출간 목적과 의미는 분명히 드러난다. 저자인 이 교수에 따르면, 사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한반도 통일의 대상이자 파트너가 되어야 할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분단 이후에 태어난 우리 국민 대다수의 북한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이 교수는 북한이 ‘신정체제 국가(theocracy)’라는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1948년 당시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구 소련군이 자국의 정치체제를 본으로 삼아 만들어준 국가였다. 그러나 이 나라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초대 수상으로 취임했던 김일성과 그 자손들이 세습하여 통치하는 왕조국가로 변했다. 통치자가 혈통에 따라 승계하는 북한은 이제 왕조 시대의 절대 군주제와 흡사하다. 지도자를 신격화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과거 역사상에서 나타났던

제정일치 시대의 신정체제(神政體制)와 다름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신정 체제인 북한에 대해 어느 한 시점에서 북한정치의 한 단면을 보고 북한정치를 이해하기 보다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정권수립 이후 현재의 김정은 체제에 이르기까지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에 초점을 두어 북한을 분석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이 책은 모두 4부에 걸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북한정치 60년을 개관하는 서장은 별도). 제1부는 ‘북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이라는 제목 하에 전형적 점령공산국가의 탄생, 김일성 독재체제 구축,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치체제 특성 등 4개장이 편성되어 북한체제의 구축과 세습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제2부는 ‘북한 통치체제와 이념’의 제목으로 통치체제의 변천, 조선로동당, 정부조직, 통치이념의 변천 등 4개장이 집필되어 북한 통치체제의 특징과 통치이념에 대한 분석이 담겨져 있다. 한편 제3부는 ‘기능 영역별 체제와 정책’의 제목 하에 경제체제와 정책변화, 외교체제와 정책, 군사체제와 정책, 통일관련 기구 및 정책 등 4개장으로 기능 영역별로 전개되는 북한 전체주의 실상을 서술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4부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전망’ 제목 하에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김정은 정권의 체제개혁 노력과 한계 등 2개장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체제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 구성 이외에도 이 책은 북한체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완문건으로 조선로동당 조직, 정부조직,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등 유익한 자료를 80여 쪽에 걸쳐 수록하고 있다.

책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철저한 1인 지배의 신정적 전체주의’로 요약되는 북한체제에 대한 이 교수의 방대한 분석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결론에 해당되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이다. 김정일 사망 이후 그 아들인 김정은이 나와 제3대 세습왕조를 구축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향후 남북한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 교수의 분석은 매우 명료하다. 이 교수는 우선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종교화한 이념, 체제가 특권을 보장한 지배계층의 충성심, 정교한 주민 통제체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 등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은 개혁 없이도 당분간 현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성택 사태와 같이 권력층 내부에서의 분열과 대립 투쟁이 생긴다거나 외부환경이 변화하여 개혁을 강요하게 되면 그 안정성은 흔들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325쪽). 한편 체제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교수는 북한 체제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 지도자의 자세, 북한체제 내부의 정세, 그리고 외부 정세 등 모두를 감안해 볼 때 북한은 결코 현존체제를 개혁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부분적인 정책조정과 경제영역에서의 부분적 시장경제체제 수용을 통하여 장기안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리라 예상된다는 것이다(361쪽).

최근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통일문제와 통일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간된 이 교수의 저작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닌 역사 흐름 속에서 북한체제의 참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훌륭한 준거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서항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연구실장) **외교**

신(新)조선책략

(최영진 저, 김영사, 170쪽)



나라 안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른바 ‘난국(難局)’의 시기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처방책과 책략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130여 년 전인 1880년 일본으로 파견된 수신사 김홍집은 일본주재 청국 외교관 황춘센(黃遵憲)으로부터 ‘조선책략’이라는 소책자를 받아 들었는데 이 책자는 이른바 ‘책략’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 책자에서 황춘센은 당시 조선의 최대 위협국인 아라사(我羅斯, 즉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대비책으로 친중(親中)·결일(結日)·연미(聯美)를 제안했다. 즉, 중국을 예전보다 더욱 힘써 섬기고, 일본과의 결속을 공고히 하며, 미국과 국교를 맺고 연대하여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조선책략’은 당시 오로지 중국에만 매달리고 있던 조선 내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몇 쪽 되지 않은 이 조선책략은 1년 후 조선에 반입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당시 보수적인 유교학자들은 이 책자가 제시한 대비책이 우리의 안보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른바 ‘영남만인소’ 사건으로 대표되는 거센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조선책략’은 당시 오로지 중국에만 매달리고 있던 조선 내에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혁명적인 생각이었다. 몇 쪽 되지 않은 이 조선책략은 1년 후 조선에 반입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게 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당시 보수적인 유교학자들은 이 책자가 제시한 대비책이 우리의 안보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른바 ‘영남만인소’ 사건으로 대표되는 거센 반대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물론 황춘센이 펴낸 ‘조선책략’은 우리나라보다는 청나라의 이익과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이 취해야 할 바를 제안한 외교 전략이다. 따라서 당시 청나라에 대한 최대의 안보위협인 러시아를 과대평가하고, 떠오르는 일본의 야욕은 과소평가한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춘센은 동아시아가 중국 중심에서 보다 넓은 세계로 지평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알아차렸다. 약육강식의 서양식

패러다임이 급격히 동북아에 밀려들어오는 것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다. 우리는 그 때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을 간과하였다. 바로 이 점에서 비록 지나간 사건이지만 황춘센의 '조선책략'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춘센의 '조선책략'이 소개된 지 130여 년이 지난 최근 한 은퇴 외교관에 의해 「新조선책략」이 발간되었다. 저자는 외교부에서 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외교차관, 주 유엔 및 주 미국 대사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한 최영진 대사이다. 최 대사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오리지널 '조선책략'이 쓰여진 19세기 말 못지않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아래 40여 년간 국제정치 현장을 누빈 외교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남기기 위해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최 대사의 평가에 따르면, 21세기 초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변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수천 년을 이어온 약육강식의 전쟁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무역 패러다임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용하지만 그러나 19세기 말의 그것 못지않게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최대사의 평가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책략' — 즉, 외교방향은 무엇인가? 최 대사가 제시하는 전략과 방안이 바로 「新조선책략」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130여 년 전 소개되었던 오리지널 '조선책략'처럼 소책자 형식의 170쪽 분량으로 발간된 최 대사의 「新조선책략」 목차를 보면 최 대사가 제시하려고 하는 외교방향과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전쟁을 넘어 무역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 '북한, 개방과 소멸사이에서 균형 잡기', '한미동맹: 미국과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중협력: 한중관계의 변화하는 맥락들', '한일교류: 우경화의 일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 장(章)의 제목에서 나타나듯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미·대중·대일 외교의 저변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각기 상황에 맞는 외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사의 책략은 이 책의 마지막 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아 우리 외교의 진로는 전쟁에서 무역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 설정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쟁 패러다임과 피해의식에 입각한 19세기식 외교를 탈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반도 외교 속에 갇혀 있게 된다. 또는 그 반대로 피해의식을 확실하게 떨쳐버리고 무역 패러다임에 입각한 21세기 외교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우리는 미래의 세계를 설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분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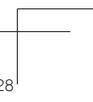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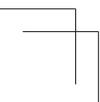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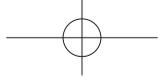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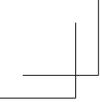
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자세로 적응해야 한다. 변화와 적응은 생존이다(170쪽).

최 대사가 제시하는 21세기 우리가 취해야 할 新조선책략은 한마디로 대북교류와 억지정책의 동시 추진, 한·미동맹, 한·중협력, 한·일교류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략을 일관하는 원칙과 비전은 바로 무역 패러다임이다. (이서항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연구실장) **외교**



자료

-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 외교부장관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문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문

(드레스덴 공대, 3월 28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존경하는 한스 뮐러 슈타인하겐 총장님과 드메지에르 전 총리님,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의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

독일의 명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드레스덴 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곳 드레스덴은 구 동독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지역으로
분단극복과 통합의 상징입니다.
독일 민족은 이곳 드레스덴을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하고,
풍요로움이 넘쳐 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드레스덴은 용기와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 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이 다리를 잇고,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는
드레스덴 공대의 교육이념이
드레스덴 공대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구현되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고,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저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과 결합하여
경제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것이 창조경제입니다.

또한 드레스덴市과 같이 학교, 산업,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창조경제가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드레스덴市와 대학의 발전은
창조경제를 향한 우리의 노력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독일은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50년 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87불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고 해도 동북아의 작은 나라,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어느 나라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기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방문하셨던 한국의 대통령은 2차 대전의 폐허를 극복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독일의 기적을 한국에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고, 독일의 철강산업을 보면서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를 놓고, 철강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가서 고속도로와 제철소를 만들려고 하자, “다닐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건설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반대에 부딪쳤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제철소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된 고속도로는 이후 한국 경제성장에 탄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와 유통의 숨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철강과 자동차 산업은 지금 세계 5, 6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년 전 차관조차 받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제 세계 8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독일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독일의 신뢰와 믿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청년 여러분!
독일인과 한국인은 '위기에 강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 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땅에서 두 나라의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국가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은 뱃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한국은 아직 통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라인강의 기적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듯이,
독일 통일도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독일인들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토록 높아 보였던 베를린 장벽도
동서독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통일을 향한 동서독 주민들의 오랜 노력은

마침내 독일 통일이라는 큰 꿈을 이루게 했고,
나아가 유럽의 미래마저 바꾸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 동독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통일독일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에도 통일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통일 이후에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지역 역시 급속히 발전할 것이고,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한국은
국제평화유지와 핵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의 허브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외신보도를 통해 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제난 속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추위 속에서 배고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자유와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 가족과 헤어진 후 아직 생사도 모른 채,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남북 이산가족들 역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습니다.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불신의 장벽'도 쌓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 오랜 기간 살아온
남북한 주민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사이에 놓인
'사회 문화적 장벽'도 높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단절과 고립의 장벽'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하나의 영토, 하나의 체제를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도 통일 이전 동서독 주민 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기에
통일 직후 후유증을 빠르게 극복하고
현재와 같이 통합된 독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 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당연히 함께 살아야 할 가족 간의 만남조차 외면하면서
민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70년입니다.
평생 아들 딸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족들의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작년에만 한국에서 3천 8백여 명의 이산가족이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측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거 동서독은 이산가족 등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방문을 허용했고, 꾸준한 교류를 시행했습니다.

남북한도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등으로
가족들의 한을 풀고 동시에 남북간에 신뢰를 쌓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관과도 필요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UN과 함께 임신부터 2세까지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 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씨뿌리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 과정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그 수확물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까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감에 따라 앞으로
보다 큰 규모의 경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대북 개발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농업 및 산림사업 경험이 많은
독일 및 유럽의 NGO 등의 동참,
그리고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현재 남북한 간에는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운용과 경제특구 개발 관련 경험,
금융, 조세 관리, 통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현재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휴전선과
그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DMZ)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 남북한과 UN이 함께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DMZ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철조망과 지뢰를 걷어내고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기존의 대결 패러다임을 바꿔서
DMZ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길을 연다면,
남북한을 포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21세기 실크로드가 될 것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은 비핵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북한에게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개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는 길이며,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저는 곧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통일과정과 통합과정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드레스덴 시민과 학생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왔습니다.
독일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서 위대한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듯이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진전이 동쪽 끝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의 교정에서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된 독일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남북한 청년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공부하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날이 반드시 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날엔 독일과 한반도의 젊은이들, 세계의 젊은이들이
유라시아 열차로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보다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여정에 독일인 친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한 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진정한 친구 독일과 드레스덴 대학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atement by H.E. Yu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25th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March 5, 2014)

Mr.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Security Council. As such, it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N's noble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 as embodied in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UN Charter – We, the peoples of the UN.

In fact, my government has set out “the happiness of the global village” as one of its core foreign policy objectives. We are committed to help shape a world where human dignity and the human rights are respected, and the quality of life is improved for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s a country that experienced the pillage of colonization, the devastation of war, the scars of poverty and repression, and, even today, is suffering as a divided nation, we are in a unique position to empathize with the plights and pains of others.

My country highly regards the UN's efforts in the mainstreaming of human rights, which constitute one of the three core pillars of the United

Nations, alongside peace and security, and development.

We firmly believe that Secretary-General Ban Ki-moon's 5-year action agenda announced in 2012 and the "Rights up Front" initiative launched last year will strengthen the UN's capacity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addition, my government commends the lead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comb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Furthermore, we express our appreciation to the High Commissioner Navi Pillay, who has been a fearless defender of the most vulnerable and an outspoken advocate for strengthening the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Mr. President,

Despite all these efforts, threats against life and liberty as well as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re still prevailing in places such as Syria, South Sudan,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the DPRK. Meanwhile,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continues into this century.

In order to address and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make continued efforts to end the culture of impunity and ensure the accountability.

As for Syria, we are frustrated by the continued degradation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despite the particular attent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hrough its four special sessions since 2011.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reach a consensus toward a political solution to put an end to the worsen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Syria and neighboring countries.

As for the DPR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Last year, this Council

resolved to establish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Human Rights in the DPRK.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the Commission submitted a comprehensive and authentic report with extensive accounts of the victims' vivid testimonies. This report will serve as a landmark report for discussions on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is regard, we express our deep appreciation to the Commission led by Chairman Michael Kirby for its hard work.

The Commission concluded that grav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in the DPRK.

We hope that the DPRK will take substantive measures toward this end, recognizing the Commission's call to improve its human rights situ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now time to begin the discussions on next steps to effectively follow up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 this vein, we strongly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the UN mechanisms to implement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We also look forward to the leading rol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who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establishing the Commission.

Even at this very moment, scores of North Koreans are leaving DPRK in search of freedom. We call on all countries to uphol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nd to grant rightful protection to these refugees and asylum-seekers so that they can live a life of dignity on their free will.

In addition to the need to improve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we are faced with the challenges to address – with great urgency – the humanitarian concerns arising from the continu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spect, we commend the Commission's report for dealing with the serious humanitarian tragedies i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separated families, abductees and the prisoners of war.

Capitalizing on the momentum of the recent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we call upon the DPRK to make efforts to seek durable resolution such as regular exchanges, before it is too late.

Mr. President,

In the aftermath of the horrendous shock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s in Rwanda and the former Yugoslavia in the 199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working hard since then to put an end to the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orged a consensus that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that constitutes a war crime and may also amount to a crime against humanity.

However,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is still being perpetrated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world. Under such circumstances, I cannot agree more with the British State Minister Swire's statement that "all of us,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the UN must work together to shed light on these crimes, to shatter the culture of impunity."

As one of the champions of the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itiative (PSVI), I applaud the UK's leadership in launching the PSVI and hosting the Global Summit in London in June.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more than happy to participate.

The prevalent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even in this century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culture of impunity and the failure in ensuring accountability.

Without repenting the past wrong-doings, a brighter future will not be secured.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draft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the so-called “comfort women,” are the evidence in point. This is not only a bilateral issue between Japan and other victimized countries – including Korea, China, the Netherlands, and various Southeast Asian countries – but also it is a universal human rights issue, an unresolved problem still haunting us today.

This is the reason wh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Madam Radhika Coomaraswamy,
- Special Rapporteur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s, Madam Gay McDougall,
- Human Rights Committee, and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llowed by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 Committee against Torture,

have all rendered a consistent conclusion. That i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cept its governmental responsibility, take responsible measures, and educat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with regard to the “comfort women” issue.

In addition, resolutions on “comfort women” that were adopted in legislature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the Netherlands and the EU all emphasize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resolving this issue.

20 years ago, a Korean victim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d the courage to break the silence and talk about her own indescribable ordeal of victimization. Her courageous action inspired many other victims to come

forth, thus making the untold comfort women into a living human rights issue.

Today, I would like to remind this Council of the brave testimony given by Mrs. Ruff-O'Hearn, a Dutch-Australian lady, a former comfort woman.

In 2007, she testified befor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 quote, "for fifty years, the comfort women maintained silence... I broke my silence and revealed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es of World War II, the forgotten holocaust." Unquote. She concluded, quote, "Japan must come to terms with its history... they must teach the correct history of the mistakes made in the past." Unquote.

Recently, Japanese political leaders are blatantly ignoring such a vivid account and attempting to re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official statement of Chief Cabinet Secretary and Spokesperson through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admitted the involvement and the coercion by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and expressed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Furthermore, just two days ago,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claimed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fabricated story.

This is an added insult to the honor and dignity of those victims who had weather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s in the life-long haunted memories. Such an attitude is an affront to humanity and disregards the historical truth.

In addition, it is a direct challenge to consistent recommendations to Japan made by various UN mechanisms for the last 20 years. Under such circumstances, for Japan to claim that "it is a matter of outrage that there continues to be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imes of armed

conflict even now,” and at the same time to speak of a “wish to bring about a society where women shine” simply shows the double standard on the very issue concerned.

During the last century, we have witnesse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many wars and conflicts including the two world war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is, for countries to admit past wrong-doings, take responsibility for such deeds, and educate the correct history to the future generations.

By doing so, I sincerely hop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sharing common values and interest, will be able to make joint contributions toward a peace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beyond.

Mr. President,

As anchored in the UN Charter, the founding fathers of the UN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and reaffirmed the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Based on this spirit, continuous efforts have been placed to promote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ross the world since the inception of the United Nations. This is the right path into the future.

However, we have to recognize the daunting challenge ahead of us on this journey. This is why the Human Rights Council must play a central role, to ensure the success for mainstreaming human rights in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be an important partn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noble endeavor.

Thank you very much.

계간 **외교** 제109호

값 10,000원

발행 2014년 4월
발행인 정태익
편집인 이원영
발행소 (사)한국외교협회
인쇄소 (주)마스타상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3
Tel. 02-585-6475(편집실) Fax. 02-585-6204
E-mail. editorial@kcf.or.kr <http://www.kcf.or.kr>

▪ 『외교』제 109호 편집은 정태익 협회장, 이원영 편집위원장, 강근택, 문병록, 사부성, 유석렬, 이서항, 이선진, 황용식 편집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및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등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외교』지의 발전을 위해 독자 여러분의 찬조금(10,000원)을 환영합니다.
입금계좌 : 792-201122-01-004 (우리은행), 한국외교협회